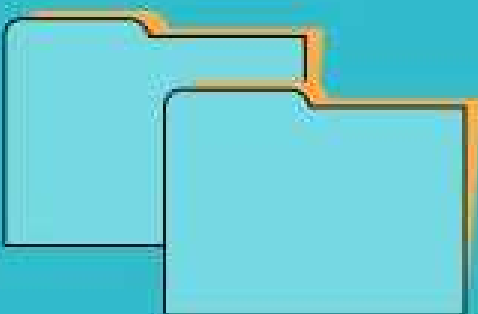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지역언론 표아보기



차 례

1월	01
1주 틀니 시술이 성평등 사업?	
2월	03
1주(1) 부산지역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현황 감시한 부산일보	
1주(2)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부산시 연결한 국제신문 020 보도	
2주 의료종사자 중 중국인 간병인만 문제라는 부산일보	
3주 국가적 재난 상황, 불필요한 공포 줄이고 해법에 주목해야	
3월	13
1주 ‘코로나19도 못 막은 분양 열기’라고? 이것은 광고인가 기사인가	
4월	16
4주(1) 오거돈 시장 사퇴, 지역방송은 어떻게 보도했나	
4주(2) 오거돈 시장 사퇴, 부산일보 온라인판 제목 부적절했다	
4주(3) 총선 끝나자마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여론 불 지피는 지역신문	
4주(4) 반려된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 등장	
4주(5)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 챙겨 본 국제신문	
4주(6) 양산 사송신도시 건설현장 환경훼손 고발한 KNN	
5주 피해자 호소와 배반되는 보도를 쏟아내는 부산일보,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 하지 마라	
5월	34
2주 100년 간 인구 흐름 3D기법으로 보여준 KNN뉴스아이	
3주(1) 명품 브랜드 ‘값질’ 비판과 함께 시즌 오프 할인 행사 홍보한 부산일보 1면 머리기사	
3주(2) 5·18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의 역사 조명한 KBS부산<뉴스9>	
4주 기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다양한 독자 목소리 반영할 수 있을까	
6월	42
1주 사퇴 기자회견 이후 경찰 출석까지 언론은 무얼 좇았고 무얼 놓쳤나	
2주(1) 구군 공무원들의 시청 농성, ‘일 떠넘기기’로만 보도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2주(2) 창녕 아동 학대 사건 리포트, 자극적 요소 더욱 부각한 연출 과도했다	
2주(3)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예타 통과, 집값 상승 부추기는 기사 꼭 필요했나	

7월 53

- 1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 노동자 김진숙 복직 투쟁, 지역언론 관심 저조
- 5주(1) 큰 비 피해 이후, 또 호우 주의보 부산지역 방송3사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 5주(2) 부산MBC 부산 체육계 실태 연속보도 만연한 폭력과 비리 구조적 문제 알려

8월 62

- 1주(1) 내년 보선 출마예정자 SNS 활동 소개하면서 특정 정치인 유독 부각한 부산일보
- 1주(2)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 계기 마련한 국제신문
- 1주(3) 레바논 항구폭발 사고 타산지석 삼은 부산일보·부산MBC
- 2주(1) 자사 사장 출신 국회의원 정책투어 소식 유일하게 보도한 부산일보
- 2주(2) 사송신도시 공사 강행, 해수부 안일 대응 꼬집은 KNN <뉴스아이>
- 2주(3) 동래구청 발굴유적 진척 짚어본 KBS부산 <뉴스9>
- 2주(4)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중간보고서 발표, 희소식으로만 보도할 일이었나
- 3주(1) 광복절 기념사가 매 맞을 일인가 정치인 발언 나열로 정쟁 부각한 지역언론
- 3주(2) 폭염에 취약계층과 노동자 작업환경 돌아본 지역방송
- 3주(3) 주민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 고발한 KNN
- 4주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가 핵심 문제라면 지역언론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보자

9월 84

- 1주 연이은 폭우와 태풍에 지역언론은 ‘원전’ ‘빌딩풍’ 주목했다
- 2주(1) ‘엘시티’ 성공 자신감이라고? 국제신문의 도 넘은 ‘포스코건설’ 띄우기
- 2주(2) 정치 권력 감시 등한시하면서 긍정 행보 부각한 지역언론
- 2주(3) 지역언론은 왜 부산시 허술한 행정 묻기보다 입장 대변했나

10월 98

- 1주 우려가 현실로...자사 참여사업 호평 일색으로 부각한 부산MBC
- 3주 ‘미 8부두 세균실험실’문제 국감서 나와도 지역언론 관심 적었다
- 4주(1) 41주년 맞은 부마민주항쟁, 지역언론 무엇에 주목했나
- 4주(2) 인공서핑장 발미로 해상케이블카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힘 신나
- 5주 KNN, EBS 등 보험 영업 목적 프로그램 협찬 받아 방송

11월 112

- 1주(1) 형제복지원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확산력 더한 <부산일보>
- 1주(2) 해운대 바닷가에 또 고층 개발? 주목 않는 지역언론...계획부터 따져본 KBS부산
- 2주 부산 시민 주거 안정 흔들리는데 치솟는 부동산 가격만 강조하는 지역언론
- 3주 부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패싱’하는 지역언론...

12월 123

- 2주(1) KBS부산 보도에 압력 행사한 성명서를 전면광고로 게재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 2주(2) 김진숙 지도위원 마지막 복직 투쟁, 전국지보다 공론화에 소극적인 지역신문
- 3주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정치권 재추진에 힘쓰는 언론
- 4주(1) '해고 노동자 복직'위해 달린 '리멤버 희망버스' 교통체증과 시민불안에 주목한 부산일보
- 4주(2) 전봉민 의원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지역언론 관심 보궐선거 쟁법에만 머물러선 안 돼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138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139

- 솔루션 저널리즘 무엇인지 보여준 KBS부산 성 인지 예산 점검 연속 보도
-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극단적인 경쟁체제와 고용 불안정성 드러낸 부산MBC 빅벙커
- 부산지역 자영업자 요구 파악해 시 차원의 정책 필요성 제기한 국제신문 신년기획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144

- 5·18 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 조명한 KBS부산 <뉴스9>
- 예산 추적에서 출발해 노동자의 삶의 질 주목한 부산MBC <빅벙커>
- 부산 '먹는 물' 문제 꾸준히 추적 보도한 국제신문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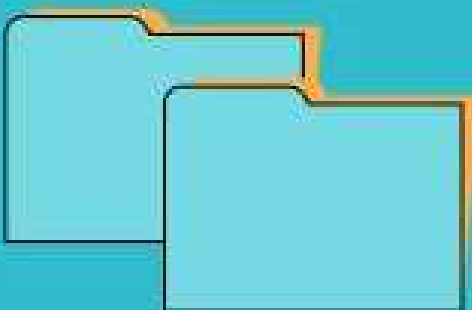
- 역학조사관에서 공공의료원까지 폭넓게 짚어본 <KBS부산>
-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지상파 편성권 한계 극복한 <부산MBC>
- 집중 호우 당시 원전 침수 사실 드러낸 <부산일보>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158

- 부산지역 주거빈곤 아동 5만 명에 주목한 국제신문 최저주거기준을 말하다
- 낙동강의 1987년, 2012년 그리고 2020년 조명한 KNN
- 4대강 사업의 지역성과 현재성 조명을 통해 지금 우리의 문제임을 말한 <빅벙커>

1월

표아보기



틀니 시술이 성평등 사업?

KBS부산은 어제 1조 원이 넘는 부산시 성인지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성인지예산 사업 610개를 전수 분석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별 격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틀니 시술, 어린이 숲 체험, 해수욕장 시설 정비와 같은 사업들이 성인지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성인지예산으로 구분한 건 그동안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던 거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것도 저것도 성인지예산이라고 밀어넣다보니 그 규모가 1조 원이 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별도로 마련한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이란 게 의도치 않게 성불평등을 심화할 수도 있으니 정책효과를 사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집행하자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면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는 성인지예산 활동을 공무원 뿐 아니라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가, 의회, 언론 등 성인지적 정책형성 관점과 능력을 가진 다양한 참여자가 파트너십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부산시의회에서는 젠더자문관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마련한 성인지예산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착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체계를 마련했는지 짚어보는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KBS부산 보도에 따르면 늦었지만 올해부터 부산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구,군은 여전히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젠더 관점으로 들여다 본 KBS부산의 보도가 반갑습니다.

2월

표아보기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개선 부산 민간기업은 여전히 인색

2017년 고용 의무 안 지켜던 3곳
1년새 고용 적극 나서 공표대상 제외

한국거래소 등 민간기업은 의무 위반
부산, 특·광역시 중 취업률 꼴찌

속보=2018년 12월 현재 기준 부산의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지마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한국거래소(부산일보 3월 11면 보도) 등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월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에 따르면, 부산의 공공기관 중 2018년 12월 현재 기준 장애인 고용률(공표 기준) 2.56%에 미달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외부고용률 80% 이하)과 민간기업(50% 이하)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기업·공공기관은 근로자 중 3.4%, 민간기업은 3.1%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앞서 전년도의인 2017년 12월, 당시 장애인 고용률 3.2%(공표 1.92%이하)를 달성하지 못한 부산 내 공공기관은 부산시교육청(1.84%), 한국해상과학기술원(1.14%),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0%) 등 3곳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표 후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8년 말에는 공표 기준인 2.56%를 넘겨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거래소 등 부산 민간기업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공표된 부산 내 민간기업은 18곳에 달했다. 민간기업은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때만 공표된다.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달성

사업체명	장애인 고용률	사업체명	장애인 고용률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0	(주)BK메트로부산	0.84
(주)남양진디에이비즈	0.30	(주)BK계미달	0.86
(주)경원공업	0.47	(주)노노공업	0.88
(주)피피테크	0.50	(주)대우건설	0.93
(주)대우건설	0.84	(주)대우건설	1.01
(주)대우건설	0.89	(주)대우건설	1.04
한국거래소	0.71	(주)대우건설	1.08
한국거래소	0.74	(주)대우건설	1.16
(주)대우건설	0.82	(주)대우건설	1.30

*특·광역시 중 취업률 꼴찌 (단위 %)
*속보: 고용노동부 2018년 12월 기준

하지 못한 곳은 배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에는 4년 연속 외부고용률을 맡은 한국거래소(0.71%)를 포함해 BNK캐피탈(0.86%), 하이투자증권(1.08%)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곳)과 건설업(4곳)이 많았다. 특히, 부경대산학협력단의 경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 의무를 내뱉겠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탓에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장애인 취업률이 가장 낮다는 오명을 뒤집어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부산지역 장애인 취업률은 29.1%에 불과했다. 장애인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37.1%)였으며 스텡(35.2%) △인턴(34.4%) △대형(33.1%) △서비스(31.3%) △유통(31%)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처럼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용민 관장은 "부산에서 근로 의사를 밝힌 장애인은 2만여 명이지만, 부산시 장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약 1300명뿐"이라며 "공공에서 장애인 고용 제도와 관련해 더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을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해 기자 sambae@)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된 지 10년.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체 중 장애인을 단 1명도 두지 않은 곳이 19.3%에 달해 의무고용제도를 무색케하고 있다. (생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사무소 관할 부산 울산, 양산시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178개사 가운데 (주)웅진개발, 제일투자신탁증권 등 20개사(11/2%)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었다.”

부산일보의 2001년 기사
<‘장애인 의무고용 안한다’ 대상 기업체 중 19.3%나>
일부 발췌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4곳 가운데 3곳 이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 GS, 현대, 대우건설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못미쳤고,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 중 엘오케이와 유니토스는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일보의 2013년 기사
<대기업 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2.5%)’ 안 지킨다>
일부 발췌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로 꼭 30년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1990년대의 기사와 2020년 기사 사이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형태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의 차이만 눈에 띕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양적 증가, 의무고용률 달성 여부 물론 꼭 필요한 보도입니다만, 숫자 이면에 존재하는 장애인 노동 현실 조망도 절실합니다. 법으로 강제한 고용 속에서 노동의 지속성이 보장되는지, ILO에서 제시한 ‘괜찮은 일자리’에서 장애인이 노동하고 있는지,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환경에서 차별은 없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의 보도를 기다립니다. 나아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장애인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부산시 연결한, 국제신문 O2O 보도

국제신문의 신년 기획 기사 [2020, O2O로 따뜻하게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의 시선에서 온라인 마켓 진입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나아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솔루션으로 제시해 부산시가 대책을 강구하게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오픈마켓을 만들고 키워야 한다는 국제신문 기획기사는 지역 경제가 힘들다는 현상만 반복 전달하는 기사들 속에서 돋보였습니다.



기사는 부산의 대표음식인 돼지국밥 조차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없는 부산지역 전자상거래 현황을 짚으며 실제로 전자상거래 매출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부산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신문의 취재결과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도 오픈마켓이 기획의 공간이라는 걸 모르는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진입 절차와 부담스러운 수수료 탓에 이들에게 오픈마켓은 또 하나의 커다란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쇼핑 매출 수도권 쏠림 심각... 부산 오픈마켓 지원 시급

2020, O2O로 따뜻하게

한은 전자상거래 지역 영향 분석
서울·경기·인천 비중 90% 이상
부산 2.3% 지역 소매업 타격
부산 e소매 판매율 1%P 하락
전국 소매업은 0.19% P 상하

전자상거래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매출 비중은 수도권 90%, 부산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전무한 오픈마켓 지원 정책(국세신문 지난달 16일 자 16면 보도

지역별 동년동반매출비율(2017년 기준)

도시	매출액	동년동반매출비율
서울	67.7	55.7
경기	20.7	23.4
인천	2.1	3.4
부산	2.3	3.9
대구	2.0	3.7
광주	0.8	1.3
대전	1.1	1.8
울산	0.1	0.2

동)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이 한국은행의 경제조사로도 다시 입증된다. 이대로 오픈마켓을 방치하면 전자상거래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은 더욱 가속돼 지역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부산시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30일 내놓은 '온라인쇼핑 성장에 지역 소상공인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오픈마켓 플랫폼 기업 e소매 등 동년동반매출의 전국 매출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67.7%)·경기(20.7%)·인천(2.1%) 동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90.6%에 달했다. 부산은 겨우 2.3%에 그쳤다. 서울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18.7%인 점을 고려할 때 동년동반매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

핀마켓 등을 활용한 동년동반매출 매출 수도권에 몰리던 지역 오프라인 소매업의 매출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

실제로 이번 보고서를 보면 전국 온라인소매 판매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지역 소매업 매출은 0.1%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하락 폭은 0.12% 포인트로 수도권(0.06%)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지역 소매업 판매율 하락 폭은 0.19% 포인트로 비수도권보다 훨씬 더 컸다.
부산의 소매업 판매 하락 폭이 타격 큰 것은 약한 부산의 소득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

팀 장수과장은 "소득 수준이 높으면 제품 직접 구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산지역의 소득 수준이 전국보다 높지 않기에 낮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소비 행태가 많고 이는 지역 소매업 판매 하락 폭을 넓히는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기반이 없다는 점은 고용에도 타격을 입힌다. 소매업 종사자 감소 대비, 동년동반매출 증가 비율은 수도권에 400%에 이르지만 부산은 100%에 불과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전국 소매업 종사자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데, 수도권은 감소 인력만큼 동년동반매출 증가가 수반된다. 하지만 부산

지역은 동년동반매출이 없어 그대로 고용 감소에 반영돼 버리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부산본부는 오픈마켓 지원 정책 등이 부산에 전무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기획 경제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총괄 담당인 정 과장은 "부산시가 오픈마켓 지원에 마려고 다들 온라인 전자상거래 보급을 위해 대형 쇼핑몰의 플랫폼도 도입했지만, 산신식품 공급 등 지역별 특색 있는 온라인 판매 정책을 수립해 수도권 업체와의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기자 hongdam@hooke.co.kr

많은데 그렇다면 부산시(지자체)가 지역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기사였습니다.

의료종사자 중 중국인 간병인만 문제라는 부산일보

춘절 연휴 후 돌아온 中 간병인 숫자조차 파악 못 하는 부산시

부산시, 감염 의심자 업무배제 공문 강제성 없는 권고 불과 실효 없어 부산대·동아대병원 등은 전수조사 개강 앞두고 中 유학생 대거 입학 7개대 개강 연기, 나머지 대학 고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 이후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부산시는 중국인 간병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중국을 여행하거나 다녀온 간병인 중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14일간 업무를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병원이나 복지·요양 시설 등에 일하는 중국인 간병인은 특별히 모니터링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이를 어겨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감염병 관리의 가장 기본인 통제조치 없어, 방역 체계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개인 환자가 이를 어기고 중국인 간병인을 고용하려던데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가 관리 감독하는 인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상 이를 확인할 인력은 따로 없다. 하지만 중국인 간병인을 쓴다면 환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대·동아대병원, 부산의료원 등은 최근 계약을 맺고 있는 간병인 업체에 중국인 간병인 고용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각 병원들은 간병인 업체에 중국을 다녀온 간병인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지난 신종 코로나 발생 초기에 초기에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에 근로자 명단을 모두 요구했고, 현재 중국인 간병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3월 대학 개강에 맞춰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별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의 입국 모습. 부산대 입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일 부산대, 부경대에 이어 6일 경성대, 동아대, 부산외대, 신라대, 인제대도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2주라는 기간은 적던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대학들은 이를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개강 연기를 권고 했지만 세부지침은 내려온 게 없고 학적 처리에 있어 복잡한 부분이 많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면서 "홍·백학 시 등학금 반환 문제나, 장학금을 늦출 때 학생들이 해외 연수 등에 차질을 빚는 일, 실습의 경우 원격 수업이 불가능한 점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5일 교육부가 중국을 경유한 유학생의 3단계 관리를 권고한 만큼, 대학들도 더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경대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중국을 방문·경유한 모든 학생은 외부와 차단이 가능한 학내 학생생활관 1동에서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분리 거주하도록 했다. 분리 거주 기간에는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고 식사는 도시락을 제공하며 보건진료소 간호사가 1일 2회 방열검사를 실시한다. 부산대도 중국에서 개강을 위해 입국하는 유학생 150여 명을 기숙사 한 동을 비워 수용할 예정이며 14일간 격리 조치 후 증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학교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이현창·김성현 기자 ksh@b

지난 2월 7일 부산일보의 <춘절 연휴 후 돌아온 中 간병인 숫자조차 파악 못 하는 부산시>는 지역 언론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기사 중 ‘중국인 간병인’에 초점을 맞춘 유일한 보도였는데 요. 해당 기사는 부산시가 ‘중국을 다녀온 간병인 중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업무를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내긴 했으나 강제성이 없다는 점과 개인 환자가 중국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방역 체계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기사에는 두 개의 인터뷰가 등장합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이를 확인할 인력은 따로 없다. 하지만 중국인 간병인을 쓴다면 환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국내 신종 코로나 발생 초기에 (초기에)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에 근로자 명단을 모두 요구했고, 현재 중국인 간병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병원 관계자 인터뷰)

부산시 공문의 ‘중국을 여행하거나 다녀온 간병인’이라는 말과 부산일보 기사의 ‘중국인 간병인’이라는 말은 명백히 다릅니다. 감염 예방이 기사의 목적이었다면 ‘중국인 간병인’이 아닌 ‘중국을 여행하거나 다녀온 간병인’ 파악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 간병인과 중국을 다녀오지 않은 중국인 간병인 중 감염 확률이 더 높은 건 중국을 다녀온 쪽일테니까요. 부산일보의 기사를 외국인 노동자인 ‘중국인 간병인’에 대한 혐오조장성 보도로 본 이유입니다. 기사를 통해 우리는 실재하지 않는 중국인 간병인에 대한 환자들의 반발과 병원의 중국인 간병인 고용 자제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부산일보는 2월 17일 후속보도를 냈습니다. 부산지역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병인의 국적과 중국 방문 여부를 조사한 부산시 결과를 전달했는데요.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내 중국을 다녀온 중국인 간병인은 1명, 한국인 간병인은 2명,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제 3국의 간병인은 0명이라고 합니다. 실제 부산시의 조사로 중국을 다녀온 중국인 간병인 보다 중국을 다녀온 한

국인 간병인의 숫자가 더 많음이 드러난 것인데요. 하지만 기사는 실제 중국인 간병인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조사였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치료사, 기술자 등 병원에는 다양한 직업군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간병인도 다양한 직업군 중 하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기사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종사하는 간병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은 건 부산일보 기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28일엔 '50대 중국인 여성 간병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3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가 병원에 근무”](#) 가짜뉴스 유포 30대 조사 가짜뉴스 유포자가 조사를 받았다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요양병원협회에는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인에 대한 보건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중국인 간병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시기에 의료인 관련 지침을 점검하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해 시민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부산시가 중국인 간병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간병인을 국적별로 조사하고 병원이 중국인 간병인 고용 자제를 공문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분명 차별입니다. 기사는 간병인이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가 아닌 병원 내 의료종사자들의 감염예방 수칙이 어떻게 마련돼 있으며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주목했어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편승한 기사가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불필요한 공포 줄이고 해법에 주목해야

부산에서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2/21) 지역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와 동선 정보가 쏟아집니다. 생활 공간 대부분이 잠시 정지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지역언론의 역할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재난 보도 준칙은 언론의 재난 보도가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선정적인 용어,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는 시민들의 공포와 절망감을 재생산하는 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첫 확진 발생 이전부터 공포 부추긴 지역언론

재난은 크게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자연 재난(태풍, 지진, 홍수 등)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화재, 대형사고, 질병 등)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예측과 통제가 힘들지만 사회적 재난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범위와 크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재난이 대표적입니다. 생소한 신종 감염병은 정확한 행동요령과 정보 전달로 피해의 크기를 다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재난 시 언론의 보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21일 저녁 7시 경)하기 이전, 지역 언론 보도(조간발행인 지역신문의 경우 21일까지, 저녁메인뉴스 기준인 지역방송의 경우 20일까지)는 예방이나 행동요령 전달 보다는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데 치중한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상황의 많은 면면 중 불확실한 면만 강조해 시민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을 확대했습니다.

<2/17부터 2/20,21까지 기사 중 상황 해석에 초점 맞춘 헤드라인>

<29번 환자 감염경로 확인 안돼...**지역사회 전파 우려**>(국제신문, 2/17, 6면), <6일만에 추가 환자...**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긴장**>(부산일보, 2/17, 4면), <첫 응급실 폐쇄...**지역 전파 우려 ‘긴장’**>(KBS부산, 2/17), <29번 환자 아내도 확진...**감시망 밖 감염 ‘초긴장’**>(국제신문, 2/18, 4면), <29·30번 부부 ‘경로 불명’...**지역사회 감염 현실화?**>(부산일보, 2/18, 8면), <대구도 **뚫렸다**...영남권 첫 확진자에 **‘슬명’**>(국제신문, 2/19, 4면), <부산 **코앞까지 닥친 ‘코로나19’**>(부산일보, 2/19, 1면), <코로나19 영남권 지역전파 우려...**부산도 ‘비상’**>(부산MBC, 2/19), <코로나19 대구 확진 급증, 지역 전파 **초비상**>(KNN, 2/19), <TK 하루 118명 확진 **‘코로나 패닉’**...PK도 긴장>(국제신문, 2/20, 1면), <대학병원 응급실 3곳 폐쇄, 부산·경남 **‘초비상’**>(부산일보, 2/20, 1면), <코로나19, **PK 턱밑까지 초비상**>(KNN, 2/20), <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국제신문, 2/21, 1면), <100명 넘는 확진에 사망자 발생...**방역망 무너졌다**>(부산일보, 2/21, 1면)

첫 확진자 발생 후 공포 부각 더욱 뚜렷해져

부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21일(금) 이후 월요일인 24일, 지역언론은 부산일보 <“나도 확진자 옆에 있었을까” 공포의 부울경>(1면), 국제신문 <부울경 32명 확진…온천교회 ‘슈퍼전파지’ 되나>(1면), KBS부산 <“확진자 38명으로 늘어”…이 시각 부산의료원>(1번째), 부산MBC <부산 확진자 22명 추가…총 38명>(1번째), KNN은 <아시아드 요양병원 290명 ‘코호트 격리’>(1번째)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부산의료원, 아시아드병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와 현장연결을 통한 상황전달에 충실한 보도를 보여줬고 국제신문은 부산, 경남의 확진현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주로 확진현황, 확진자의 동선, 확진자가 발생한 집단 등에 초점을 맞춘 상황 전달 보도였습니다.

반면 부산일보 <“나도 확진자 옆에 있었을까” 공포의 부울경>(2/24, 1면) 기사는 정보 보다는 지역사회 분위기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춘 보도였습니다. “나도 확진자 옆에 있었을까”라는 헤드라인은 수시로 확진자의 정보와 동선을 파악해 불안감을 덜고자하는 시민들의 심리를 드러냅니다. 여기에 ‘지역사회는 얼어붙었다’, ‘심리적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위축됐다’라는 해석을 더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재생산하고만 있을 뿐, 실제로 확진자 옆에 있었을 경우 행동 요령이나 확진자 동선의 방역여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칫 지역 내 확산이 계속될 경우 부산의 음압병상이나 의료진 등의 부족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누적된 시민 불안감이 극단적으로 펼쳐지고, 지역 경제가 더 크게 위축되면서 부산 지역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라며 실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은 길고 자세하게 심지어 닥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예언(?)도 한 반면,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는 단 두 문장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날 기사는 아니지만 국제신문 <국회 폐쇄·재판중단…마비된 대한민국>(2/25, 1면) 기사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멈췄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법원 휴정’, ‘국회 폐쇄’, ‘경매 중단’ 등으로 분명 기존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국제신문은 기존과는 다른 상황을 “국가 마비 상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라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떠올려볼 때, 이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적 대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가 마비’라는 과도한 용어 사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일보, 2/24,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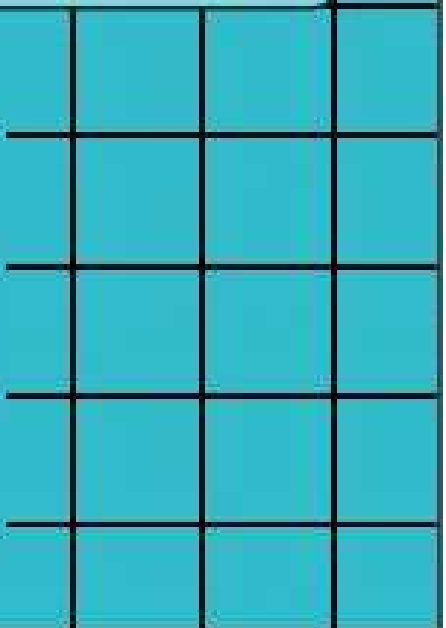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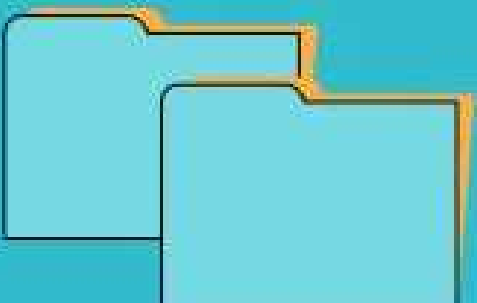
국제신문, 2/25, 1면

공포 아닌 대책 제시해야

부산MBC <일터 ‘대혼란’…부산시 “알아서 하라”>(2/25)는 확진자의 동선 중 직장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짚은 좋은 기사입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다른 사무실 폐쇄여부, 직장 동료 자가 격리 여부, 사무실 방역여부 등 확진자가 직장인일 경우 관련 대응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체판단에만 맡겨놓고 있다고 기자는 지적합니다.

또 모니터 기간은 아니지만 KNN <감염대비 음압구급차 이용실적 없어>(2/9)는 일반 구급차보다 3배 비싼 음압구급차를 구입해 놓고도 도내 의심환자 운송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고 정부와 병원 사이 사전 협의가 없었던 탓에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KNN의 지적 이후 경남도는 음압차 2대를 경남소방서로 편입시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변화까지 이끌어낸 좋은 보도입니다.

이번 토크아보기에서 언급한 보도들은 주로 신문 1면에 배치 돼 있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포를 부추기고 시민들의 불안을 강조한 기사가 주로 신문 1면에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지금은 지역 언론이 막연한 공포감은 줄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도 못 막은 분양 열기'라고? 이것은 광고인가 기사인가

국제신문 2020년 3월 2일 월요일 부동산 17

코로나19도 못 막은 분양 열기... 내달 공급 '동래효산벨뷰' 흥행 예감

'대연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좋은 입지·중소형 평수로 인기

'포레나 익철' 사이버전본주택
VR 앞세워 약재 돌파 눈길

도시철도3호선 미남역 초역세권
'동래효산벨뷰' 실수요자 관심 ↑

코로나19 사태에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간헐하고 있다. 부산 등 타지역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강화해나간다고 밝혔지만, 부산은 여전히 바쿠제자이다. 더욱이 지난해 후수동(해운대수영·동래구)의 부동산 행이도중대도시가 해에 효과에 따른 집값 급등 파도감으로 상승세가 주춤해진 신규 분양시장만큼은 뜨겁다.

최근 분양된 '대연삼정 그린코아더베스트'는 코로나-19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부산이 규제로 묶여 있던 시기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일 정도로 부자재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남구 대연동이다. 좋은 입지와 함께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중소형 평형, 전 세대 4베이 설계 등의 장점이 맞물려 흥행에 성공했다. 해당 단지는 71㎡ 115세대와 89㎡ 222세대 등 총 337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570만 원이다.

현행건설이 이달 복구역(한-1구)에 주택건축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포레나 부산 익철'은 약재를 넣기 위해 사이버전 본주택을 앞세웠다. 사이버전본주택은 주택형별 VR(가상현실) 촬영 화면을 제공하며, 입자단지 배치 등 상세 정보를

코로나19 사태에도 힘을 맞춘 부산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군다. 코로나-19의 정부 규제 여파에도 각 건설사는 이번 봄 부산을 기점으로 대규모 신규 분양에 박차를 가한다. 브랜드를 앞세운 1군 건설사는 사이버전본주택으로 위기를 넘겼다.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지역 건설사는 여세권 입지와 고급 자재, 실용적인 실내공간 등 틈새 전략으로 실수요자를 겨냥한다. 신규 입주 물량도 4000여 세대에 달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따른 눈치 보기와 정부 규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시장이 잠시 주춤했지만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분양 시장과 신규 입주 아파트가 속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한다.

■비규제지역 중 대표 인기 지역

포화됐다. 이 단지는 지역 2중-2상 최고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36가구 규모다. 부산도시설도 3호선속 동래대 기차고, 익철초, 익철중, 남동고 등 초·중·고교도 들어서 풍부하다.

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강자인 효산건설도 다음 달 초 인기 지역인 동래구 언현동 부산도시설도 3호선 미남역 1번 출구 바로 앞 초역세권 아파트인 '동래효산벨뷰'를 선보인다. 동래효산벨뷰는 아파트 64㎡A 12세대, 64㎡B 1세대, 67㎡ 38세대, 68㎡ 19세대의 총 70세대, 아파트 84㎡ 6세대 등 총 76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우수한 교육 여건과 교통 등 좋은 입지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동래효산벨뷰는 전 세대 4베이 설계와 무상 파킹행 받고, 환경친화적 자재, 감각적인 실내설계 등 도장원호를 앞세웠다. 전본주택은 동래효산벨뷰 2층에 있으며, 오는 20일 이후에 약 1만 5천여 명이 가능하다.

■5월까지 4293세대 입주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부산에는 새 아파트 4293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이번 달 부산에서는 올 봄 부산 입주 아파트 중 최대 규모인 초음속 연지 광대(1113세대)이 새 주인을 맞는다. 부산진구 범천동 시면 6차 분영투입시설도 266세대가 입주한다. 4월에는 기장군 일광지구 B2블록 비스타 동원1차(701세대)와 B13블록 이지더원 1차(653세대)가 입주한다. 서구 동래동 3가 브라운스톤 하이포드(554세대)도 있다. 5월에는 해운대구 재송동 행림정일스카이뷰(208세대)과 부산진구 연지동 보헤미안 디어(141세대) 등이 있다.



부산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강자인 효산건설이 다음 달 초 동래구 언현동에 분양하는 '동래효산벨뷰' 무사도.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우수한 교육 여건과 교통 등 좋은 입지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효산건설 제공

지역 신문의 부동산 면에도 '코로나19'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도 못 막은 분양 열기', '코로나 여파에도 발길 잇는'이라며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데 '코로나19'가 사용됐습니다. 부산 일보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극도로 꺼리지만 올해 첫 부산 분양 현장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행렬이 이어졌다."(2/26, 17면), "'코로나19' 사태 여파에도 부산 분양시장의 온기가 식지 않고 있다"(3/4, 17면)로, 국제신문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봄을 맞춘 부산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3/2, 17면)고 기술했습니다. 두 신문사는 아파트 분양 홍보성 내용과 함께 '대연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시행사 (주)위드워킹이 제공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 흔히들 보셨을 텐데요. 이런 유형의 기사는 기사 끝에 기자 이름(바이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광고를 기사로 혼동하게 한다하여 기사형광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보도행태지요.

부산민언련과 KBS부산이 공동기획한 언론비평 프로그램이 4월 첫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기사

인가 광고인가>라는 주제로 위와 같은 문제를 퉠아볼 예정입니다.

부산일보
부동산
2020년 9월 4일 수요일 제23179호 15

'조정 해제' 후 뜨거워진 해운대, 분양시장도 흥행 예고

쌍용 더 플레티늄 해운대

지난해 11월 이후 부산 집값 상승 1위 '내집 마련' 실수요자-투자자 관심 집중

모든 평형 84㎡에 171가구 분양
학교-교통-생활 인프라 3박자 다 갖춰
미세먼지 측정·보안 강화 시스템 가동
LED조명-무선 택배 등 주민 편의 높여

주요지역별 이후 부산 아파트 매매기 변동률		
해운대	2.81%	급상 0.02%
수영	2.69%	급상 0%
동래	1.52%	기상 -0.01%
연제	1.22%	증 -0.04%
남	1.02%	사상 -0.09%
동	0.13%	평 -0.11%
서	0.08%	양도 -0.19%
부산전	0.92%	사하 -0.42%
부산 전체 0.75%		

*2019년 1월~2020년 8월 기준 #자료제공처:부동산



쌍용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송동 해운대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짓는 쌍용 더 플레티늄 해운대 위 광역 초입도(왼쪽)와 건물주채 내부 모습.





쌍용건설 제공

『코로나19』 사태 여파에도 부산 분양시장의 온기가 식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해수동'이 조영지역에서 '해운대'에서 '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쏟아져 나온 수도권 분양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 1위 해운대
3월 KCI주거가동량 자료 분석에 따르면 부산 전체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운대 지역은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81% 올랐다. 같은 기간 부산지역 전체 시세가 0.7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게 뛰었다. 뒤를 이어 수영구 2.69%, 동래구 1.52%의 상승률을 보였. 조정지역 해제 지역 위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가 예상 같은 기간 해운대구가 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서구(0.25%), 남구와 동래구(0.05%), 수영구(0.05%)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그럼 여기서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를 기록했다. 0.14%였던 전월과 비교하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완만세가 확인되면서 상승세가 다소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2월에도 0.37% 상승하며, 수영구(0.25%)와 함께 부산의 아파트값 상승 기조를 견고히 방어하는 장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조정 대상지역에서 해운대 지역을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아파트를 나타내고 있다"며 "지역과 내용 중적인 영향력이 때문에 부산에서 내집 마련에 도전하는 실수요자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분담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학교·교통·생활 인프라를 높인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불확실한 속에서도 부산의 분양시장은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초등학교를 비롯해 불모지 시정면(노포동), 불모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주택 복합 단지 '더 플래티늄(The Platinum)' 적용 단지를 선보인다. 쌍용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09-8 일원에 들어서서 '쌍용 더 플레티늄 해운대'를 이달 중 공급한다. '쌍용 더 플레티늄 해운대'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층으로 아파트 152가구(84㎡), 오피스텔 197가구(84㎡) 등 총 171가구가 분양된다.

이 단지는 전통적인 부산의 선호 주거지인 해운대 일대이다. 학교, 교통, 생활 인프라 등을 고루 갖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등(초중학교) 불모지 아파트'라는 말처럼 자치구의 안전동에서 가까운 아파트이다. 선형의 주요 기차역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단지는 해운대 초중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또 모든 평형이 실수요자층에 특인기가 높은 전방위적 수요를 구할 수 있다. 3·0·1세대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리한 교통도 장점이다. 중등과 해운대역을 광역이 이용할 수 있는 '더플 에셋'에 위치해 있다. 도시고속도로와 부산광역시고속도로의 접근도 우수하다.

언급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해운대초등학교와 선암사당, 마린시티가 인접해 있어 백화점, 영화관 등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1월 입주한 시그니 해운대 광명리조트 열사대를 비롯해 고급 주거상권이 인근에 속속 들어서며 경이 시 생활 인프라까지도 높아가는 편이다.

■방단 관리 시스템으로 입주한 편의 도모
'쌍용 더 플레티늄 해운대'는 입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단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우선 초창기 입주자를 위한 미세먼지 측정 및 보안 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상청 공문 내역이나 날씨 단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기,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보여주는 미세먼지 신호등, 외출 시 환풍 및 공기청정기를 자동으로 관리해 스마트홈을 완성해 주는 스마트 키가 들어, 기존 출근전 스마트 시스템에 생체정보를 이용한 스마트 잠금시스템 스위치 등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에너지 절약에 위해 세대는 물론 공용부까지 단지 전체 LED 등기구 설치, 스마트폰 미터링 기능을 추가한 14인치 HD 화질의 스마트 수상TV, 원형과 대기전력, 난방용 해수의 스위치에 중앙제 제어하는 스마트 일체형 스위치, 스마트 키를 갖고 있으면 공용현관까지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안전한 화재와 세균 배양을 위한 자인 태백·세라믹식, 항소와 관개에 스마트온도·PC로 다양한 도구를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 도서관 등도 입주민 편의를 보인다.

방문객을 관계자는 "이 단지는 해운대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을 제공하는 학부모들에게 편의의 단점과 '해운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주변 환경과 함께 단점이 없지 않지만, 이 단지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젊은 층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두구 기자 webmaster@busan.com

코로나 여파에도 발길 잇는 '대연삼정' 분양 현장

**사흘간 1만 7000명 다녀가
27-28일 일만 1·2순위 청약**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극도로 꺼리지만 올해 첫 부산 분양 현장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행렬이 이어졌다.

25일 '부동산' '대연삼정' '대연삼정' 시

행사 (주)위드워킹에 따르면 지난 21일 남구 대연동에 오픈한 이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첫날 3500명을 비롯해 주말을 낀 사흘간 1만 7000명이 다녀갔다.

부산 지역 봄 분양시장의 개막을 알린 이 단지는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지난 21일 부산 남구 대연동에 문을 연 '대연삼정' '대연삼정'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 위드워킹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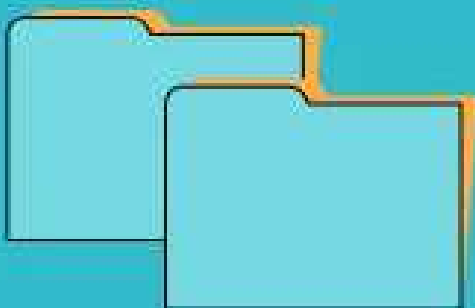
도면 선했다"고 평가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침체도 최근 2·3년 간 적체된 수요와 대표적인 선호 주거지로 꼽히는 남구 대연동 입지, 그간 공급이 부족했던 중수형 평형, 전 세대 4베이 혁신설계 등 공급 활용성을 극대화한 구조 등이 맞물려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본다.

시행사 측은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견본주택 전체를 살균·소독하는 것은 물론, 열감자가메라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26일 특별공급에 이어 27-28일 일만 1·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71㎡ 115세대와 59㎡ 222세대 등 총 337세대가 들어서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1576만 원이다. 시공은 (주)삼정건설이 맡는다. 문의 051-744-1008. 배두구 기자

4월

투표아보기



언론은 피해자 신상 말고 입장에 주목하라

_오거돈 시장 사퇴, 지역방송은 어떻게 보도했나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역 지상파 3사는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 리포트 구성 방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KBS부산과 KNN은 사퇴 사실과 이유를 밝힌 첫 리포트에 이어서 각각 세 번째와 두 번째 순서에 <3전 4기 '불굴' 신화에서 '불명예' 하차로>와 <강제추행에 무너진 '3전 4기'의 꿈>이라며 가해자 서사를 담은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중요하게 전달한 건 부산MBC였습니다. 부산MBC <뉴스데스크>는 앞 순서에 피해자 입장에 기초한 리포트를 두 개 연이어 내면서 오 시장의 행동이 범죄였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가 “그런데 오 시장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만 밝힐 뿐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이건 명백한 성범죄였다고 강조했다”고 했고, 이어서 “오 시장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등의 표현”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본인이 유난스런 사람으로 비치는 것 같아 두렵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했습니다.





△KBS부산 <뉴스7> 오거돈 시장 사퇴 관련 리포트 (4.23)





△KNN <뉴스아이> 오거돈 시장 사퇴 관련 리포트 (4.23)

오거돈 시장 사퇴, 부산일보 온라인판 제목 부적절했다

실시간핫뉴스

> [속보]오거돈 사퇴는 여자 문제 때문

부산일보는 23일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소식을 전하면서 온라인판 기사 제목을 '여자 문제'라고 달았습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명확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두루뭉술한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더구나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성추행을 한 '가해자'가 문제입니다. 책임 소재를 흐리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미투 의혹'으로 수정되었다가 '성추행 의혹'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시장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만큼 '미투 의혹'이라는 서술도 부적절합니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기사 제목과 내용에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밝혀서 기사를 양산한 것도 문제입니다. <한겨레>는 이런 지적을 받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맡은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언론의 2차 가해를 우려하며 피해자가 공개를 동의한 정보에 한해서 보도해 달라는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여론 불지피는 지역신문

총선 다음 날, 개표결과를 전하면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기사와 사설을 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다뤄질 의제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논란만 남긴 '준연동형 비례대표' 폐지 수순으로

<p>의석 대부분 위성정당 차지 취지 정면 역행 개선 불가피</p> <p>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기 만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강행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5일 4·15 총선을 끝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p> <p>이날 비례대표 개표에서는 거대 양당의 '꼼수'로 비판받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과다.</p> <p>지난해 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합의 처리가 원칙인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p>	<p>'4+1'이라는 범여권 정당 연합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부터 위성정당의 탄생 가능성을 경고했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 여기에 의석 수 감소를 우려한 민주당도 자가당착적인 위성정당 창당으로 맞받았고, 결국 실익은 두 정당이 몽땅 챙겼다. '4+1'에 몸담았던 정의당과 민생당 등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p> <p>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완전성은 투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새 선거법 아래 '한탕'을 노리는 신생 정당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참여정당만 35개로 늘어났고, 투표용지 길이가 48.1cm에 달하면서 개표도 수작업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들어간 인력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이날 투표장에서는 생소한 정당명이 가득한 투표용</p>	<p>지를 받아온 유권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만 있는데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 속출했다.</p> <p>이처럼 제도의 탄생부터 결과까지 논란을 거듭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실험'으로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p> <p>앞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성명문에서 "직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연동형 비례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대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집권당과 군소 정당 사이의 거래를 통한 사의 추구 등 부작용만 크므로 21대 국회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의 허점을 비추어 과실을 몽땅 챙긴 민주당과 통합당도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전창훈 기자</p>
---	--	---

△4월 16일 부산일보 <논란만 남긴 '준연동형 비례대표' 폐지 수순으로>

부산일보는 <논란만 남긴 '준연동형 비례대표' 폐지 수순으로>에서 정당 수가 늘어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듯이 서술을 했습니다. '새 선거법 아래 '한탕'을 노리는 신생 정당이 우후죽순 등장', '유권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만 있는데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 속출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보다 쉽게 등장하도록 하는 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였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정당이 많아졌다면 언론이 그중에 옥석을 가려내 안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역할은 하지 않고 '깜깜이'라는 불만만 늘어놓은 셈입니다. 그러면서 '논란을 거듭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실험'으로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의 성명서를 인용했는데 이 단체는 작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

시키는 폭거라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애초부터 제도의 탄생에 찬성하지 않았던 이들의 입장을 전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국민 87% “준연동형 비례제 보완·폐지해야”

국민 10명 중 9명 꺼로 4·15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2.5%로 집계됐다. 보완과 폐지의 견을 모두 합치면 전체의 87.2%다. 반면, ‘현 제

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7.1%로 집계됐다.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은 호남(64.2%)과 서울(49.1%), 40대(55.7%)와 30대(53.1%), 진보층(58.6%)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1.7%)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세종·충청(64.3%)과 60대 이상(50.6%), 보수층(61.2%)과 미래통합당 지지층(71.4%)에서 많았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우기자

△ 4월 21일 국제신문 <국민 87% “준연동형 비례제 보완, 폐지해야”>

국제신문의 기사 <국민 87% “준연동형 비례제 보완, 폐지해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7%,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42.5%입니다.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의 속뜻은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살려나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보완’과 ‘폐지’를 묶어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부정함을 강조하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취지와 달리 누더기 된 비례대표제 이대론 안 된다

어제 투표소에서 이렇듯 엇비슷한 정당이 35개나 열거된 길이 48.1cm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본 유권자들의 당혹감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누가 누군지 혼란도 혼란이지만, 대의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가 강한 회의감이 먼저였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 4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일 땐 그나마 명분이 있었다. 정당 득표율과 실의석수 간의 차이를 줄여 대표성을 강화하지는 거였다. 소수당에 대한 배려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건 그저 허울이었다. 비례성을 높이자면서 비례의석은 그대로 뒀고, 연동성을 높이자면서 연동률은 제한했다.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선 의석수 계산도 못 한다. 선거법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까지 나

선 비례용 정당 설립, 의원·보조금 귀주기 경쟁은 한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썸수다. 소수 배려는 간데없고 거대 양당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비례용지 수작업 개표 탓에 결과 발표는 한참이나 늦어졌다. 시민단체가 비례 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비례 당선 무효화될 가능성까지 있다. 선거법 개정부터 실행까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21대 국회가 서둘러야 할 게 선거법 재개정이다. 대표성 강화가 옳은 방향이라면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든지, 이 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 어떤 경우라도 지금같은 비례위성정당이 나올 수 없게 해야 한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누더기 상태로 두면 승패의 정당성을 따지는 게 우스워질 수 있다.

△ 4월 16일 국제신문 사설 <취지와 달리 누더기 된 비례대표제 이대론 안 된다>

사설 <취지와 달리 누더기 된 비례대표제 이대론 안된다>에서는 ‘강한 회의감’, ‘허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성 강화가 옳은 방향이라면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다’며 보완 또는 폐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역시 제도의 허점과 부정적 여론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잡음이 많으니 차라리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은 오히려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보도입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방지하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려면 개정안 선거법을 다시 어떻게 손봐야 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무엇이 타당한지 방법을 모색하는 보도가 더 건설적입니다.

반려된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 등장

“부산, 해상케이블카 투명한 추진...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 송세관 부산시관광협회장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동시에 마비면서 국내는 물론 부산지역 관광업계도 초유의 비정상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지난 1월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분위기가 꺾일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관광마이스 업체 매출은 전년보다 80% 이상 감소되고 객실 점유율이 10% 안 되는 특급호텔도 나타났다. 업계는 여행수요 급감으로 도미노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부산 여행업체 11곳이 폐업하고 6곳이 휴업할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타격이 크다.

지역의 관광업계와 학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컬러 콘텐츠 육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부산시와 지역 시회가 연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세관(72) 부산시관광협회장은 19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축제 분위기가 지속되고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 사업도 바로 이어졌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

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계기로 시는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고 업계도 관광자수용 태세를 향상시켜 부산의 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관광협회에는 여행사와 관광호텔 등 1040개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관광업계 대표 기구이다. 송 회장은 현재

지역 차별화된 제휴형 상품 부족이뿐만 국제관광도시 안주 안 돼 컬러 콘텐츠 인프라 적극 확충 관광산업의 새 성장동력화 필요 일각 국내 케이블카 포화 지적 외국인 불러들이던 사업성 충분 시민사회·전문가 집단 머리 맞대 공영개발 가까운 형태로 개발할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사태는 진정될 것이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이후의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산재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안목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 다”면서 “부산 관광의 선진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국내외 관광객을 부산으로 불러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로 해상케이블카를 지목했지만 지역 역사와 내세우는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 최근 신규 관광자원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해상케이블카를 포함한 지역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 건설에 대한 용역에 돌입했다. 용역 결과는 내년 3월경 발표된다.



송세관(72) 부산시관광협회장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송 회장은 해상케이블카 등 새로운 컬러 콘텐츠와 관광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은 사진은 ‘관광부산’을 들고 있는 송 회장. www.bsook.co.kr

2016년 민간사업자인 ㈜부산블루스프링은 해운대 송림공원-이태대중로 해상 4.2km 구간에 해상케이블카 건립을 제안했다. 교통-관광-공공기여 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현재는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송 회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불거 리, 줄임거리가 있어야 관광산업이 발전시킬 수 있다.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위한 새 세대에 걸맞은 이미지를 살아낼 수 있는 관광상품이 필요하다. 부산은

24시간 언제든지 해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재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잠재력이 있다”면서 “지금으로부터는 차별화된 해양관광 상품이 부재하다. 부산 관광의 미래는 바다고 부산 경제의 미래는 해양관광을 주축으로 하는 관광마이스산업이다. 관광 리와 해운대 등 해양 벨트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가 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에는 감천문화마을, 초량야

배구길 등 다른 관광자원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 소년 일상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부산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면서 “관광은 결국 가까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만족을 얻는 서비스다. 반얀관 콘텐츠는 접근력이 부족하고 생경력도 짙을 수밖에 없다. 특히 부산 관광의 최대 약점인 제휴형 관광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다면 부산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케이블카가 이미 많이 공급돼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 회장은 “국제관광도시 부산과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부산에 설치되는 케이블카는 소도시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을 불러들일 수 있는 한국의 대표 관광 상품이 돼야 한다”면서 “시가 재정 문제(사업비 6000억 원)로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니냐”고 고변론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또 다른 반론은 바다라는 공공재를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비판이다.

송 회장은 “대안관광관은 관광용 전세 버스도 운영하는데, 운수사업을 하려면 차고지가 필요하다. 차고지를 개발하면 구역에 설치할 경우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정기업이 공공재를 활용할 때 대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는 당연히 안 된다. 공공재를 환경 훼손 없이 개발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

출이 되면 마땅히 대안을 찾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정 사용기간이 지나면 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조건을 갖춰 관광개발에 가까운 형태로 추진하면 오해의 소지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민사회, 시민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심의위원회 등 기구를 만들어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해상공간을 지역 발전을 위한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월 20일 국제신문 <“부산, 해상케이블카 투명한 추진...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국제신문은 20일 송세관 부산시관광협회장의 인터뷰를 크게 싣고 아래에는 부산 관광상품 공모 소식을 연결했습니다. 부산시관광협회는 1,000여 개의 관광사업자들의 조직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송 회장은 부산관광의 컬러 콘텐츠로 해상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2017년에 이미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간 제기된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 ‘공영개발에 가까운 형태로 추진하겠다’, ‘전문가 집단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관광업계의 말을 전하며 다시 한번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설득합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안고 있는 환경 훼손 우려나 공공성 부재의 문제는 비껴가면서 관광업계의 요구만을 해설한 기사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대책이라고 명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달 초 부산시는 느닷없이 반려했던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을 또 검증하겠다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사업자가 공식으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가 먼저 나선 겁니다. KBS부산은 이에 대해 <“용역 배경 의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지역 방송 3사 중에 유일하게 KBS만 의문을 제기해 부산시의 수상한 용역 발주에 대해 감시자의 역

할을 했습니다. 부산시관광협회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KBS는 현재 부산시의 자문위원 15명 중에 시민사회단체 분야 위원은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22일에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극심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이 사안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보면서,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추진 전에 해결해야 할 지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 4월 8일 KBS부산 뉴스9 <케이블카 타당성 검증 착수...“용역 배경 의문”>



△ 4월 22일 KBS부산 뉴스9 <“케이블카 공익성 전제돼야 논의 시작”>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 다시 챙겨 본 국제신문

휠체어 보행환경 개선 약속, 2년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 장애인의 날 본지 기자 체험

남구 장애인복지관 인근 3km
박재호 의원 휠체어 체험 후
“보도 기술 등 조처” 공언 불구
곳곳 울퉁불퉁·균열 상태 여전
횡단보도 파란불 시간만 연장



20일 부산 남구 장애인복지관 인근에서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가 휠체어를 타고 보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제40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1시 부산 남구 장애인복지관. 기사는 꼭 2년 만에 다시 이곳에서 수동 휠체어에 올랐다. 2018년 장애인의 날 기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박재호 의원과 휠체어를 타고 이 일대 약 3km 구간을 2시간여 함께 돌았다. 이 ‘체험’을 마친 직후 박 의원은 보도의 기술기, 경사도 등 휠체어 통행에 문제가 되는 요소를 바로잡겠노라 공언(국제신문 2018년 4월 21일자 5면 보도)했다. 2년 새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허망할 정도로 나아진 것은 없었다. 휠체어에 기대앉아 바퀴를 밀자 자연스레 허리가 앞쪽으로 숙여졌다. 눈높이는 평소의 절반. 시야가 좁아지는 정도는 훨씬 심했다. 평소 인식 못 하는 보도블록의 작은 틈이나 자갈에도 휠체어는 크게 출

렁어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복지관 입구에서 폭 5m 이면도로를 건너 평화공원으로 진입한 뒤 공원길을 따라 대연교 가로세로 4cm 크기 사괴석 돌길이 2년 전 그대로 휠체어의 바퀴를 잡아챘다.

걸을 땀 가벼운 경사도 휠체어 위에서는 도전이었다. 대연천을 지나 부경대 정문으로 향하는 건널목을 지나던 중 휠체어가 차도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인도로 올라서는 10도가량의 얇은 경사를 우회 하려다 생긴 일이다. 복지관 직원 도움으로 인도로 올라 한숨을 들린 것도 잠시. 폭이 1m에 못 미치는 대학가 인도의 노면은 유동인구 숫자를 반영하듯 곳곳이 패고 균열이 일었다.

부경대 정문 건널목을 지나 부산창업카페를 오른쪽에 끼고 도시철도 대연역으로 향하는 인도. 폭 5m 가량으로 일대에서 가장 넓고 울퉁게 뻗은 길처럼 보이지만, 차도 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진 채 포장된 노면 상태는 그대로였다. 기울어

진 탓에 전진하면 휠체어 바퀴는 끊임없이 차도 쪽으로 굴렀다. 오른쪽 바퀴를 천천히 밀어 전진하는 동안 가법계 전 원손바닥 사이로 휠체어의 왼쪽 바퀴를 흘러보내며 균형을 맞춰야 했다. 두꺼운 목장갑을 썼는데도 왼손바닥이 쓰렸다. 복지관 반경 3km 안 인도 실정이라면, 다른 곳은 오죽할까 싶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2018년부터 매년 정치·치안·행정 일선에 있는 이들이 휠체어 장애인의 고충에 공감할 수 있도록 명사 초청행사를 벌여왔다. 박 의원 이후 이강영 남구의회 의장, 남부경찰서 경찰 등이 이에 응했다. 개선은 지난해 남부서 경찰이 다녀간 뒤 대천교차로 횡단보도 2기의 청신호 시간이 각각 4초, 12초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경성 복지관장은 “올 하반기에는 박재범 남구청장을 초청하려 한다. 장애인 차별 요소를 없애는 복지관의 ‘무장애 시티 만들기’ 사업에 지자체가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은 장애인의 날에 기자가 휠체어 보행 체험을 했습니다. 2년 전 했던 약속이 지켜졌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박재호 국회의원이 함께 휠체어 이동을 해 본 후, 통행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남구장애인복지관이 박 의원 이외에도 정치와 치안, 행정 일선에 있는 이들을 초청해 장애인의 고충에 공감해달라고 했지만 실제 개선된 게 별로 없다며 ‘무장애 시티’를 만드는 데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환기했습니다.

양산사송신도시 건설 현장, 금정산 훼손 고발한 KNN



KNN은 양산 사송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금정산 생태계가 훼손되고 고발했습니다. 부지 안에 계곡이 포함되어 있어 택지를 조성하면 물길이 끊기게 된 상황인데, 양산시는 이 개천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자는 과연 현장 답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호소와 배반되는 보도 쏟아내는 부산일보,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 하지 마라

부산일보는 오거돈 성추행 사퇴 건을 이틀에 걸쳐서 각각 6개 면, 5개 면을 털어서 대서특필했다. 지자체장이 충격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퇴한 만큼 이런 참담한 사건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오 시장이 취임할 때 약속했던 성평등 공약은 왜 안 지켜졌는지, 공직사회 성인지 감수성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강제해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보도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부산일보를 보면 과연 이런 보도로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부산일보는 잣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온 지면을 다 털어 ‘사건 무마’, ‘사퇴 시점 조율’에 관한 의혹이 있다며 사건을 정치쟁점화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틀간 특집면에 쓴 33개 기사 중에 15건이 사퇴 시기 조율과 관련한 의혹 제기다. 특히 27일자에는 1,2,3,4,5면 머릿 기사를, 28일에는 1,4,5면 머릿 기사를 사퇴 시기를 두고 정치적 계산을 했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전하는 기사는 없었다.

기사의 핵심 주제	국제신문	부산일보
사퇴 시기 개입, 사건 무마	4	10
문재인 (법무법인 부산, 친문 이너서클)	1	5
보궐 선거	5	3
사건 (경위, 추이, 오거돈 민주당 대응)	7	9
재발방지 대책	3	-
시민단체 반응	1	1
피해자 입장	-	-
부산 행정 공백, 대책	2	5
총 보도 건수	23	33

부산일보

1945년 7월 10일 창간 전화 051-801-4114

제23217호 1판

busan.com

2020년 4월 27일 화요일 새벽 4월 5일

'계획적 성추행·사건 무마 의혹' 증폭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관련 수행비서 등해 온전히 피해자 노출 사실은 CCTV 없는 사적 공간

및, 사건 무마 지속적 시도 경찰 피해자, 사퇴 확정위해 공중 요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열의

4월 7일 오거돈 전 시장 업무실서 성추행 발생

4월 10일 A씨 부산시청내 업무실로 불려

4월 11일 오거돈 전 시장 업무실로 불려

4월 12일 오거돈 전 시장 업무실로 불려

4월 13일 오거돈 전 시장 업무실로 불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대중적 실수가 아닌 계획적 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과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놓고, 사퇴 관련 진해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지 않아 사건 무마 혐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업무 중 사적 공간으로도 불려오는 시정상으로 피해자를 비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실 내에서는 CCTV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적 공간이었던 업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 전 시장은 성추행당할 피해자를 지명하고 단정히 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통해 총 29일 부산시 전 직원 교육 강무원 등

을 포함한 경우, 비서실 직원들이 단정한다. 시정실 내로 유입된 비서실에는 행태가 근무했다.

이같은 오거돈 전 시장의 행태가 공무원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과 성추행 사건에서는 진해가 없는 공중이라는 반박적 행태를 보였다. 공중은 법상 장이 마련돼 있어 업무 중 사적 공간이 아닌 업무 공간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 의혹에 대해 책임은 주로 회사에 있다고 지적한다.

오 전 시장이 사건 이후 정무 라인에 여러 고위 관료들을 불러들이고, 시정실 내로 유입된 비서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 전 시장은 성추행당할 피해자를 지명하고 단정히 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통해 총 29일 부산시 전 직원 교육 강무원 등

을 포함한 경우, 비서실 직원들이 단정한다. 시정실 내로 유입된 비서실에는 행태가 근무했다. 이같은 오거돈 전 시장의 행태가 공무원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과 성추행 사건에서는 진해가 없는 공중이라는 반박적 행태를 보였다. 공중은 법상 장이 마련돼 있어 업무 중 사적 공간이 아닌 업무 공간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 의혹에 대해 책임은 주로 회사에 있다고 지적한다.

오 전 시장이 사건 이후 정무 라인에 여러 고위 관료들을 불러들이고, 시정실 내로 유입된 비서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 전 시장은 성추행당할 피해자를 지명하고 단정히 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통해 총 29일 부산시 전 직원 교육 강무원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대중적 실수가 아닌 계획적 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과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놓고, 사퇴 관련 진해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지 않아 사건 무마 혐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업무 중 사적 공간으로도 불려오는 시정상으로 피해자를 비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실 내에서는 CCTV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적 공간이었던 업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 전 시장은 성추행당할 피해자를 지명하고 단정히 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통해 총 29일 부산시 전 직원 교육 강무원 등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출범

부산일보 독자위원회(Reader's Board)가 새롭게 출범했다. 부산일보는 독자의 목소리를 신문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출범스런 역할을 하는 독자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부산일보 독자위원회에는 27명의 독자위원이 참여한다. 선거 결과 안현철, 서민석, 민소, 김희숙, 김희숙, 김희숙 등 27명의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위원회를 구성했다. 독자위원회의 역할은 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 부산일보는 독자위원회를 통해 독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자의 여론을 형성하고, 자정능력을 신장하는 언론 발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주최: 독자위원회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관련 수행비서 등해 온전히 피해자 노출 사실은 CCTV 없는 사적 공간

부산일보

1945년 7월 10일 창간 전화 051-801-4114

제23218호 1판

busan.com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새벽 4월 5일

사퇴 의사 없었던 뚝, 정무 라인과 뒷선이 종용했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관련 수행비서 등해 온전히 피해자 노출 사실은 CCTV 없는 사적 공간

및, 사건 무마 지속적 시도 경찰 피해자, 사퇴 확정위해 공중 요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대중적 실수가 아닌 계획적 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과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놓고, 사퇴 관련 진해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지 않아 사건 무마 혐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업무 중 사적 공간으로도 불려오는 시정상으로 피해자를 비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실 내에서는 CCTV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적 공간이었던 업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 전 시장은 성추행당할 피해자를 지명하고 단정히 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통해 총 29일 부산시 전 직원 교육 강무원 등



마스크 쓰고 범정부 출동

전날 오전 10시경 부산시청내 업무실로 불려

오거돈 전 시장 업무실로 불려

오거돈 전 시장 업무실로 불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대중적 실수가 아닌 계획적 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과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놓고, 사퇴 관련 진해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지 않아 사건 무마 혐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업무 중 사적 공간으로도 불려오는 시정상으로 피해자를 비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실 내에서는 CCTV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적 공간이었던 업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 전 시장은 성추행당할 피해자를 지명하고 단정히 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통해 총 29일 부산시 전 직원 교육 강무원 등

오 전 시장은 업무 중 사적 공간으로도 불려오는 시정상으로 피해자를 비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실 내에서는 CCTV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적 공간이었던 업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 전 시장은 성추행당할 피해자를 지명하고 단정히 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통해 총 29일 부산시 전 직원 교육 강무원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관련 수행비서 등해 온전히 피해자 노출 사실은 CCTV 없는 사적 공간

및, 사건 무마 지속적 시도 경찰 피해자, 사퇴 확정위해 공중 요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대중적 실수가 아닌 계획적 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과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놓고, 사퇴 관련 진해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지 않아 사건 무마 혐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업무 중 사적 공간으로도 불려오는 시정상으로 피해자를 비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실 내에서는 CCTV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적 공간이었던 업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 전 시장은 성추행당할 피해자를 지명하고 단정히 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통해 총 29일 부산시 전 직원 교육 강무원 등

동아대 세 총장에 이해우 교수 선출

제10대 동아대 총장에 이해우(사진) 57세 동아대 교수 선출됐다. 동아대 총장 선거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동아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해우 교수는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아대 총장 선거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동아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해우 교수는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해우 교수는 동아대 공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아대 총장 선거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동아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해우 교수는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해우 교수는 동아대 공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아대 총장 선거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동아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해우 교수는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해우 교수는 동아대 공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아대 총장 선거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동아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해우 교수는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제 23217 호 오거돈 성추행 사퇴 부산일보

①피해자 회유 없었나 ②시기 조율했나 ③사퇴 미적했나

짜리 우리는 '3대 의혹'

재력가 못 건 시장 합의를 시도 의혹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었다" 전면 부인

총선 부담, 사퇴·공론화 시기 조율? 의논 과정서 자연스럽게 날짜 잡아

상당소 및 사퇴 소극 자제에 항의? 총선 뒤 정무라인 접촉한 것이 와전

오거돈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각종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부분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에 기초한 것들로, 피해자 측도 부정하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정치적 폭발성이 높은 사건이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한동안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보인다.

자의 절개 연마에선 오 전 시장이 사건 뒤 피해자에게 사면 무마를 위해 협의를 시도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면을 달거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와 협의를 시도하는 일이 여러번만 당연한 수준이다. 재력가인 오 전 시장이 상당한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시전

무마 시도설에 힘을 실어 준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습을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피해자를 대변하는 부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면 무마설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상담소는 오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한선 경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오 전 시장과 보좌진이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점은 성폭력 사건 이후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퇴 시기를 두고도 '조율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날 피해자는 상담소를 찾아갔다. 이후 부산시 정무라인과 상담소는 합정한 보안 속에서 협의를 진행했고, 4·15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인 22일 오 전 시장이 사퇴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왔다. 총선 전 사건이 공론화됐을 경우 여당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오 전 시장 측에서 사퇴와 공론화 시기를 총선 이후로 조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정황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시기 조율설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상담소 측은 "총선은 사퇴 시기를 정하는 데 기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역시 "정자금의 어려움 외엔 합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일 시기 조율이나 사건 무마 등 정치적 압력이 없었다고도 오 시장 측과 피해자 측이 독자적인 협의를 통해 사퇴 시기를 총선 뒤로 잡았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또 통상적으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이를 공론화하기 전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며, 시장 사퇴 역시 단기간에 단행될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 이 때문에 4·15총선 전 공론화는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이 사퇴 이전에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해지지 않은 점을 비춰 보면 사퇴 시기가 급박하게 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오 전 시장이 4·15총선 뒤 사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상담소가 반발했고 이 때문에 부랴부랴 사퇴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상담소 측은 사실관계가 의문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15총선 뒤 부산시 정무라인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과정이 평평하다는 차원이었을 뿐 합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오 전 시장 성추행 수습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의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도 의문이다. 경찰 수사는 성추행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재조사가 명확하게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정치적 폭발성이 높은 사건인 만큼, 당사자들이 부인한다해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뒷말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부산여성100인행동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선배 기자 ksmb@

27일 2면 머릿기사 <①피해자 회유 없었나 ②시기 조율했나 ③사퇴 미적했나>는 오거돈 성추행 사건 처리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서두에 스스로도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부분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에 기초한 것들로, 피해자 측도 부정하는 주장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추정만으로 무려 '3대 의혹'이라며 구구절절하게 기사를 쓴 이유는 '정치적 폭발력'이 높아서라고 밝혔다. '한동안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보인다'로 시작한 기사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뒷말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끝맺고 있다. 부산일보야말로 뒷말을 무성하게 끌어가는 당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날 여러 면에 걸쳐 쓴 기사가 사실상 비슷한 의혹 제기 내용의 반복 재생산에 그치고 있다. 기사를 양산하지 말고 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하고,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일말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기사를 쓰기 바란다.

부산일보 기사의 타겟은 명확해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공증을 맡은 법무법인 부산이 '여권과 특수관계'임을 언급하며 청와대 사전 인지설을 제기한 기사가 5건, 부산시 정무라인이 문제라며 '친문 이너서클'까지 언급한 기사가 6건이다.

27일 5면 <친문 '이너 서클' 책임론>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들이 선거 관여 안 했더라면..."에서는 '막후 영향력', '이너 서클', '실세', '뒷배'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알려져 있다',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 '소문이 파다했다', '지적이 나온다'는 추정적인 서술을 주로 했다. 성범죄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오거돈을 추천한 비선 실세 인물들로 봤다.

28일 5면 <비선 실세 아닌 '정당 공식 체계'로 지역 정치 해야>에서는 핵심 정무라인이 일거에

물러난 상황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민주당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오거돈 사퇴 파장의 해결책을 민주당 지역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로 본 것이다.

부산일보의 진단에 따르면 권력형 성범죄의 원인도 결과도 모두 권력 구조가 문제다. 하지만 부산일보가 상정하는 쉐신이라는 게 현재 정치권을 차지한 기득권 남성들 간의 권력교체가 아닌지 자문해보라. 여야를 막론하고, 실세이건 비선이건 모두를 통틀어서 정치권과 공식사회 권력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전반을 점검하는 게 옳지 않은가. 무엇을 감시하고 파헤쳐야 할지 뻔히 드러났다. 구태를 반복하며 굶아 터져 발생한 사건을 언론이 기껏 정치적 소재로만 활용해서 돌려막기식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개탄스럽다.



부산일보는 지난 24일 오거돈 전 시장 관사를 찾았더니 반려견 두 마리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기사를 무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걸었다. 27일에는 오 전 시장이 잠적했다고 비난하면서 SNS에 거가대교에서 오거돈이 목격됐다는 기사도 썼다. 금방 휘발하고 말 가십성 기사를 쓰면서 정작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사는 27일과 28일 이틀간 한 건도 없었다. 국제신문이 27일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여성단체들과 만나서 6월 내에 성폭력 예방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고, 28일 1면 머릿기사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경찰수사 방향을 보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사퇴 시기를 두고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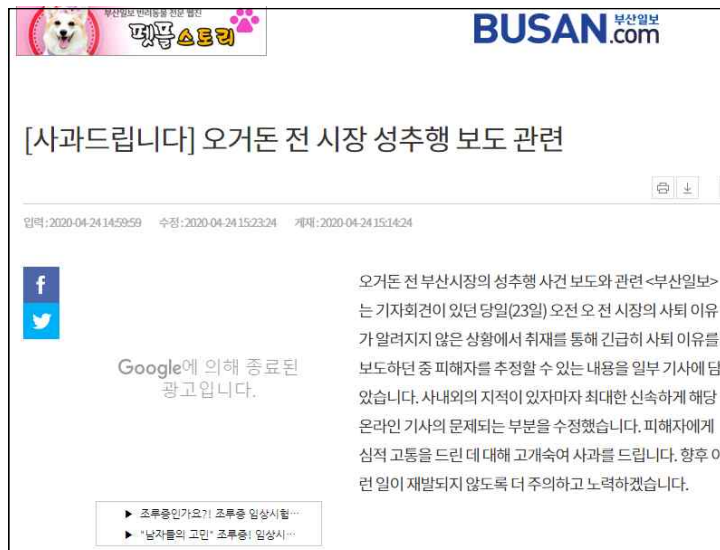
갓 억측 보도가 쏟아지자, 피해자를 대리하는 부산성폭력상담소는 “피해를 즉시 밝히면 꽃뱀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늦게 밝히면 이제와서 문제 제기한다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피해를 밝히는 그 모든 순간은 피해자가 오롯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했다. 부산일보는 오거돈 사퇴 기자회견 직후 피해자 신상을 일부 포함한 보도를 했다가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드린 데 대해 공개 속여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불과 며칠 전 사과가 무색하게 부산일보는 이 사건을 끊임없이 정치쟁점화하며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 피해 당사자의 호소와는 배반되는 보도를 일관되게 쏟아내는 부산일보는 각성하길 바란다.

[4월 27일 주요 면 보도]

- 1면 머릿기사 <‘계획적 성추행·사건 무마 의혹’ 증폭>
- 2면 머릿기사 <[꼬리무는 3대 의혹] ①피해자 회유 없었나 ② 시기 조율했나 ③ 사퇴 미적당나>
- 3면 머릿기사 <[뭉·핵심 정무라인 연락 두절] 사건 해명도 시정 혼란도 나몰라라 ‘무책임한 잠적’>
- 4면 머릿기사 <정무라인 주도·법무법인 부산서 ‘사퇴 공증’ 의구심 증폭>
- 5면 머릿기사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들이 선거 관여 안 했더라면...”>
- 사설 <‘잠적’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규명에 직접 나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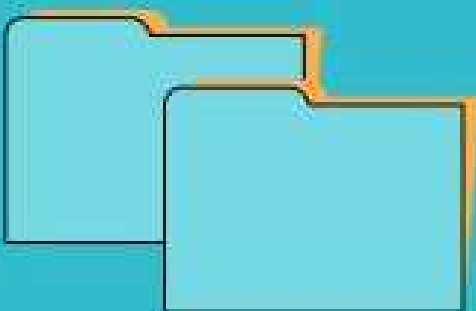
[4월 28일 주요 면 보도]

- 1면 머릿기사 <사퇴 의사 없었던 뭉, 정무 라인과 잇선이 종용했나>
- 2면 하단기사 <공증은 총선 전 발표 막기 위한 피해자 약속용?>
- 4면 머릿기사 <文과 특수관계 법무법인 공증이 “순전히 우연”이라니>
- 5면 머릿기사 <비선 실세 아닌 ‘정당 공식 체계’로 지역 정치 해야>
- 5면 하단기사 <사퇴 시점 ‘당청 개입 여부’ 집중 조사 나선 통합당>
- 6면 머릿기사 <국회도 당도... ‘친문’으로 쏠리는 與 권력 구도>
- 사설 <성추행 오 전 시장 제명, ‘무마 의혹’ 밝힐 차례다>



5월

표아보기



100년 간 인구 흐름 3D 기법으로 보여준 KNN뉴스아이, 인구 정책 이제는 바뀌어야할 때임을 말하다



KNN 뉴스아이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획 <인구는 사람이다>를 보도했다. 경남 지역까지를 취재권역으로 하는 KNN이 부·울·경 지역 특히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구정책을 화두로 꺼내 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출산장려지원금정책이나 결국은 지자체 간 불붙은 인구 유입책을 꼬집으면서, 인구 감소가 곧 위기이지만 하다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리포팅 <100년의 변화 “인구는 움직인다”>와 <3D로 보는 인구의 생명학>은 영상매체인 TV뉴스의 장점을 살린 3D그래픽 기법이 눈에 띄었다. 인구기획팀을 꾸리고

석 달 간 주소지 이전 자료를 포함한 인구 빅데이터를 3차원 시뮬레이션했다고 한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나 최근 감소세만 보면 위기감이 더 높을 수 있는데 수십 년간 한국 전체의 인구 이동을 통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어떤 이유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지에 더 집중하게 했다.

KNN은 인구는 늘 이동하는 속성이 있고, 전체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 간 인구 늘리기 경쟁은 결국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제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해 시청자에게 잘 전달했다.



인구유출에 대한 공포심이 잘못된 정책을 낳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서부경남 KTX 노선 유치경쟁, 신도시 과잉개발, 창원-김해 간 비음산 터널 개통에 대한 찬반 대립과 같은 화두들이 결국은 해당 지자체에 인구를 붙잡아두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KNN은 인구감소가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일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며 마지막 리포트로 <인구감소 극복하는 공동체의 힘>을 배치했다. 김해 회현동, 밀양 단장면, 양산시 소주동, 남해 상주면 주민공동체를 보여주면서 행복은 인구수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개한 마을 하나하나가 더 자세히 들여다 볼만한 사례였다.

물론 인구 감소가 산업과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KNN 기획 리포트는 인구 늘이기에만 목표를 둔 정책은 실패한다는 통찰과 인구감소를 위기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역발상이 돋보였다. 코로나19 이후 고밀도로 압축된 도시가 오히려 위험해지면서 앞으로 도시공간의 철학도 재편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이다. 행정구역을 넘어선 부산과 경남의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주문한 KNN 기획은 이런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명품 브랜드 '값질' 비판과 함께 시즌 오프 할인 행사 홍보한 부산일보 1면 머리기사



△ 5월19일자 부산일보 1면 머리기사

부산일보는 19일 1면 머리기사로 <한국 소비자는 호구? 명품 브랜드의 '값질'>을 실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호구'로, 명품브랜드는 '값질'의 '값'을 가격을 의미하는 '값'으로 바꿔 '값질'하는 주체로 이름 붙였습니다. 해외고가 브랜드들의 비합리적인 가격인상을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기사 분량의 많은 부분을 오히려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는 해외명품 매출액, 가격

인상률 등 명품브랜드가 잘 팔리고 있는 현상을 전달하는 데 치중합니다.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의 경우 4월 해외명품 판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9%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는 22% 이상 증가했다. 신세계센텀시티도 4월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는 40% 가까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해외 명품 상품군의 매출은 증가세로, 롯데백화점의 경우 2018년 전년 대비 18.5%, 2019년엔 28.0% 각각 신장했다.

<중략>

루이비통은 이달 초 일부 가방 가격을 5-6% 올렸고, 의류 액세서리 소품류는 최대 10%까지 인상했다. 샤넬도 지난 14일 이후 인기 품목인 클래식 플랩백 미다움을 715만 원에서 849만 원으로 18.7% 인상하는 등 대대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하이엔드 명품'으로 불리는 이들 브랜드의 인상은 아래 단계의 다른 브랜드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티파니아 불가리 등 보석류 브랜드들은 금값 상승을 이유로 3월과 4월에 각각 가격을 올렸다.

이 기사는 해외고가 브랜드들이 코로나19로 명품 시장이 위축되자, 한국시장에서 전체 매출을 보전하기 위한 '값질'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에는 세일 정보를 알려줍니다. 유통면에 실릴 만한 기사를 굳이 1면 머리기사로 올린 의도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더구나 이 날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다음날입니다. 과연 명품 세일 소식이 1면 머리기사로 선택될 만큼 뉴스가치가 있었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매출 보전 움직임은 브랜드별로 진행되는 백화점 시즌 오프 행사 시기가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라진 데서도 나타난다. 버버리는 19일, 량방발리는 22일 세일을 시작하고, 다음 달에는 로로피아나·토리버 치·툼브라운이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한편 15일 부산일보는 24면, 국제신문은 7면에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백화점 세일을 홍보하는 전면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5·18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의 역사 조명한 KBS부산 <뉴스9>

올해 5월 18일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지원을 선언했고, 부산에서는 민주공원에서 40주년 기념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79년 부마민주항쟁, 87년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부마민주항쟁이 부산의 역사로 묻혀진 것처럼 5·18민주화운동 역시 광주만의 역사, 아픔으로 고립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가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이 전국적으로 생방송되기 시작한 것도 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도 매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은 조명했지만 5·18 민주화운동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40주년을 맞은 올해 보도는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지역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40주년 기념사를 주요하게 보도했는데요. 먼저 국제신문은 18일, 19일 연속으로 1면과 주요면에서 보도했습니다. 18일에는 문 대통령이 광주MBC와 가진 특별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특히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6월항쟁 담아야’ 입장에 주목했습니다. 사설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일보는 19일 1면과 6면에서 기념식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는 발언과 진상규명 의지 천명을 보도했습니다. 부산 행사는 따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방송 부산MBC, KNN는 부산에서 열린 5·18 기념식을 단신으로 보도하는데 그쳤습니다. 특집 기획이나 프로그램이 따로 없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지역 언론 보도 중에서는 KBS부산이 눈에 띄었습니다. 뉴스9에서 <광주항쟁 40주년…부산서 꽃피운 5.18 정신>을 보도했는데요, 뉴스에서는 드물게 한 꼭지가 6분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80년 광주 현장과 당시 KBS를 비롯한 언론의 왜곡보도를 짚었고, 이어 광주의 비극을 알리려 노력한 부산의 이들을 영웅이라며 소개했습니다. 부산지역 기자 최초로 현장을 취재한 김양우 전 국제신문 기자, 부산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사진전을 개최한 박승원 신부와 거리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노재열 당시 학생 등입니다. 5·18 광주 이후 부산의 민

주화 운동은 광주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후 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뉴스 리포트 틀을 벗어나 KBS가 보유한 미공개 현장 영상과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와 부산이 연대로 이어졌음을 조명한 보도였습니다.

※ KBS부산 5월 18일 뉴스9 <광주항쟁 40주년...부산서 꽃피운 5.18 정신>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군인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대검을 휘둘렀다

신문과 방송은 나흘 동안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1980년 5월 27일 KBS 9시 뉴스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이 오늘 오전 3시 30분부터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해서 도심과 공평 동지에서 저항하는 무장 폭도들을 소탕하고

참다못한 시민들은 KBS광주와 광주MBC를 불태웠다

1987년 6월 8일~13일 부산가톨릭센터에서 열린 광주 사진전은 6만~8만 명의 시민이 관람했다

박승원 신부
1987년 부산에서 광주 5.18 사진전 개최
항상 상상에 와있던 형사들도 보도 되나고 배요.

“애국시민 단결하여 사기정권 몰아내자”

최준영
부산영서행복조합 재건준비위원장
1987년 6월 민주청정 노련
그때만큼 순수하고 열정을 가지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5.18 숭고한 희생으로 뿌린 씨앗 7년 뒤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어나다

기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다양한 독자 목소리 반영할 수 있을까

<2020년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직책	성명		직함
	위원장	박병대		송월 회장
	위원	강동석		동진기공 회장
	위원	강영복		해인산업 대표
	위원	구태환		세지솔로텍 대표
	위원	권은화		나발레라 이사장
	위원	김명성		스티우프코리아 대표
	위원	김명철		세진투빅 대표
	위원	김소연		법률사무소 예주 변호사
	위원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위원	김은수		동일 대표
	위원	류상훈		모든 대표
	위원	문용훈		대성해운 대표
	위원	신홍주		성호해운 대표
	위원	안용모		중앙수산 대표
	위원	양재성		근해트랜얼협회 회장
	위원	이나영		은산해운항공 회장
	위원	이성진		필라테스 지도자
	위원	이영래		미화합동 대표
	위원	이화형		부동산서베이 대표
	위원	장제국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위원	장철훈		동서대 총장
	위원	전창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위원	정경호		영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위원	조승원		갈래리604 대표
	위원	조시영		(사)희망유여는사람들 상임이사
	위원			세화전설 대표
	위원			명진TSR 대표

△부산일보 5월 28일 19면 3기 독자위원회 명단

직업과 성별, 직급과 나이에서 특정 계층을 과대 대표하는 구성입니다. 독자권익 보호와 소통 창구라는 독자위원회 본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소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 간의 네트워크에 주력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역대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구성과 비교해봐도 다양성 지수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2010년 부산일보 독자위원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8이었습니다. 대학강사, 공기업 차장, 자활센터 실장, 지역대학 취업지원관, 학생, 기업 대표이사, 시민단체 중계실장, 주부, 사진예술가로 직업군과 직급이 다양했으며 외국인도 포함했습니다. 독자들의 다양성 민감도는 10년 전보다 훨씬 향상됐는데 부산일보는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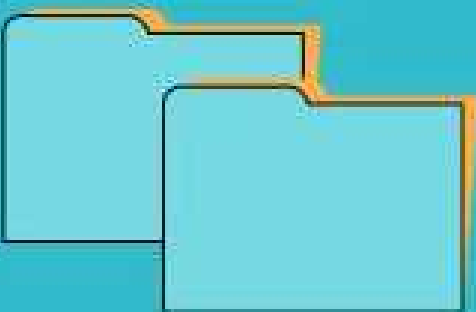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언론이 위기라고 합니다. 떠나가는 독자를 붙잡고 지역 독

지난 26일 부산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틀 뒤 “언론 사명 충실하도록 ombudsman 역할 최선을 다할 것”에 담겼습니다. 부산일보는 기사에서 “독자의 목소리에 한층 충실히 귀 기울이기 위해 제3기 독자위원회를 다채롭게 구성”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다채로운 구성’일까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체와 학계, 시민단체, 공연과 전시예술계 등 분야를 늘어놓았지만, 전체 25명 독자위원 중에 기업인이 1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남성은 22명인데 반해 여성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직함을 훑어보면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장, 대표, 총

6월

품아보기



사퇴 기자회견 이후 경찰 출석까지 언론은 무얼 좇았고 무얼 놓쳤나

지난 5월 22일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다. 사퇴 기자회견 이후 29일만이었다. 약 한 달여의 시간동안 언론은 2,268건(4월22일부터 5월23일까지 ‘오거돈’ 키워드로 빅카인즈 검색한 결과)의 기사를 쏟아내며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이 언론의 관심 속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데는 무엇보다 피의자가 현직 부산시장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성범죄 사건 보도가 주로 검경의 수사과정을 중계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면, ‘오거돈 성폭력 사건’은 피의자가 정치인이기에 정치면과 사회면에 걸쳐 보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오거돈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은 기사 내용의 하위요소로 밀려났고 언론은 당청의 사퇴 시기 개입 여부, 시정 공백으로 인한 주요 사업 차질 현황, 시장 보궐 선거 등을 주요 면에 배치하였다.

4월 27일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9일부터 오거돈 전 시장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를 시작으로 시장 비서실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5월 1일부터는 피해자 또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주문하는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해당 기사들은 부산경찰청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가 꼭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언론은 ‘고소 왜 미루나’, ‘피해자 진술 확보 못해 수사 난항’ 등의 표현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에 대한 책임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보도를 한 셈이다.

국제신문은 <피해자 진술 없으면 기소도 난망…벽에 부딪힌 오거돈 수사>(5/1, 6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없어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기소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등의 문장을 여러 차례 등장시키며, 피해자가 진술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부산일보 <입 닫은 성폭력상담소,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 없나>(5/1, 2면)는 현직 시장을 상대로 공증까지 받아내며 가해자의 시장직 사퇴까지 이끌어낸 피해자 측을 ‘실체적 진실 규명’과 대립하는 관계로 드러내며, 되려 피해자 측이 ‘실체적 진실 규명’의 장애물인 것처럼 보도했다. 특히 기사는 “‘총선 뒤 시장 사퇴’라는 사적이고 정치적 처리에만 앞장서고, 성추행과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필요한 국가 사법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서술을 통해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사적, 정치적 처리라 폄하했다. 또한 비난을 자

초하고 있다는 서술은 주어가 없이 등장해 누구로부터의 비난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는 언론이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모양새였다.

보도에는 피해자 측에 대한 압박도 있었다. <전여옥 “오거돈보다 더 이상한 쪽은 부산성폭력상담소다”>(부산닷컴, 4/27), <문 대통령과 특수관계 법무법인의 공증이 “순전히 우연”이라니>(부산일보, 4/28, 4면), <공증은 총선 전 발표 막기 위한 피해자 약속용?>(부산일보, 4/28, 2면) 등의 기사에서 ‘의혹이 제기된다’,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와 같은 추측성 서술을 통해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언론은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피해자의 당부를 존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대신한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부산상담소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 탓에 성폭력 상담소 직원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기자가 시 관계자에게 피해자 신원 파악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공론화된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임에도 가해자가 현직 부산 시장인 탓에 부산의 수치로만 프레임 되는 한계도 있었다. 국제신문은 칼럼 <‘민주화성지’는 그냥 얻은 이름 아니다>(5/11, 23면)에서 성폭력 범죄 공론화를 민주화 과정 중 하나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쯤으로 여기는 구태를 보여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남권신공항 추진과 같은 경제성장을 제시했다. 부산일보 역시 사설 <‘성추행’ 오거돈 시장, 부산은 부끄럽고도 부끄럽다>(4/24, 23면)에서 피해자의 용기는 지우고 부산 시장의 성폭력 사실에만 집중했다. 해당 사실도 결국은 해결책으로 시정의 차질 없는 운영을 꼽았다.

그런 가운데 ‘오거돈 성폭력 사건’의 본질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나 부산시의 대응에 대한 보도는 미미했다. 그간 잘못된 성관념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행태가 왜 드러나지 못했는지, 어떤 조직문화와 관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층 취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시 대책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 대책에 대해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지만 여기에 주목한 추가 보도는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었으나 피해자의 용기로 성추행범 오거돈의 민낯을 드러냈고 무엇보다 부산은 성평등 가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길이 생겼다. 언론은 피해자가 마련해 준 소중한 기회를 허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성평등 가치 실현이라는 구호가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기대한다.

구·군 공무원들의 시청 농성, ‘일 떠넘기기’로만 보도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공무원들이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가 과중하다며 지난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구·군 공무원과 부산시 간에 노-정 협의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업무가 과부하됐고 사전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선불카드 수요 예측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산시 노조는 부산시와 노정 협의를 하고 있지만, 시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구·군 노조는 협의 채널이 없으니 소통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서로 ‘일 떠넘기기’?

노-정 협의 채널 만들자는 본질적 요구를 더 조명해야

이 소식을 일부 언론은 부산시와 구·군 공무원이 서로 ‘일 떠넘기기’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력 사태 부른… 갈등’, ‘코로나 업무 떠넘기기 싸움’, ‘재난업무 싸고 싸움질이나 할 때인가’라는 제목에서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프레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KBS부산과 KNN 리포트는 부산시와 구·군 공무원 간 입장 차이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고, 부산일보 사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해왔다는 사정을 헤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외 대부분의 스트레이트 기사는 구·군 공무원의 요구를 ▷변권한대행과의 면담 ▷노정 협의체 구성으로 정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부산시 입장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썼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노-정 협의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성한 사례가 없다, 불가능하다고 전합니다. 부산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옮긴 설명입니다.

<폭력 사태 부른 ‘부산시 구·군 재난지원업무’ 갈등> (부산일보 6.1)

...부산시 행정자치국 관계자는 “구·군 소속 노조와 노정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도 없을뿐더러 전국에 유사사례도 전무하다. 코로나19 업무와 관련해 시와 구·군이 갈등하기보다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산시-구·군 공무원, 재난업무 싸고 싸움질이나 할 때인가> (부산일보 6.1 사설)

<시-구·군 공무원 ‘코로나 업무’ 떠넘기기 싸움…시민은 싸늘> (국제신문 6.2)

... 이에 대해 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민생지원금과 재난지원금 지원은 모든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노정 협의체 구성은 다른 시·도에서도 전례가 없어 불가능하다”며 ... 시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은 혀를 내둘렀다 ...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을 돕는커녕 서로 일하기 싫어서 업무를 떠넘기는 것처럼 보인다 ...

<사회 재난에 조직 갈등 ...시민만 피해> (KBS부산 6.1)

... 구·군 노조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면담과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부산시는 “전례가 없고 제도적 근거도 없다”며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결국, 사회적 재난에 협업해도 모자랄 상황에

시청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조직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부산 공무원 조직 내부의 불통 행정에 따른 갈등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신 <재난지원금 업무 갈등 6일째 시청 접거농성> (부산MBC 6.1)

… 구·군 공무원노조는 "국가 재난지원금 신청 등 많은 업무를 일선 구군에 내려 보내, 부산시가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산시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시와 일선 구군 공무원간의 갈등으로 비쳐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주간시청 <부산시청 공무원 농성, 시선 엇갈려> (KNN 6.3)

노-정협의체 전례 없다는 부산시 설명 점검했어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구·군 소속 공무원이 구청이나 군청이 아니라 부산시와 대화를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 맞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도 전례가 없다는 걸 강조했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대구경북, 경남, 제주, 광주 등 부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무원노조 지역지부들이 노-정 협의 채널을 열어 구·군 공무원들과 시 국장이나 부시장, 도 행정부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 본부 투쟁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전국공무원노조가 바라는 건 '노정협의기구를 구체적으로 꾸리자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채널을 만들자는 것'이며 '가능하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되, 현안이 생기거나 필요시 수시로 만나 논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 '협의체 구성'을 주장했지만 '대화 창구 마련'으로 요구사항의 수위를 조정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애초 주장이 '협의체' 구성이었으므로 6월 초 기사는 '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견 타당합니다. 하지만 농성 기간 중 나온 기사를 종합해봐도 이번 갈등이 불거진 원인과 배경을 충분히 해설하기는 부족합니다. 시 관계자의 해명으로 끝맺음하거나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쓴 글을 인용하여 시청 공무원과 구·군 공무원 간의 노-노 갈등 구도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냉담', '싸늘'하기만 했을까요.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된 의료진을 걱정하고 감사하는 만큼 민원을 접수하고 그에 맞는 지원책을 연결하느라 수고하는 공무원의 수고로움을 헤아리는 시민도 있을 법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일선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는 공무원들과 부산시 사이에 노-정 협의가 필요한지, 과연 타당한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본질에 다가가는 보도가 아니었을까요. 덧붙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주민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시와 구·군이 역할분담을 잘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편이 생산적 논의가 되었을 겁니다.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 전략’이라는 악의적 프레임 씌운 조선일보

특히 조선일보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번 농성의 배경이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 전략’이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민주노총 깬 부산전공노 부산시청 농성 6일째... 시민은 불편하고 공직사회는 불만> (조선일보 6.1)

부산 전공노는 지역 16개 구군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이다. 부산시엔 시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부산공무원노조가 따로 있다. 이 노조는 민노총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광역지자체 공무원노조들의 모임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시청 주변에선 “민주노총이 광역지자체에까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시장없는 대행체제로 비상살에 놓인 부산시청 흔들기에 나선 것 아

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실제 이날로 6일째로 접어든 이들의 집회에는 각 구·군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산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 외에 민주노총 관련자들이 적지 않았다. 출입 게이트 앞 시위에선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민중당 부산시당, 반여도시침단산업단지 개발반대 시민대책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있었다. 전체 숫자로 보면 40~50명쯤 되는 ‘부산 전공노’ 조합원들보다 더 많았다.

이런 해석이라면 민주노총이 하는 모든 활동을 폄훼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업장에서 무슨 이유로 투쟁하든지 간에 결국은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이라고 갖다 붙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선을 긋고 보면 노동자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어떤 생산적인 논의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구·군 공무원들이 합법한 요구를 묵살시키는 악의적 프레임입니다.

<코로나 와중에... 부산시청 점거한 전공노> (문화일보 6.4)

...이곳은 부산의 중심이자 지하철역 통로로 왕래가 많은 곳이지만 난장판으로 변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 구군 노조, 시청 로비에서 5일째 농성...시청 공무원 “시민이 어떻게 볼까 소름돋아”> (조선비즈 6.1)

...부산시청 직원들은 구·군 공무원 노조의 농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한 시청 공무원은 부산 공무원노조 게시판에..."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할 때는 그 목적도 정당해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지금 1층에 있는 이들은 노숙자를 방불케 하는 모습과 아무 생각이 없는 태도를 볼 때 소풍 온 철부지와 같다"고 비판했다...

후속 보도는 부족했다

공무원노조 부산지부는 6월 5일 부산시와 노-정 협의채널을 만들기로 하고 농성을 접었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언론 중에서는 당일 저녁 KBS부산만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창녕 아동 학대 사건 리포트, 자극적 요소 더욱 부각한 연출 과도했다

창녕 초등생 학대 사건은 지역 지상파방송 중에서는 KNN이 유일하게 주요 리포트로 다뤘습니다. KNN은 지난 12일 첫 번째 리포트 <물고문, 쇠사슬 '부모 아닌 악마였다'>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9살 아이의 지옥 같은 여정을 재구성”해서 보여줬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고통’과 탈출 당시의 긴박감을 강조한 스토리텔링을 위해 이 뉴스는 배경음악을 활용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찍힌 편의점 CCTV 화면과 이 아동이 살던 빌라 위를 촬영한 드론 샷, 작업용 접착 총, 욕조를 촬영한 화면 위에 시종일관 긴박감을 자아내는 음악을 깔았습니다. 뉴스의 말미, 기자가 “아무리 무거운 처벌을 내려도 학대가 아이에게 남긴 고통을 덜거나 지우지는 못할 것입니다”라는 멘트를 할 때는 배경음악이 돌연 슬픈 분위기로 바뀌기도 합니다.



KNN 6월 12일 <물고문, 쇠사슬 '부모 아닌 악마였다'>

이번 사건은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가 개별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춰 가해자의 잔혹함을 유독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를 확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개인이 저지른 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대 방법과 도구, 탈출 과정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는 특히 경찰 수사가 발표되고 난 후, 그 내용을 옮기면서 심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도 8일에서 10일까지는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식, 담임교사의 가정방문이 차단됐었던 사실을 기사로 내다가 경찰 발표 이후인 12일에 각각 <쇠 목줄 채우고, 발 지지고...9살 소녀 난간 타고 필사의 탈출>(국제신문, 2면), <쇠사슬 목줄에 하루 한 끼...다락방에 갇혀 살았다>(부산일보, 3면)를 주요 면에 배치함과 동시에 학대의 잔혹함을 헤드라인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최근의 아동 학대 사건 보도에서 ‘의붓아버지’, ‘계모’라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특수함을 부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서술은 ‘계부’, ‘계모’가 학대의 원인이라는 편견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학대 가해자는 친부모인 경우가 77.2%입니다. 병력 관리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해자가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고 보도하는 것도 역시 성급한 진술입니다.

KNN은 14일 <<뉴스아이>> <‘창녕 아동학대’ 계부 구속영장 신청>과 15일 <<모닝와이드>> <자녀 학대, 법제화로 막을 수 있을까?>에서 법무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인데, 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게 된다는 것과 체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쟁점이 있다며 상황을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잇따르는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모으는 데는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큼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리포트처럼 선정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예타 통과, 집값 상승 부추기는 기사 꼭 필요했나

부산일보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제 23251 호 3

“부산 중심지 24만㎡ 풀린다” 서면 상권·집값 들썩

서면 상권 서쪽으로 확장 예상 시민공원·메디컬타운 시너지로 부산 대표 상권 명성 회복 기대 예타 시작 때부터 주변 집값 상승 문양 아파트 P 1억에 매물 품기

부산 범천동차량정비단 이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면 상권이 크게 확장하면서 부산 중심지의 옛 명성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 11일 정부의 예타를 통과한 철도차량정비단은 면적이 24만 1000㎡(7만 3000평)에 달한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전비를 4974억 원 총 6293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부산 강서구 송정동 부산신항역 근처로 철도차량정비단을 이전한다. 이후 기존 정비단 부지는 1년간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거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1904년 건설된 철도차량정비단은 100년 넘게 도심 확장을 막고, 단행시계 도심 슬럼화를 초래했다. 현재 철도차량정비단은 신천대로, 범천로, 신암로, 가야대로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길쭉하게 자리잡고 있다. 가야대리교차로에서 발전지해리도까지는 약 1.3km에 달한다. 이로 인해 길에 걸리고, 주변은 슬럼화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인지도도 드물다. 철도차량정비단의 이전으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서면 상권의 변화다. 신천대로와 신암로를 건너 서쪽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사이에 이렇듯 대표는 “정비단 이전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서면 상권의 확장”이라며 “과거 부산 중심상권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상업진흥회

협회 박상민 부지부장도 “근처에 부산시민공원, 메디컬스트리트 등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원도심 부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변 주택들의 가격 상승도 기대된다. 먼저 철도차량정비단 북쪽으로 접한 서면노블랜드상가의 경우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 아파트 주민 이 모(45) 씨는 “45평 기준으로 4억 3000만 원 정도에

그런데”며 “입주한 지 13년 정도됐지만 정비단 탓에 자가 상승에 제약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암로 주변으로 추진되는 범천4주택재개발 구역, e편한세상사면센트럴(1060세대, 2022년 6월 입주 예정) 등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기아선과 신천대로 사이의 공간도 서면 상권의 확장 가능성에 따라 자가 상승

이 예상된다. 부산광역시중계사협회 박찬동 부장은 “부산광역시중계사사무소 인종대미 소장은 ‘자녀 예타 들어간다고 할 때부터 제법 올랐다’며 ‘노블랜드상가사면노블랜드 프리미엄(P)이 1억 원 정도 붙어 있는데, 찾는 사람은 많아도 매물 자체가 없다’고 귀띔했다.”

“자녀 예타에 들어가면서 이미 가격에 반영했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녀 예타를 들어갈 때부터 이전이 가점사실화되면서 이미 P가 많이 붙은 상태”라며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좀 더 오른 여지는 있지만 현재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민 부지장은 “예타 통과를 계기로 또다시 서울시의 투기세력들이 개입하면서 다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1년간 코레일, 부산진주공과 이전지개발 사업의전담수립 용역을 진행한다. 도심기능재편, 도심불균형해결, 미래성장동력인 지식기반산업 인프라 등을 위한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 교수는 “정비단 이전은 철도지하화와 연계해 부산을 부흥할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개발이 아닌 환경을 위한 기업, 상업시설 등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낙후된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10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예타”를 정부의 민자택지 조성 사업 중의 “자녀 예타”로 지칭하고 “도” 사업도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 사업이 되면 원칙적으로 동시공급도 가능할 것이다. 민간 제안자인 GS건설은 당초 2021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대사는 “앞으로 도시 기능이 강화되면 부산시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ew@ 부산일보, 김미연 기자 mik@busan.com

△부산일보, 6/15, 3면

부산일보는 15일 <“부산 중심지 24만㎡ 풀린다” 서면 상권·집값 들썩>(3면)에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전했습니다. ‘범천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6/12) 이후의 첫 후속 기사였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총 7명의 인터뷰이가 등장하는데 이중 4명이 부동산 전문가였고 이들은 원도심 일대의 부동산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사는 범천동 일대의 아파트 중 특정 브랜드 아파트 이름을 세 차례 등장시키며, 인터뷰이의 입을 통해 해당 아파트가 이번 재개발의 직접적인 수혜자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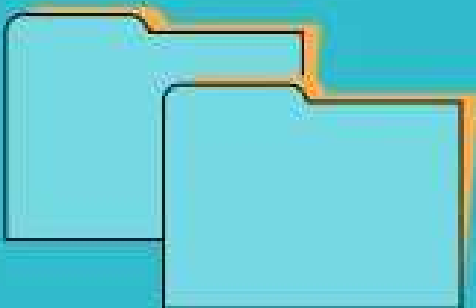
범천철도차량정비단 이전은 부산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해당 소식은 부산 지역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 <범천동 철도기지 이전 예타 통과··2022년 착공>(국제신문, 6/12, 1면),
- <도심 장애물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확정>(부산일보, 6/12, 1면),
-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확정··원도심 개발 가속도>(KBS부산, 6/12),
-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원도심 대개조 첫발>(부산MBC, 6/12),
- <도심 장애물 ‘범천동 철도기지 이전 확정>(KNN, 6/12).

보도의 방향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KBS부산 <철도차량 정비단 이전 확정…원도심 개발 가속도>는 원도심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난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를 표하진 않았지만 국제신문 역시 <범천철도기지 100년 만의 재개발…철도公 ‘상업성’ vs 부산시 ‘공공성’ 줄다리기 예상>(16일, 3면)을 통해 부지 개발의 방향성을 기사화했습니다. 반면 부산일보는 12일 1면에 이어 2면에도 해당 소식을 실었는데, <“서면과 100년 단절 ‘족쇄’ 풀렸다” 원도심 개발 기폭제>에서 “최근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변 지역 땅값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이전적지)와 그 일대는 크게 발전할 전망이다”며 원도심 발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7월

표아보기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 노동자 김진숙 복직 투쟁, 지역 언론 관심 저조한 가운데 KBS부산 <뉴스7>은 달랐다

지난달 23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김진숙 조합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진숙 조합원(현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로 86년에 노조 활동이 빌미가 되어 해고됐습니다. 복직을 포기하면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회유에도 자신이 원하는 건 명예로운 복직이라며 거부해온 김 지도위원이 다시 복직 투쟁에 나섰다는 소식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경향신문] 김진숙 “내 목표는 정년이 아니라 복직”
- *[민중의 소리] “제 꿈은 정년 아닌 복직” 마지막 복직 투쟁 나선 김진숙 지도위원
- *[한겨레] ‘정년 앞둔’ 한진중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을 아시나요?
- *[프레시안] ‘빨갱이’ 몰려 한진중공업서 해고당한 노동자 김진숙의 ‘복직 투쟁’
- *[여성신문] ‘희망버스’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자, 마지막 복직 투쟁 나선다
- *[연합뉴스] “일하고 싶다” 한진중 해고노동자 35년째 복직 투쟁

한진중공업은 부산의 대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유일한 여성 용접사로 일하다 해고된 김진숙 지도위원의 마지막 복직 투쟁을 지역 언론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신문은 6월 23일 4면 하단에 <한진중 해고자 김진숙 씨, 마지막 복직 투쟁 나선다>를, 부산일보 같은 날 11면 우측 중단 2단 기사로 <‘희망 버스’ 상징 김진숙 지도위원 ‘해직 35년’ 한진중공업 복직 투쟁>을 실었습니다.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85호 크레인에 올라 무려 309일간 고공농성을 펼친 부산지역 노동 인사 김진숙 지도위원. 그의 복직 투쟁 소식에 지역 신문이 보여준 관심의 크기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방송 뉴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산MBC와 KNN은 관련 보도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KBS부산 뉴스9는 <한진중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 복직 투쟁 시작>(6/23)을 보도했지만 이마저도 마지막 순서에 단신으로 처리돼 전달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KBS부산 뉴스7 <짤막 K토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짤막 K토크>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11분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1분 30초 리포트라는 시간 제약을 깬기에 35년 전 해직 당시 노동 조건이 어땠는지부터 최근 김진숙 지도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노동계 현안까지 두루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KBS부산 <뉴스7>, 7/1, <짚막 K토크> 화면 캡처

무엇보다 <해직 35년 만에 다시 나선 복직 투쟁>(KBS부산 뉴스7, 7/1) 편은 ‘김진숙 조합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 이후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81년에 한진중공업에 입사해 86년에 해직된 김진숙 지도위원. 2020년인 올해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정년이기도 합니다. 올해 해결하지 못하면 김진숙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의 영원한 해고 노동자로 남게 되는 건데요. 지역 언론의 관심이 더욱 간절해지는 이유입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문제 해결에 지역 언론 또한 적극적인 취재와 후속 보도로 함께해 주길 기대합니다.

-

큰 비 피해 이후, 또 호우 주의보 부산지역 방송3사는 어떻게 보도했나

지난 23일 부산에 큰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와 상가가 침수되고 인명 피해까지 일어난 큰 재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방송은 정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내보내기도 해서 지역민들은 재난 상황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27일 다시 호우 주의보가 내린 상황, 부산지역 방송 3사의 비 소식 관련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KBS부산, 비 피해 대비시설 차례로 짚으며 물난리 고질적인 원인 분석해

KBS부산은 <[재난기획] 반복되는 물난리...근본대책은?>에서 비 피해에 대비하는 시설인 배수펌프와 빗물저장시설 그리고 하수관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빗물을 퍼내는 배수펌프장은 부산 전역 59곳에 설치됐지만 시간당 80mm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11곳에 불과하고, 펌프가 지상에서 겨우 50cm 띄워져 있어 물이 조금만 차올라도 가동이 중단된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빗물저장시설은 동부산에만 집중돼 원도심 지역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하수관은 비가 밀물과 겹칠 때를 대비해 더 큰 용량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물난리는 고질적으로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KBS는 문제는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관할 지자체인 각 구와 부산시는 이런 시설을 증설하거나 교체할 예산이 부족해 정부의 재난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KBS부산은 저녁뉴스에서 재난CCTV를 통해 부산지역 6곳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대처 요령을 짚었고 밤 10시에는 20분 가량 호우특보를 내보냈습니다.

[KBS 부산 (27일~29일) 호우주의보 관련 보도목록]

7/27(일)

<시간당 최대 30mm 비...이 시각 민락항>

<재난 CCTV로 본 이 시각 부산 상황>

<북구도 끝나기 전에...잠기고 무너질까 '불안'>

[재난기획] 반복되는 물난리...근본대책은? <물난리 반복되지만...배수펌프장 '역부족'>

7/28(화) <

'침수 지하차도' 참사...원인 조사 본격화>

[재난기획] 반복되는 물난리...근본대책은? <침수 막을 빗물 저장시설도 '지역쏠림'>

7/29(수)

<쓰레기로 뒤덮인 식수원...하수 처리도 '몸살'>

[재난기획] 반복되는 물난리...근본대책은? <밀물 겹친 폭우에 역류...하수도 용량 '한계'>



△ KBS 부산 (27일~29일) 호우주의보 관련 보도목록

부산MBC, 컨트롤타워 없는 허술한 행정 지적

부산MBC는 27일 밤 늦게 내릴 큰비에 대비하라는 리포트를 2건, 재해지역을 돌아보는 리포트를 1건 냈습니다. 이날은 오후 5시경과 밤 10시쯤 전국 정규방송 중간에 6~8분 길이로 부산 상황을 전하는 호우 특보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28일 <장마로 드러난 '불안전 도시' 부산>에서 부산지역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허술한 행정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부산MBC (27일~29일) 호우주의보 관련 보도목록]

7/27(월)

<부산 또 '물폭탄' 예고...오늘 밤 고비>

<내일까지 200mm 비...만조 시간 겹쳐 '비상'>

<피해 복구도 안 됐는데...'재해 지역' 또 비상>

7/28(화)

<장마로 드러난 '불안전 도시' 부산>



△ 부산MBC (27일~29일) 호우주의보 관련 보도목록

KNN, 부산과 경남 비 피해 입은 주민 목소리 담았다

KNN은 27일에 첫 리포트와 네 번째 리포트에서 오늘 새벽 1시가 고비이니 비 피해에 대비하고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동천이 범람했던 지역과 산사태가 일어난 산청 동의보감촌 현장을 찾아가 이재민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동천 주민들은 중요한 살림 집기를 높은 층으로 옮겨놓고 건물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놓는 임시방편 조치는 했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인 답답함을 토로했고, 산청의 경우 군에서 옹벽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해 부실공사 의혹이 인다고 했습니다. 28일에는 역시 산사태로 사라져버린 사과농장을 찾아갔고 29일에는 코로나에 장맛비까지 겹쳐 해운대 시장 상인들이 울상이라고 전했습니다.



△ KNN (27일~29일) 호우주의보 관련 보도목록

부산MBC ‘부산 체육계 실태’ 연속 보도로 만연한 폭력과 비리 구조적 문제점 알려

철인3종 종목 최속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체육계에 만연된 폭력 관행이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MBC는 故 최속현 선수 사건을 단순 보도로만 그치지 않고 폭행과 비리 등 부산 체육 현장의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유도, 카누, 배구 등 지역 체육 현장에서 일어난 폭력과 비리, 그리고 근절 책임이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부산시 체육회의 비호와 방관 속에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13건(3건 단신 포함) 보도로 이어나갔습니다.

제자폭행 경력 유도코치 재임용 단독보도, 학교와 교육당국 조치 나서



△ 7월7일, <제자 폭행해 유죄 받은 코치 또다시 학교로>

7월 7일 <제자 폭행해 유죄 받은 코치 또다시 학교로>에서 제자 폭행으로 유죄를 받은 유도코치가 기간제 교사로 임명된 사실을 단독보도 했습니다. 현행 법상 아동학대, 성범죄 이외의 범죄는 ‘금고형’ 이상인 경우에만 임용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해당 학교도 이 사실을 모른 채 해당코치를 채용하게 되었고, 해임사유가 없어 사직 처리할 수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5

일 후속보도에서는 해당 코치가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문제화 되자 결국 22일 해당 코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MBC는 이 소식과 함께 교육청이 교사 임용 제한 강화를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계 폭행·성추행 사건 축소와 스포츠공정위의 불공정한 징계 등 부산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점 짚어

폭행과 비리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와 징계 권한을 부여받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부산시 체육회가 사건을 축소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7월 8일 <카누팀 폭행·성추행 사건 ‘축소’ 정황>에서는 1년 전 일어난 강서구청 카누팀 폭행·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감독의 축소 보고와 관계 기관들의 허술한 조사를 지적했고,



△ 7월 8일 <카누팀 폭행·성추행 사건 ‘축소’ 경황>

육회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도 없이 고발한 선수만 재계약에서 제외 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체육회를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지적
스포츠인권조례 제정 등 타 지역 사례 소개도**



△ 7월 23일 <‘제2의 최숙현’ 곳곳에···“전수조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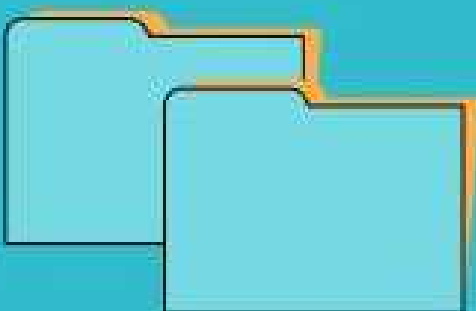
대한체육회 산하 조직이라는 이유로 직접적 통제권이 없는 제도적 한계점을 조명하여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인권조례를 제정한 제주도 사례를 소개 하며 지자체장이 직접 지역 내 스포츠 인권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방안을 제시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산 MBC ‘부산 체육계 실태’ 연속보도는 부산 체육계의 폭행·가혹행위 뿐 아니라 부산 시 체육회 전반의 문제점을 지역민에게 알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속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들의 진행 상황과 개선 여부도 점검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체육계 관행을 공론화하여 교육당국과 교육관계자, 체육계 관계자가 이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점검하게 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사회감시기능에 충실한 보도로 평가됩니다.

20일 <“회장님 명예 훼손됐다” 황당한 스포츠공정위>에서는 지 도부의 문제를 지적한 체육인에 게 과도한 징계를 내려 갈등을 빚은 유도회 공정위의 문제도 짚었습니다. 또 28일 <훈련비 횡령 의혹 제기했다가·선수만 직업 잃어>, 29일 <‘훈련비’에 ‘상금’까지·사라진 돈 어디로?> 보도에서는 부산시 체육회 배구 팀 선수의 횡령 고발에도 시체

8월

표아보기



내년 보선 출마예정자 SNS 활동 소개하면서 특정 정치인 유독 부각한 부산일보



△ 부산일보, 8월 5일, 5면, 머리기사

부산일보 <내년 부산시장 보선, 출마예정자들 SNS는 벌써 ‘후끈’>(8/5, 5면) 기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의 SNS 활동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시대’에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긴 정치인들이 온라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건데요. 해당 기사가 언급하고 있는 정치인은 총 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명,

미래통합당 4명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에 쏠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왜 이들 5명의 온라인 활동만 소개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소개된 5명의 정치인들에게 할애한 비중과 내용도 달라 특정 정치인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각 정치인을 언급한 ‘행’ 수를 세어봤습니다(<표1>).

이진복 (미래통합당)	장제원 (미래통합당)	이언주 (미래통합당)	박민식 (미래통합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27행	22행	13행	10행	4행

<표 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정치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복 전 의원으로 27행에 걸쳐 이 전 의원의 SNS 활동이 소개됐습니다. 기사가 언급한 이 전 의원의 SNS 활동으로는 최근 개설한 네이버 밴드와 아직 개설 하지도 않은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진복 전 의원의 네이버 밴드가 비공개 계정임에도 멤버 수가 400명을 넘겼다며 이 전 의원 지지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의 유튜브 방송 ‘도전’ 소식과 함께 채널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에는 이미 활발하게 SNS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제원 의원, 이언주 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본격적으로 SNS 활동에 나선 이 전 의원의 행보를 더 비중 있게 보도한 점은 특정 후보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 계기 마련한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8월 4일부터 6일, 3일에 걸쳐 기획기사 [산재는 기업범죄대를 연재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여러 면면 중 국제신문이 주목한 건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상>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건들의 판결문 81건을 분석해 산재사건에서 피고인 양형 근거가 되는 단어들

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 ‘전과 없음’, ‘반성’, ‘합의’... 국제신문은 판결문 중 ‘이유’에 해당하는 문장을 분석

한 결과 산업재해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기업범죄 임에도 이보다 앞서 ‘피해자 과실’, ‘합의’ 등이 양형 사유로 인정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적합니다.

과연, 정말, 피해자의 잘못일까?

국제신문은 2017년 10월 8일, 추석연휴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하청노동자 사망사건을 다시 조명합니다. 안전난간은 양방향 중 한쪽에만 있었고 안전대 자체는 지급받지도 못했으며 추석연휴라는 이유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소장은 출근을 하지 않은 날 두 명의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산재사고 역시 ‘자백’, ‘반성’, ‘합의’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선 기업인들은 중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재범률 97%. 부산에서만 일주일에 1명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 바로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국제신문의 기획 [산재는 기업범죄대는 부산지역 판결문 분석을 통해 양형 근거를 드러냄으로써 산재사고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한 좋은 보도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를 계기로, 부산항 위험물질 관리 현황과 대책 짚어본 부산일보와 부산MBC

8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제 23289 호
사회
부산일보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의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산암모늄' 약 2160t이 부산항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양은 베이루트 항에 보관된 질산암모늄 2750t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부산항에는 질산암모늄 이외에 다른 위험 물질 1200여t도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기관에서 즉시 모든 안전 사고의 대책 마련에 분주할 모습이다.

016 부산시항해관리소(이하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항 9개 컨테이너 운영사가 9개 부두에서 레바논 폭발 사고 원인 물질로 추정되는 질산암모늄 1087TEU를 보관하고 있다. 1TEU는 길이 20피트의 컨테이너 박스 17개를 나타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2160여t 다른 위험 물질 1220t도 보관 관리 책임지는 안전관리사 상주 부산해수청 '폭발 위험성 없어'

내는 단위이다. 부산해수청 조사 결과, 질산암모늄이 보관 중인 1TEU 무게는 20t 이상으로, 부산항에는 약 2160t의 질산암모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을 비료인 질산암모늄은 화학 등 무기 제조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유해 물질이다. 질산암모늄은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번 레바논 폭발 참사에서도 베이루트

트 항구 창고에 약 2750t의 질산암모늄이 6년간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 지진관측소는 이날 폭발이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다고 추정했다. 앞서 2004년 4월 북한 용원역 열차 폭발 사고 당시에도 질산암모늄을 실은 화물 열차에 불꽃이 옮겨붙으면서 폭발이 발생했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에는 질산암모늄 이외에 염산산 나트륨(487TEU), 질산칼륨(137TEU) 등 또 다른 위험물질 총 1220t(61TEU)도 보관되고 있다. 이들 위험물질은 수출이나 환적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는 수입했다.

현재 이들 위험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위험물 옥외저장소'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의 원인 물질인 '질산암모늄' 2160t이 부산항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부산일보DB

추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레바논 사고 이후 7가지 폭발사고 위험 물질과 관련한 부산항 보관 용량 등을 조사해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부산항에 보관 중인 폭발 사고 위험 물질 모두 관련 절차와 국제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 보관 중 폭발 위험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4일(현지 시간) 대규모 폭발 참사가 발생해 70여 명이 숨지고 3700명이 다쳤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으며, 이 폭발로 항구가 크게 훼손됐고 인근 건물이 파괴됐다.

김성현·박진석 기자 kwak@busan.com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의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산암모늄'이 부산항에도 있다는 사실을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주목했습니다. 부산일보는 8월 6일 8면에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 기사를 부산MBC는 8월 6일 첫 순서로 <부산항 위험물 관리, '컨트롤타워' 없다>를 리포팅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 보도들은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부산항의 위험물 관리 실태를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큰 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부산항 관리체계를 돌아본 부산일보와 부산MBC. 지역 언론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됩니다.



지난 4일, 지네(연간 시간)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130여 명 숨쳐

부산항 위험물 정치장·질산암모늄 현황

부산신항 → 27곳	질산암모늄 1,740톤
부산북항 → 23곳	

자료: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위험물 관리 책임 기관

부산항만공사	선석배정, 연회피막
부산해수청	위험물 선박 인출항, 허역
터미널 운영사	위험물 정치장 설치관리
부산소방본부	육상 위험물 점검관리



포항근 / 안국대(전) 해운경영학부 교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항만공사나 해양수산청, 터미널 운영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MBC <<뉴스데스크>> (8/6)

'안병길 의원은 가방을 하나 둘러메고...'라며 자사 사장 출신 국회의원 정책투어 소식 유일하게 보도한 부산일보

부산일보
2020년8월12일
8면

'정치 하하기' 8월에도 현장 챙기는 PK 의원들

**최인호·안병길·이채익 의원 등
북항·해양 기관·원전 잇단 방문**

이른바 '정치 하하기'로 불리는 8월, '여의도'를 잠시 벗어나 현장 행보에 나선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21대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속 상임위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가방을 하나 둘러메고 2주간 서해안 남해, 동해에 있는 항만과 해경, 해양관련 기관 등을 방문하는 '항만로드' 정책투어에 돌입했다. 10일 오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과 컨테이너터미널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해경 서해5도특별



최인호 안병길 이채익

안 의원은 "해양수산 관련 이슈가 있는 곳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생생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여름휴가를 겸해서 현장을 다닌다"며 "책상에 앉아서는 듣지 못했던 이슈들을 눈으로 보면, 특히 외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도 바쁘다. 그는 지난 10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 1호기를 찾는 등 연일 탈원전폐기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결과 발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의 부당성이 입증된다"고 해도 즉시 재가동

이 힘들겠지만, 정권교체 이후라도 월성 1호기를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1일에는 탈원전폐기 시민단체(원자력 살리기국민행동)의 월성원전 관련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이 의원은 집중호우 산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산지 태양광 개발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도 틈 내 현장을 찾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북항재개발 대원칙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공성을 높여 부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부산일보는 8월 12일 자 8면 <'정치 하하기' 8월에도 현장 챙기는 PK 의원들>에서 여의도를 떠나 현장 행보에 나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안병길, 이채익, 최인호 의원을 소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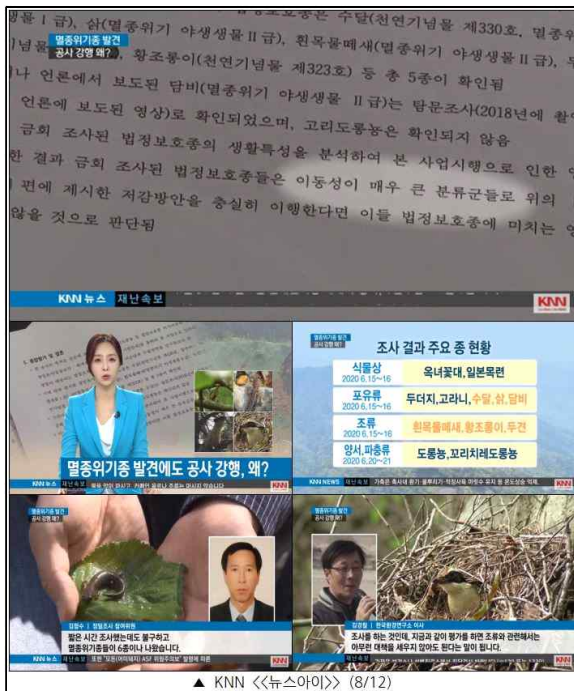
해당 기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소개한 현장 행보는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의 '항만로드' 정책투어였습니다. 안 의원의 행보는 전체 68행 중 31행에 걸쳐 언급돼 기사 내용의 45.6%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니 "10일 오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과 컨테이너 터미널을 시작으로 ... 11일에는 국립해양박물자원관 (충남 서천)에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점검한 뒤 ... 전국 해안도시 곳곳의 해양수산 관련 이슈가 있을 만한 곳을 전부 훑어보는 강행군이다"로 날짜별 투어 일정을 나열한 스케치 기사에 불과했습니다. 내용은 '정책 투어에 돌입했다', '현안을 살폈다', '조성사업을 둘러봤다', '전부 훑어보는 강행군이다' 수준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동정보도는 자칫 정치인 이미지 메이킹, 홍보로만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병길 의원이 여름휴가를 겸해 떠난 '항만로드' 정책투어 소식을 전한 언론사는 부산일보가 유일했습니다. 공공롭게도 안 의원은 이 부산일보의 사장 출신 정치인입니다.

KNN 사송신도시 멸종위기종 보호없이 공사 강행 고발하고 허술한 항만검역, 해수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 꼬집어

KNN은 12일 <멸종위기종 발견에도 공사 강행, 왜?>에서 양산 사송신도시 조성 공사가 희귀생물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재개됐다고 고발했습니다. 지난 5월 KNN은 사송신도시 예정지에서 담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 6종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LH는 환경단체와 면밀한 환경조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중단했는데요, 이후 환경 보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한 겁니다.



LH가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재개한 이유는 용역보고서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식물상 정밀조사 보고서>에 이번에 발견된 멸종위기종이 대부분 '이동성이 매우 큰 분류군'이라서 공사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KNN은 한국환경연구소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식이라면 (이동성이 큰) 조류에 대해서는 보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 용역업체가 협의 없이 보고서 종합결론을 내렸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용역보고서 작성을 은밀하게 진행한 것에 의도는 없었는지, 왜곡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허술한 항만검역, 해수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 꼬집은 KNN <뉴스아이>

부산에서는 항만을 통한 지역감염이 일어나 2차 코로나 파동이 일지 않을까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은 항만검역이 허술한 이유를 짚었습니다. 선박 수리업체가 외주 직원을 쓰다 보니 출입자 명단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전자명부를 도입하자고 했지만, 항만을 관할하는 해수청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답답함을 토로하는 상황. 현 제도의 한계 때문에 연이어 항만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KNN보도는 코로나 재난 시기에 해수부의 대응이 여전히 안일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동래구청 신청사 발굴유적 공개 안한다 지적한 KBS부산

KBS부산은 동래구청이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9월 동래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유물이 나오면서 발굴과 시굴이 이루어졌는데 동래구청이 발굴 문화재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동래구청은 발굴 진척 정도를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문화재 학술 자문회의와 전문가 검토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KBS부산이 문화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재한 결과 그동안 유물조사 발굴을 진행한 현장 사진과 기록이 있고 하층 유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부산은 동래구청이 거짓말을 했다며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중간보고서 발표, 희소식으로만 보도할 일이었다

지난 5일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마련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고회가 무산됐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본질적 대책은 빠뜨린 채 새로운 취수원 확보에만 주력했다는 게 환경단체의 반발 이유였습니다. 지역언론 5개사가 모두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 일부 매체는 중간보고서의 한계보다는 부산에 항강 물을 끌어올 수 있게 된 데 주목해서 ‘청신호’, ‘먹는물 불안 씻는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부산일보는 6일 1면 머릿기사 <...먹는물 불안 씻는다>에 이어 3면 <영남 5개 시도 '30년 먹는 물 갈등' 상생 물꼬 텃다>에서 '이번 통합물관리 방안이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감',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포함된다면 일정은 더 당겨질 수 있다'라며 환영했고, 부산MBC는 항강 물이 '낙동강은 물론 남강보다도 수질이 좋고, '부산시민의 30년 숙원이 해결될 단초를 마련'했다며

성가에 주목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부산일보는 작년 프랑스 파리 상수도 사업본부의 사례를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취수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취수원에서 물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어야 함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기획>부산 '물 차별' 더는 안된다-(5) 취수원 다변화의 힘-파리>(2019.7.8.)

그런데 새로운 취수원 확보 노력 외에 낙동강 본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낙동강은 보를 개방해서 물을 흐르게만 해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면서 보 개방이라는 결정적 해결책을 빼놓은 중간보고서는 '알맹이 없는 껍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남지역 시도지사들 역시 보 개방 문제는 외면하면서 낙동강 물관리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 시켜 달라고 나선다며 토목사업이라는 '잣밥'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형국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와

부산MBC 보도에는 그동안 보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라는 정도로 간략하게만 언급했습니다.

국제신문과 KNN은 환경단체와 낙동강 유역 농민의 입장을 좀 더 무게 있게 다뤘습니다. 통합물관리 방안의 실행까지가 순탄치 않을 거라며 반대 목소리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신문 <낙동강 통합물관리, 시작부터 파행> 8월 6일 1면)



낙장 행정 비판하는 목소리는 쏙 빠졌다
지자체, 그린뉴딜 토목사업에 눈먼 건 아닌지 감시해야

PD수첩은 앞서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7.21.방송 MBC)에서 보 개방을 포함한 낙동강 복원이 늦어지는 것이 환경부와 지자체장들의 의지 부족, 지역민 눈치 보기, 치적사업 이런 핑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복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으로 포장을 받은 국토부 공무원이 현재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과 중책을 맡았고, 조사평가단이 제출한 보 처리방안도 결정 책임을 미루며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행여나 ‘여론을 살핀다며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4대강 복원을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후반부_PD수첩 (7.21. 방송 MBC)

환경부는 여론을 더 수렴한 이후, 다음 달 최종보고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언론은 행정

당국이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겁니다. 지자체가 국책 사업을 유치했다며 홍보할 때 지역언론이 편승해 토목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 기보다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끈질기게 감시해주길 바랍니다.

광복절 기념사가 매 맞을 일인가 정치인 발언 나열로 정쟁 부각한 지역 언론

지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친일잔재가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고 완전한 친일청산을 촉구했습니다. 9분 남짓의 기념사에는 대한민국 화폐의 얼굴이 되지 못한 독립운동가, 애국가 작곡가의 친일행적, 국립헌정원에 묻혀 있는 친일파에 대한 광복회 입장과 함께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바람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기념사의 취지와 전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논란이 된 일부 대목을 발췌해 전 부인 양 보도하는가 하면, ‘친일파 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제안을 ‘파묘 논란’으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역 언론 기사로는 부산일보 2건, 국제신문 1건이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은 8월 18일 자 5면에 <8·15발 보혁 갈등…與는 전광훈, 野는 김원웅 때리기>라는 큰 제목을 달아 거대 양당의 타깃이 된 인물로 김원웅과 전광훈을 소개했는데, 이 큰 제목 아래에 <민주당 ‘광화문 불법’ 통합당 책임론 부각>과 <통합당 “국민 이간질이 매국” 광복회장 못매>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가 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현실화한 전광훈 목사와 ‘친일청산’을 골자로 기념사를 한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전혀 다른 사안을 ‘보혁 갈등’으로 뭉뚱그려 상반되는 사안인 양 보도한 셈입니다.

특히 <통합당 “국민 이간질이 매국” 광복회장 못매>(국제신문, 8/18) 은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내용은 일절 전달하지 않은 채, “미래통합당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와 관련한 국제신문의 첫 기사이자 유일한 기사임에도 기념사 내용에 대한 소개는 빠져있어 결과적으로 독자는 통합당 의원들의 비판으로만 기념사를 이해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념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 통합당 의원들의 발언에만 주목하다 보니 기사 제목에서 ‘못매’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기념사 내용 중 일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언론의 역할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와 맥락을 설명해주는 것이지 특정 입장에 편승해 논란을 ‘잘못’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부산일보 <김원웅 ‘친일 청산’ 기념사 놓고 다시 불붙은 이념 논쟁>(8/17, 8면)은 “해방의 기쁨으로 하나가 돼야 할 광복절이 정쟁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기사의 전반부에 기념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만 소개한 데 이어 통합당 의원들의 원색적 비난들 예를 들면,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매국행위”, “편 나누어 찢어발기고 증오하고”,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갈무리했는데요, 기념사 내용 일부와 이 일부에 대한 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결합해 논란을 더욱 부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기념사 내용에서 논란이 된 ‘국립묘지법 개정’은 갑작스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광복회는 지난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던 이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혹은 ‘이념 논쟁을 부추겼다’라는 논란거리로만 다루기보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제안의 맥락과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국제신문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정치 5

8·15발 보혁 갈등… 與는 전광훈, 野는 김원웅 때리기

15주년을 앞둔 올해 8·15광복절의 추후행사가 정치권을 갈라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사를 통해 “매국이 부경” 발언과 인사 60명의 국립묘지법 개정 등 전일 행사를 주장했고,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권은 “국민 이간질”이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전광훈은 사당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한 보수단체는 광복회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보혁갈등”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광복 75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념갈등과 전·후배의 간헐적 폭력이 겹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광훈 코로나 감염에 정치권 발칵

병소 보수정당 인사와 접촉 잦아 국의 앞 순복음교회 확진자 악재 임시국회 앞두고 여의도 비상

집회에 참여한 회원 의문으로 현재까지 통합당 출판부 의원이 유살하게 파악됐다. 총 의원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전광훈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충남 홍성)에서 상정원 집회 참가자 3명 사망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전 목사가 있던 곳과 같이 떨어진 장소였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이 당시 집회에 참여한 야권 정치인들이다. 이들 외에 또 누가 집회에 갔는지 정치권에서 파악할래가 한창이다. 그들은 여의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끼리의 교류도, 전 목사 자신도 정처권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받기까지 전 목사가 직접적으로, 또는 그의 주변인들을 통해 여의도 정치권에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수만 명이 참여한 집회와 인사로 인한 전 목사가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곧대 정치권 인사들도 만날 수 있을 수 있다.

김영환 기자 ca@kookje.com

민주당 ‘광화문 불법’ 통합당 책임론 부각

“방역 방역 당장 멈추라” 경고 홍문보 등 참격자 제명 주장 “국민 안전·법치 저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에 대해 명백을 가하면서 미래통합당 책임론까지 이어졌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17일 국회 기자 회견에서 “전 목사의 행동은 감염병 차단 노력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전 목사의 행동에 대한 국민의 인내와 관용에 대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부 교회의 집회 강행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법치정의를 위협하는 국민 안전과 법치를 저버린’ 것이라고 경고하며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통합당 지지 보수층에는 코로나-19가 ‘방역’의 의문한 제재로 된 입국포장을 하지 않고도 ‘전 광문 목사와 미래통합당은 방역 방역’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등화전시장 앞에서 열린 광복 75주년 기념 집회에서 전광훈 사당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www.kookje.com

통합당은 전날 논평에서 “방역이 위헌”이라고 강조하면서 광복회 집회에도 해산 언급하지 않았다. 이틀 단계를 보수 세력에 밀려선 것도 영향력을 가진 계층의 식별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전 목사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전 목사를 비난하는 행위에도 적대적이다.

야권인 당 대표 후보는 통합당을 향해 “광복은 집회를 대하는 태도, 전 목사의 이념 지향에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외압력’이 집회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하태권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를 무너뜨린 전광훈을 구속에 엄격히 처해(집회 강행) 법치를 존 ‘박원순 분향소’를 주둔한 이태원 민주당 대표와 서울시장도 일방적 개입” 한다고 맞섰다.

이민복 기자 am@kookje.com

통합당 “국민 이간질이 매국” 광복회장 뭇매

“안익태 애국가 찬일 노래도 매도 이승만도 목욕-죽자 사회하라” 김 “통합, 친일비호 스스로 인증”

미래통합당은 김원웅(사당) 광복회장의 광복절 광복식 기념사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미래통합당 최정호 원내총무는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김 원웅 말도 안 되는 대립 발언은 대립노선인 ‘말 나라’라며 ‘이승만 대통령과 안익태도 친일파’라며 ‘당은 지금 당장 애국가를 바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 시대에 군인,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하나로 단순히 ‘국립 X’, ‘매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정책위의 의원은 “광복회장은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매국 행위’라며 ‘편 나누어 찢어발기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하태권 의원은 “일관과 수교가 지 거 부활했던 이승만을 친일부역자로 몰았다. 김규를 포획한 독립운동 선열이 자랑스럽게 걸었던 애국가를 친일 노래로 매도했다”며 “정권의 친일몰아가자, 나라의 공화에 대해 ‘스스로 친일비호 세아’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번 기념사가 자신의 개인 생각이라 이날 30여 차례 내부 검토를 받은 ‘광복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친일정신 본재는 제의 독립을 무너리는 자세(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념사 전문이 사전에 정교하게 검토됐다는 입장은 “정체 교감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광복회와 민주당 등에 담긴 발언 정치이해가 부각된 것에 대해서는 “생계이간 하지만 부끄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민복 기자 am@kookje.com

양경철이 지난 해광복절 등 인하여 관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집권화된 광복회 주도권의 과잉-중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같은 날 지방분권과 동력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이슈를 낱만 상아 지방분권 현실화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지난 14일 지방분권 부산시당연차 ‘수용 제재’ 등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용제지연법’ 개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해

김영환 기자

폭염에 취약계층과 노동자 작업환경 돌아본 지역방송



▲KBS부산 8월 19일

부산은 긴 장마 후 폭염으로 접어들었는데, 8월 19일과 20일에 지역 방송사는 폭염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KBS부산은 19일 <또 문 닫는 무더위 쉼터...폭염 피해 어디로?>(김영록 기자)에서 원도심 지역 독거노인 등 더위 취약계층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냉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코로나 확산세에 무더위쉼터마저 운영이 중단되어

더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초지자체는 아외 쉼터를 임시 지정하기는 했지만 그늘막조차 없어 실제 주민 이용률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MBC는 <폭염 예산 80% '그늘막' 설치...취약계층 소외>(송광모 기자)에서 지난해 폭염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기초지자체들이 총 21억 원을 썼는데 대부분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썼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는 불과 5천만 원도 채 지출을 안 했다는 겁니다. 쿨스카프와 쿨토시 배부 등 임시방편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부산MBC 8월 19일

두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임시로 마련한 야외 무더위쉼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늘막과 대형 선풍기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폭염 대책으로 취약계층 세대에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그늘진 야외공간 대형 선풍기 비치, 쿨루프 설치, 양산 대여, 무더위쉼터 거점 순환 냉방버스 운영 등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숲을 많이 조성하고 도시열섬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책도 있었습니다. KBS부산과 부산MBC 리포트는 코로나 유행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폭염 취약계층의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기획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한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폭염 속 노동자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부산MBC는 20일 <온열질환 절반 '작업장'에서...대책은 '탁상행정'>(류제민 기자)에서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온열질환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 4명 중 3명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건설현장을 찾았더니 30도 넘는 날씨에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느라 더 힘든 상황이었



▲부산MBC 8월 20일

는데요, 영세한 작업장은 휴식 공간이나 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폭염 예산은 그늘막이나 저감시설의 설치, 홍보 활동에 집중돼 있는데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작업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한 겁니다. 부산MBC는 구·군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부산 8월 19일

KBS부산 <'설 권리' 열악한 찜통더위 속 청소노동자>(김아르내 기자)는 도시철도 청소노동자를 취재했습니다. 냉방을 가동하지 않는 유리 건물 역사의 경우 실내온도가 높아 일하기가 힘들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야외 작업 위주로 되어있고 이마저도 권고 수준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휴게실을 점심시간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와 야외를 막론하고 고온에서 일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금이 엉뚱한 공사에 쓰이는 동안 주민은 암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 고발한 KNN

KNN은 하동군이 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 지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보도는 총 4차례에 걸쳤는데요, 지원금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을 대조해서 실제 피해주민의 건강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각종 토목사업에 싹쓸이처럼 지원금을 빼 썼다는 것, 그리고 해당 토목사업을 떠낸 업체 대표가 지원금 심의위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8월 14일(금)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원>(이태훈)

8월 17일(월)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싹쓸이 전락>(이태훈)

8월 18일(화) <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이태훈)

8월 19일(수)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이태훈)



네 편의 리포트가 집중 취재한 곳은 하동군 명덕마을입니다. 명덕마을은 한국남부발전 하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불과 130m 떨어져 있는데 주민 390명 중에 암 환자가 29명이라, 발전소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첫 번째 리포트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원>은 지난 10년간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290억 원이 내려왔지만, 명덕마을에 지원된 금액은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건강 검진에 대한 안내나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씹짓돈 전략>과 <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에서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배수로 등 시설개선과 같은 토목공사, 복지회관·장례식장 운영이나 체육행사, 행정시책 우수마을 포상금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에는 지원금 사용을 지양 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하동군은 집행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으로 일관합니다. KNN은 지원금 집행이 근거도 없고 지침에 맞지 않아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NN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8월 19일)

네 번째 리포트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는 지원금이 엉뚱하고 허술하게 쓰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원금을 취지에 맞게 쓰기 위해 15인의 심의위원을 두고 있지만, 위원회에 참여할 주민을 부군수와 발전소가 추천한 겁니다. 실제 한 심의위원은 지원금 사업으로 5,9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따낸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사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KNN은 발전소 주변 피해 마을 주민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통로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명덕마을은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침묵하면 안 될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로 꼽은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리는 데다 최근에는 고압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KNN의 이번 기획보도는 이미 십 수년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하동군과 한국남부발전이 주민 거주환경 개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을 고발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 분석으로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는 사례를 찾아내

설득력을 더했고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군수나 발전소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구성돼 피해주민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가 핵심 문제라면 지역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보자 -지역 입장 반영해 전국지와의 차별성 확보했어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모처럼 화두로 올랐습니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공개하면서 코로나19로 더욱 가시화된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업계의 반발이 일면서 관련 보도는 의료계의 반응과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공의료 확충보다 의대 유치가 먼저 기사화 돼

이번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한 지역 언론의 첫 보도는 7월 24일에 있었습니다. 부산일보는 24일, 사설 <지역 의사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 방향 잘 잡았다>를 통해 당정의 이번 조치는 큰 방향을 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역 의사 의무 배치나, 지역 의료수가 가산, 지역 의대 신설과 같은 후속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사로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창원에도 의대 새로 생길까?>(7/24)라는 첫 기사 다음으로 <‘인구 104만 명’ 창원 의대 유치 법안 발의>(8/4)가 이어져 이번 정책 내용도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채 의대 유치 여부로만 다룬 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국제신문은 7월 24일에만 4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의료인력 지역 불균형 ‘메스…부산, 의사수급 숨통 기대>는 지역 언론 중 유일하게 지역 의료 불균형에 주목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제신문도 “기존 의대 외에 신규로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특히 방사선의대처럼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의와 의사과학자를 키울 특화된 공공의대가 지역에 필요하다”와 같은 발언을 인용함으로써 이번 정책을 또 다른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담았습니다. 또 <“의대 5개 신설 효과, 이과 선호 심해질 듯 상위권 재수생 유리”>(7/24)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의 여러 면면 중 대학입시라는 지엽적인 사안과 연결한 기사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7/23) 이후 8월 7일 전공의 파업 이전까지, 신문의 추가 보도는 부산일보의 <‘인구 104만 명’ 창원 의대 유치 법안 발의>(8/4)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후 기사는 의사계의 파업 일정에 맞춰 이뤄졌습니다.<표1> 참조)

매체	헤드라인
신분	<p>부 제 신 문</p> <p>[정책]의대생 10년간 4000명 증원, 3000명 '지역의사로 선발'(7/24) [지역의료불균형]의료인력 지역 불균형 '메스'...부산, 의사수급 승용 기대(7/24) [입시]"의대 5개 신설 효과 이파 선호 심해질 듯 상위권 재수생 우려"(7/24) [파업]의협 "내달 전국 총파업 불사" 병합 '의료 현장 고충 반영돼'(7/24) [파업]의료계 7일부터 파업 예고(8/6) [정책]"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은 특수분야 인과학자 양성"(8/7) [파업]의협 "14일 총파업 감행"...부산 50-60% 참여 전망(8/13) [파업]14일 의료기관 집단휴진 대비, 응급상황 만 120 전화하세요(8/14) [파업]코로나 재확산 공포 커진다...전공의 등내병원 또 파업 예고(8/18) [공공의료확충]"서부산의료원-창폐병원 공공병원화 성사돼야"(8/19) [사설][파업] 의료계 또 파업 예고...정부와 협동서 적절한 해법 찾길(8/19) [파업]부산 전공의 87% 파업, 26일 전임의 가세...의료 공백 불가피(8/24) [사설][파업] 코로나 확산 속 의사 파업, 비관 여론 불리해 않나(8/24) [의정갈등]의협, 정부와 마주 앉았지만 '견해차 접점 없었다'(8/25)</p>
	<p>부 산 단 의 보 도</p> <p>[의대유치]"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상원에도 의대 새로 생각까?(7/24) [사설][지역의료불균형] 지역 의사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 방향 잘 잡았다(7/24) [의대유치]인구 104만 명 상원 의대 유치 법안 발의(8/4) [파업]의대 증원 반발" 7일 전공의 파업 시민 시선은 냉랭(8/7) [사설][파업] 코로나 비상사태 국민 불모 삼는 집단행동 자제 해야(8/7) [파업]14일 부산 등내병원 45% 휴진 시민 불편 불 보듯(8/14) [파업]등내병원 집단 휴진에도 '의료대란' 없었다(8/17) [파업]의대생들 "국시 거부"(8/19) [의정갈등]코로나 재확산 속 전공의 파업 출구 없는 '의정갈등'(8/20) [의정갈등]방역 공백 빚고서야 '대화' 명분 찾는 정부 의료계(8/24) [파업]전공의, 코로나 관련 업무만 복귀(8/25)</p>
광	<p>K B S 부 산</p> <p>[파업]정부,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대체 인력 확보"(단신)(8/4) [파업]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 진료체계 구축(단신)(8/13) [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해야'(단신)(8/13) [파업]등내병원 10곳 중 4곳 휴진...또 파업 예고(김재승)(8/14) [파업]전공의 순차 파업...부산지역 30% 파업 참여(단신)(8/21) [파업]부산 전공의 90% 파업...진료 차질 우려(단신)(8/23) [파업]"수술 30% 줄었다"...진료 차질 우려(김계애)(8/24) [파업]2차 집단휴진 대비 '업무개시 명령' 발령 검토(단신)(8/25)</p>
	<p>부 산 M B C</p> <p>[파업]부산서도 전공의 파업...병원 비상 체제(김유나)(8/7) [파업]의료파업 대비 응급의료기관 24시간 가동(단신)(8/13) [파업]부산 병원 43% 집단 휴진...시민 불편(김유나)(8/14) [파업]부산에서도 내일 전공의 파업 예고(단신)(8/20) [파업]전공의 무기한 파업 출입...부산도 의료 차질(단신)(8/21) [파업]의사협회 파업 대비 비상진료대책 마련(단신)(8/25) [지역의료]코로나19전담'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이직률 심각(단신)(8/25)</p>
<p>K N N</p>	<p>[파업]부울경 전공의 내일 파업, 병원 비상체제(단신)(8/6) [파업]의사 집단 휴진, 일부 환자 불편(강소라)(8/14) [파업]전공의 파업, 부산 31% 경남 37%(단신)(8/21) [파업]부산 전공의 90% 파업 참여(단신)(8/23) [파업]의사 집단휴진 '업무개시 명령' 발표(단신)(8/25)</p>

▲ <표 1>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관련 보도 목록(7/20~8/25)

의협 파업 일정 단신으로 보도하는데 그친 지역 방송사

부산지역 방송3사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총 20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7/23) 이후 의료계 총파업(8/7) 이전까지 관련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료계의 파업 예고와 함께 지역 방송사 보도도 이어진 셈입니다. 20건 중 5건이 기자 리포팅이었고 나머지 15건은 단신 보도에 그쳤습니다. 보도 내용은 대동소이 했는데요, 의료계의 파업 예고와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마련,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시민 불편에 기사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파업은 이번 정책에 대한 하나의 반응일 뿐, 언론은 공공의료 확충 논의 끌고 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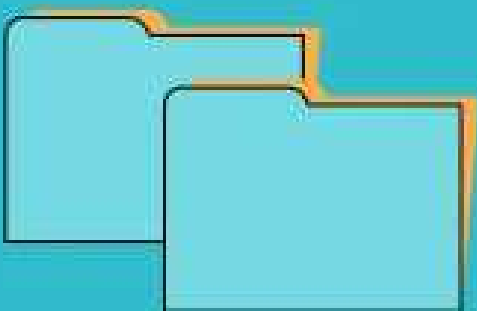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이슈는 지역 언론 역시 수차례 주목해온 바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2018년 5월 [수술 급한 부산 의료 시스템] 기획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이 서울로의 환자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국제신문은 [민낯 드러낸 부산지역 공공의료](6/8~6/28) 기획을 통해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취약계층 환자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현실을 짚었습니다.

이번 정책 역시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 핵심 사안이었던 만큼, 그간 지역 의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지역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역민의 입장에서 이번 정책을 분석해 문제를 짚고 논의를 확장하기보다, 오히려 파업 일정 전달에 매몰되는 보도 경향을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9월

표아보기



연이은 폭우와 태풍에 지역언론은 ‘원전’ ‘빌딩풍’ 주목했다

가동중단 철저한 조사, 안전방안 마련에 계속 관심가져야

-모니터기간 : 8월 25일~9월 8일

최대 200mm 넘는 폭우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 잇따라 강타하면서 부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특보를 내보내고 시청자와 댓글로 소통하며 밤샘 중계를 하는 등 재난 보도에 집중했습니다. 지역에 국한한 재난은 소홀히 다뤄진다거나 현장과 밀착한 신속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진일보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역 언론 5개사가 부산의 재난 위험 요소로 공히 꼽은 것은 바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가동 중단과 빌딩풍이었습니다.

부산일보 원전 송전설비 침수 단독보도

태풍에 원전가동 중단 속출·지역언론 안전 여부 계속 감시해야

신고리 3·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설비 침수

스위치야드 제어동·GIB터널 발목 높이까지 빗물 차올라 원안위 "다음 날 오전 배수 완료" 터빈건물 비 샐다는 의혹도 제기 지역주민에게 안 알리고 '온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상위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송전 설비가 지난달 집중호우 때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발전소 일부 건물에서 빗물이 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신고리 3·4호기는 한국형 '3세대' 기간 경수로(APR1400·발전용량 1400MW급)로 지난해 12월 6일 준공됐다. 최종 단 원전인 신고리 3·4호기에 빗물이 유입돼 안전성에 크게 충격을 준 것은 물론

원전 당국이 해당 사실을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아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5편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위) 새울원자력본부, 한국전력공사(한전) 부산울산지역본부 등은 <부산일보>의 확인 취재에 지난달 23일 부산과 울산의 집중호우 당시 신고리 3·4호기 송전설비 일부가 침수된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새울원전본부가 있는 울주군에는 하루 최대 215.5mm의 비가 쏟아졌고, 이날 오후께 스위치야드 제어동 지하와 외부 전선 연결 지점에 빗물이 대거 유입됐다. 또 해당 장소와 가스 절연모선(GIB) 터널을 연결하는 출입문을 통해 빗물이 새면서 GIB터널 역시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신고리 3호기 사고 일지
부산민언련정보시스템

2020. 7. 23	스위치야드 제어동 지하, GIB터널 침수
2018. 8. 21	제어동실내 시설 등 부피제한 제어동 실내에 차를 반사차로 차를 당기
2016. 10. 31	주요설비 안전 점검차로 외부 빌딩에 빌딩 스스 침수를 위한 터빈 수동정지
8. 20	관저로-터빈발전기, 중력발전기 교장을 위한 방수로 수동정지
7. 4	80% 부피제한 시설 중 가압식 교압에 의한 방사성 저용정지
6. 13	주요설비 안전점검차로 외부 빌딩에 빌딩 스스 침수를 위한 터빈 수동정지
3. 29	제어동터빈 고진동에 따른 터빈 정지를 위한 방사로 수동정지
1. 24	가압식 교압을 통한 방사성 저용정지

스위치야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안전이 관건이라고 있다. GIB는 발전소 터빈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 전



신고리원전 3·4호기, 지난달 폭우로 송전 설비 일부가 침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일보 DB

력망으로 이동시키는 용비를 담으며, 절연체로 육붕화합(SF6) 가스가 흐르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오후부터 자정까지 많은 비가 쏟아져 송전설비 두 곳이 침수됐지만, 다음 날 오전에 배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침수로 원전 가동 중단은 없었고, 송전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자는 "침수 당시 스위치야드 제어동 지하에 설치된 펌프를 통해 물을 파냈다"면서 "침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히 위한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전 인박에서는 지난달 폭우 당시 신고리 3·4호기의 터빈건물에도 비가 샐다는 의혹도 퍼져 나가고 있다. 신고리 3·4호기 각각의 터빈건물 1층 전기제어실 상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커버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수위 관계자는 "비가 세서 보호 커버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여름철 높은 습도로 발생한 응축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많은 비로 국내 원전이 침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8월 25일에도 부산 기장군에 시간당 117.5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고리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귀포 시흥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송전설비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송전설비는 사실상 원전과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설비는 침수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면서 "물 들어갔는지, 부실 공사를 했는지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 말했다.

황석하·권승혁·이승훈 기자 hsh03@busan.com

△ 부산일보 8월 25일 1면 기사

특히 부산일보는 7월 폭우 때 신고리 3·4호기의 송전설비가 침수되었음을 알리는 보도를 선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8월 25일 <신고리 3·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설비 침수>(1면, 황석하, 권승혁, 이승훈)에서 일부 건물에 빗물이 샐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당시 한수원이 침수 사실을 지역민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WCA 등 부경 환경단체와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각

각 성명을 내고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다시 26일 <부울 환경단체 “1조 쏟아붓고도 침수 큰 충격…신고리 3·4호기 철저 조사를”>(2면, 황석하, 권승혁, 이승훈)에서 환경단체의 지적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원전 당국이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운 보도였습니다.

9월 들어 연이은 태풍으로 고리3·4호기, 신고리 1·2, 그리고 월성 2·3호기까지 모두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가동 중단 상황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요, 부산MBC <“원전 자연재해에 섰다운 위험 크다”>(9/3, 단신), 부산일보 <이번엔 월성 원전 2·3호기 정지…태풍 2개에 6기 멈췄다>(9/8, 2면, 송현수)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섰다운 우려에 따른 전력공급 중단 대책 촉구, 진상을 은폐하려는 당국을 비판하는 환경단체,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은 원전이 충격을 받을 때는 가동이 중단되도록 매뉴얼화 돼 있고 이에 따른 가동중단이 었다며 별일 아닌 듯이 해명했지만, 사고 원인 파악은 차후에 이뤄졌고 이런 상황이 즉시 주변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데서 불안감은 커집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원전 당국이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꾸준한 후속보도가 필요합니다.

태풍으로 ‘빌딩풍’ 위험성 확인·지역언론 적극 보도

부산일보 ‘커튼월공법’ 문제 지적

국제신문 ‘해안가 난개발’ 비판 목소리 전달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밀집한 부산에서는 빌딩풍이 주요 재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당시에도 해운대, 동구 북항재개발 부지 등지의 초고층건물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빌딩풍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MBC는 지속적으로 빌딩풍에 관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9월 2일 <초고층 최다 부산, 마이삭에 “빌딩풍” 초비상>(이두원)에서도 보도했습니다.

특히 3일 마이삭 때 부산대 권순철 교수 연구팀(행정안전부 빌딩풍 용역수행)이 101층 건물 엘시티 근처에서는 해운대 바닷가보다 바람이 2배 세게 불었다는 관측 결과를 알렸는데, 국제신문 4일 <태풍 당일 엘시티 조사해보니 ‘빌딩풍’ 위력 주변보다 2배 세>(3면, 김민주), KNN 5일 <태풍 ‘마이삭’으로 드러난 빌딩풍 위력>(황보람), 7일 부산MBC <초고층 통과하니 ‘2배’..빌딩풍 ‘위력’ 입증>(황재실)에서도 보도했습니다. 부산일보는 7일 사설 <“빌딩풍은 신종 재난” 설계·안전 대책 입법화 시급하다>에서 빌딩풍 관련 위기 경보체계와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주거지로 각광을 받는 해운대 고층 아파트 단지가 태풍 앞에서는 특히 취약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주목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일보는 8일 <해안가 ‘커튼월 공법’ 건물, 안전규정 강화 한목소리>(2면, 박진

석)에서창문을 건물외벽으로 삼는 ‘커튼월 공법’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하고 내진 설계, 창문 구조 강화와 더불어 ‘건축 허가 시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포함’시키자는 하태경 의원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국제신문은 8일 <초고층의 역설...‘오션뷰 욕망’이 부른 태풍 공포>(1면, 김민주)에서 조망권을 차지하려는 해안가 중심 난개발이 빌딩풍이라는 재난을 만들었다며 해안가 초고층건물은 허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초고층의 역설... ‘오션뷰 욕망’이 부른 태풍 공포

유리창 파손-건물 흔들림
일단 태풍에 상당한 피해
순간풍속 50m 이상 기록
신종재난 ‘빌딩풍’ 전원지

태풍 ‘타이삭’과 하이선 이 연이어 몰아친 부산에서 해안가 초고층건물은 높이 만큼 큰 재해 공포를 불러왔다. 해안가 일대가 ‘빌딩풍’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재난의 전원지로 떠오르자 난개발이 재난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진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집중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타이삭’ 때는 그냥 집에 있었지만, 이번 태풍 때는 아예 거처를 옮겨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해안가 고층건물에서 최고의 조망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태풍 두 번을 겪고 나서 그 자부심이 공포감으로 변했다. “7일 하이선 내습 때 가족과 함께 ‘피난’했다는 엘시티 입주인 A 씨의 말이다. A 씨는 “두 차례 태풍이 지나니 불안 심상찮은 흔들림을 느꼈다고 말하는 주민이 꽤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감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타이삭 당시 파손된 창문을 제대로 복구하지도 못한 채 하이선을 맞아야 했던 해운대수영장구일대 일부 고층아파트 주민은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다. 강풍에 빗물이 하늘로



태풍 하이선에 양망 된 광안리해수욕장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부산을 강타한 7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이 쓰레기로 아수아일흔 무렵에서

여유하고, 실내물잔에 담긴 물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마린시티 입주인은 “건물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려 멀미하는 듯한 느낌이 났다”고 토로했다.

지난 타이삭에 이어 하이선 때도 빌딩풍은 수치를 입증했다. 하이선 북상에 맞

춰 7일 0시부터 12시간 동안 해운대 엘시티와 마린시티 일대에서 풍속을 잴 부산대 연구팀(행정안전부 빌딩풍 용역 수행) 측정 결과에 이 같은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날 새벽 엘시티 일대에는 이미 국립해양과학연구원 해상 측정값(초속 23m)보다 2

배 이상 높은 풍속이 감지됐다. 오전 6시 이후로는 강풍이 지나치게 세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팀은 오전 8시 기준 마린시티에서 초속 50m 넘는 강풍을 측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 측정이 불가능했던 시간 엘시티에는 순간 최대풍속 초속 60m 안팎의 강풍

이 불었음 것으로 추정했다. 저층부전문이 추가로 개지는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엘시티 환경미화원이 강풍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다치고, 인근 신호동의 강철 가동이 끊어지면서 횡단보도에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도 일어났다. 타이삭 때는 부근 상가의 피해도 컸다.

빌딩풍 용역단장인 부산대 권순철(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특히 부산 해안가에 밀집한 고층건물 영향으로 일대 비수준한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교수는 “빌딩풍은 외부에서 고층건물을 향해 유입되는 바람이 건물수목 그 바람의 2배, 3배까지도 더 강한 바람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상기후 영향으로 부산 해안가에 해일을 동반한 태풍이 몰아칠 위험성은 점차 커진다. 고층건물 밀집은 일단 관리 등 유사시 피해를 줄일 방안 강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두 차례 태풍을 거치며 조망권을 차지하려는 해안가 중심 난개발이 빌딩풍이라는 재난을 만들었다는 비난도 빚졌다. 빌딩풍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재발을 막는 압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하태경(해운대갑)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해안지역에 초고층 건물을 짓게 한 것 자체가 문제다”“(앞으로라도) 해안가 초고층건물은 허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김민주 기자 min27@ookkoo.co.kr
▶ 관련기사 2-3면

△ 국제신문 9월 8일 1면

기후변화가 불러일으킨 슈퍼태풍은 빈도와 강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당장 현실로 닥친 지금, 핵발전소와 초고층빌딩을 가진 부산은 태풍에 특히 취약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난개발-특혜로 인한 초고층건물 난립을 막기위한 방안에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엘시티' 성공 자신감이라고? 국제신문의 도 넘은 '포스코 건설' 띄우기

국제신문의 <'엘시티' 성공 자신감 포스코건설, 단독으로 입찰 참여 승부수>(9월14일 11면 장호정 기자)는 바이라인이 적시된 지면 기사입니다.

바이라인도 있고 새로운 정보도 담고 있으나, 건설사 측에서 제공한 사진과 함께 '탁월한 주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 '아파트 품질만족지수 10년 연속 1위 기록' 등과 같은 건설사 장점 위주로 기사 내용이 채워져 건설사 홍보성 기사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신문의 해당 기사는 포스코 건설이 '단독 입찰'을 결정했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공동도급(컨소시엄) 반대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만큼 '단독 입찰'은 포스코건설의 주요 홍보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포털에 '대연8구역 포스코건설'을 검색하자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단독 입찰'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8000억 원 규모로 하반기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힙니다. 규모가 큰 만큼 건설사들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부산일보의 <"대형 건설사가 금품 제공" 대연 8구역 수주 전 '진흙탕'>(9월8일 4면 박진석 기자)

기사를 보면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조사에 나설 정도로, 대연8구역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찰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 특정 건설사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전달해 아쉬움이 큼니다.

국제신문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부동산 11

‘엘시티’ 성공 자신감 포스코건설, 단독으로 입찰 참여 승부수

대연의 재개발 구역 입찰 본격화



포스코건설이 부산권 최대 재개발 사업인 남구 대연 8구역 재개발사업에 단독 입찰로 출사표를 던졌다.

대연 8구역은 남구 대연동 1173번지 일원에 아파트 3530세대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사비가 8000여 억이 넘는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하반기 최대 정비사업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달 21일 행정 심판회에 참석한 12개 건설사가 컨소시엄 또는 단독 참여 방식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단독입찰을 결정했다.

복합 사공 리스크를 나누는 컨소시엄 사업보다 단독시공은 재무적 부담이 크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전세아파트 공급이 균일해지면서 해당 건설사의 특약신계약 체결과 주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건설업계 도시재개발사업수입액 225700억 원으로 집계 2위를 기록한 포스코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건설사 시장능력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5위로 평가받음으로써 3



포스코건설은 오는 15일 부산 남구 대연재개발 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 등과 수주 경쟁을 벌인다. 사진은 포스코건설이 사공한 해운대엘시티다상 아파트 전경. 작은 사진은 포스코건설 본사 건물.

부산 남구 일대 3500 세대 규모 대형 건설사들 수주 경쟁 치열

지난해 도시정비 실적 업계 2위 단독시공 통해 균일한 품질 보장 확보된 설계-편의시설도 경쟁력 "검증된 브랜드로 명품단지 조성"

년 만에 EIG 5 건설사로 재진입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회사채 신용등급을 중점의 A 등급에서 A+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들어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 대연 8구역 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복판인 신반포 18차와 21차, 가락현대 5차 등 강남권에서 연이어 사업을 띠며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이밖에 서울 강남의 품격을 부산 대연 8구역에서 고스란히 재현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더샵 센텀파크(3750세대)'를 시작으로 부산에만 2만 8000여 세대를 공급했다. 1354000여 원 규모의 부산 최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 더샵(101층)'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올해 초 리뉴얼된 브랜드 '더샵'은 표준화되고 두터운 한국품질인증자수면

가에서 아파트 품질인증자수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해 업계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소외지역인 대구 미국브랜드가 공동 주관하는 브랜드고객충성도 아파트부문에서는 4년 연속 1위를 선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브랜드 추천자수 1위에 이어 표준화평가 주관하는 소비자행동 환경 만족수에서도 1위를 달성하는 등 포스코건설은 검증된 브랜드 '더샵'과 최고의 사업조건 및 설계로 대연 8

구에서 최고의 명품아파트 단지로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샵 수 조항을 예게 가장 유망하고 혜택이 많은 단독입찰을 결정할 만큼 조합원들도 포스코건설의 의지와 진정성을 알아줄 것으로 생각된다"며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공하면 모든 자원을 투입해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 지역 내 랜드마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창 기자 hhochoang@kookje.co.kr

△ 국제신문, 9월 14일 11면

2018년 산재사망 사고 1위 업체, 포스코 건설 국제신문은 ‘엘시티 성공’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보면 2018년에 산재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포스코건설(10명)이었습니다.

국제신문의 <‘엘시티’ 성공 자신감 포스코건설, 단독으로 입찰 참여 승부수> 기사에 첨부된 ‘해운대엘시티더샵’ 공사 현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 국제신문은 헤드라인에서 포스코 건설을 ‘엘시티 성공 자신감’이라 수식했습니다.

국제신문의 포스코건설 띄우기 이번이 처음 아냐

폭염이 이어지던 8월 24일, 국제신문은 4면에 <폭염에 마스크...야외노동자는 열사병 위험 노출>(김진룡 이준용 기자)을 실었습니다. 건설, 택배 등 현장을 찾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해야 하는 야외 노동자들의 고충, 열병에 쓰러진 농민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또 안전사고

강서구 명지동 포스코 더샵
근로자 3층 높이서 추락사

포스코건설이 부산에서 짓는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21일 오후 2시50분께 강서구 명지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공사장 건물 3층 7m 높이에서 낙하물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던 근로자 A(60) 씨가 추락했다. 이에 함께 일하던 동료 근로자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1시간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4시50분께 끝내 숨을 거

뒀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공사현장 책임자를 불러 근로자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부산지역 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50분께 해운대구 주상복합 단지 엘시티 A동 공사장 건물 55층에서 안전작업 발판 구조물이 200m 아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근로자 3명이 함께 추락해 숨졌다. 근로자들은 54층에 있던 박스 형태의 안전작업 발판 구조물을 55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외에도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다른 근로자 1명도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변을 당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국제신문, 2018년 12월 22일 8면 기사

그런데 건설 현장으로 소개한 ‘부산 수영구 남천더샵프레스티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만큼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문제 삼기 보단, “이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매일 이 시간(2시)에 10분간 휴식시간을 두고, 200여 명의 인부 전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대형 제빙기도 3대 마련해 수시로 얼음을 제공한다.”,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보건 위생도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을 전하는 기사에서 포스코건설 현장만큼은 노동친화적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폭염에 마스크... 야외노동자는 열사병 위험 노출

평통터위 속 건설 현장 인부들
속도전에 내몰려 휴식 등 부족
사각지대 방지 "쓰러질까 걱정"
택배기사 계단과 천정 '땀범벅'
"가방에 속옷 2개 챙겨 다닌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코로-19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아찔도가 극심하다. 혼자 야외에서 일하다가 온열질환에 노출돼 숨지는 사례도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부산 수영구 남천더샵프레스티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평통터위에 인부들이 마스크를 썼다. 땀이 흘러내리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할 땀이 코로-19 확산 탓에 무더위에도 입을 가렸다. 마스크 대신 햇

빛을 가리는 목토시를 입 주위까지 올려 일하는 인부들도 있었다. 현장 인부인 이모 씨는 "무더위에 코로-19까지 겹치니까 정말 힘들다"면서 "기온 포함해 주변 동료들이 흡사나 더위를 먹고 쓰러지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가 되자 모든 인부가 일을 멈추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이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매일 이 시간에 10분간 휴식시간을 두고, 200여 명의 인부 전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대형 제빙기도 3대 마련해 수시로 얼음을 제공한다. 이 건설사 정장인 보건관리자는 "집단으로 모이는 것은 물론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한다"면서 "인부의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감염병을 막기 위한 보건위생도 중요"이라고 설명했다.

야외노동자도 폭염에 지지는 대장가지였다. 택배기사 김모(42) 씨는 이날 하루 정해진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 열이 없었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 빌라와 상가에서는 요즘 같은 더위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급세삼에 땀이 흐른다. 이때 몇몇 땅을 수건으로 연신 닦아보지만, 수건 역시 뜨거운 열기에 남아올라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나마 이들 중에 차 안에서 쉬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 김 씨는 "하루 수백 개에 달하는 물건을 처리하다 보면 밤이 되 오뎅 쏟아져 가방에 속옷을 두 개 더 넣어 다닌다"며 "올해는 코로-19 때문에 마스크까지 써야 하니까 힘들다"고 말했다.

야외에서 혼자 일하던 70대 남성이 무더위에 숨지는 일도 일어났다.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께

고성군 한 밭에서 마을주민 A(70)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의사 소견을 토대로 혼자서 작업을 하던 A 씨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이어 약 1시간 가량은 33도였다.

이처럼 야외 노동자는 코로-19까지 겹친 폭염에 방치되거나 별다른 대책 없는 연명 노동안전보건위는 지난 20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에도 속도전과 갑질문화로 건설노동자의 열 권리를 내세우기 힘들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463명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5.4명(8.1%)은 "폭염정보에도 별도 작업 중단 지시 없이 일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폭염대응이 집중된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난 21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엘시티 신축 공사 현장에 마련된 야외휴게실에서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민정 기자 ymn@kookje.co.kr**

로 야외 노동자에게까지 관심을 쏟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간 시투게 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100명, 올해 44명(23일 현재)으로 집계

됐다. 이러한 폭염을 기록한 2018년(208명)보다 감소했지만, 2011년 이 기간을 시작한 이후 온열질환자수는 증가 추세다. **김진홍 이은영 기자 jyn@kookje.co.kr**

▲ 국제신문, 8월 24일 4면

정치 권력 감시 등한시하면서 긍정 행보 부각한 지역 언론

-국회의원 재산 증가 유일하게 보도한 부산MBC-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당선 전후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실련은 총선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부동산재산의 평균과 당선 이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전체재산은 10억 원, 부동산재산은 9천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선 전후 전체재산의 신고 차액이 10억 이상 차이 나는 의원 15명의 명단도 공개했는데, 이 중 1위는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전봉민 의원(866억)이었습니다. 전봉민 의원 외에도 이주환, 백종현, 서병수 의원도 포함되어있어 부산 의원 4명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표2> 국회의원 당선전후 재산신고액이 10억 이상 차이 나는 국회의원

(단위: 백만원)

이름	후보당시		당선이후		전체재산 차액	부동산재 산 차액
	전체재산	부동산재산	전체재산	부동산재산		
전봉민	4,814	983	91,414	1,222	86,599	239
한무경	16,358	10,354	45,208	10,509	28,850	154
이상직	4,025	2,576	21,267	2,998	17,241	422
이주환	3,107	3,205	11,736	3,758	8,628	553
백종현	19,837	17,018	28,207	17,455	8,369	437
문진석	2,816	1,638	6,517	1,640	3,700	2
조명희	3,335	2,623	5,703	1,704	2,368	(919)
윤주경	3,660	2,602	5,673	2,709	2,013	106
강기윤	9,677	5,207	11,545	5,086	1,867	(120)
양정숙	9,201	5,892	10,918	6,225	1,716	332
서병수	4,680	1,353	6,110	2,965	1,430	1,612
이광재	1,006	1,525	2,260	2,163	1,254	638
홍성국	3,636	662	4,857	1,535	1,220	873
조태용	2,148	1,838	3,310	1,921	1,161	82
조수진	1,850	2,320	3,001	2,320	1,151	0
15명 (계)	90,157	59,801	257,732	64,216	167,574	4,411
15명 (평균)	6,010	3,986	17,182	4,281	11,172	294

주1) 부동산재산은 보유기준으로 임차권은 제외

▲ 경실련, <선관위 등록, 몇 달 후 국회 신고재산 1,700억 늘어>



▲ 부산MBC <뉴스데스크>, 9월14일

이 소식을 보도한 지역 언론은 부산MBC가 유일했습니다. 부산MBC는 14일 첫 소식으로 <총선 전·후 재산 '10억 이상 증가'... "부산4명">(이만홍 기자) 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리포팅은 당선 전후로 재산 신고액 차이가 가장 큰 의원 15명 중 4명이 부산 국회의원이었으며, 전봉민, 이주환, 백종현, 서병수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4명의 의원에 한해,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된 정황은 없는지를 짚었습니다. 이어서 유권자에게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산 공개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대한 감시는 지역 언론의 주요 역할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지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서병수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심층취재는 고사하고 의혹조차 보도하지 않은 것은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9월 14일부터 18일, 5일간 지역 언론에서 전봉민, 이주환, 백종현, 서병수 의원에 대한 다른 기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소외계층을 챙겼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1건 실렸습니다. 국제신문 <"업종 차별 안 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인데요, 전봉민 의원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으로 김영린법상 식사 가액 상한을 상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종현 의원 관련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주환 의원 관련 기사는 단신 보도 1건으로, 이주환 의원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기자회견 소식이었습니다.

전봉민	국제신문 9월17일 5면 <“업종 차별 안 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
이주환	KBS부산 뉴스9 9월14일 단신 <민주당 “이주환 의원 허위 재산신고” 조사 촉구>
백종현	보도 없음
서병수	국제신문 9월15일 13면 [창간73주년기획] 금융중심지 부산의 기회와 도전 <3> 지역 여야 정치권의 구상
	국제신문 9월16일 5면 <보선판 김영춘-서병수 거취에 쏠린 눈>
	국제신문 9월17일 5면 <서병수 “시장 꿈 있다” 출마 검토 시사하자 야당 후보군 “결국 못 나올 것” 애써 의미 축소>
	부산일보 9월17일 3면 <서병수 “시장의 꿈 있다” 출마 시사...결행까지는 곳곳 암초>
	KNN 9월17일 4번째 <부산시장 보궐선거, 요동치는 판세>

표 1 9/14~9/18, 부산지역언론 전봉민, 이주환, 백종현, 서병수 의원 관련 보도

서병수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년 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시사해, 이와 관련한 기사가 4건, 금융중심지 구상 관련 기사가 1건 있었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7월 폭우 참사 관련 변 권한대행 경찰 조사 결과 발표 보도 지역언론은 왜 부산시 허술한 행정 문기보다 입장 대변했나

지난 7월 23일,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 제1지하차도가 잠겨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통제만 제때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을 참사였기에 부산시와 동구청의 허술한 시설 관리체계, 재난대응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7월 27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부산시는 면담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건데요. 정의당 부산시당은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부산시의 대응은 사전조치는 물론이고 사후조치마저도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 여겨질 정도라고 비판하며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 14일 경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혐의, 동구청 부구청장과 동구청 담당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동구청 담당자 2명과 부산시 담당자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같은 날, 변 권한대행 측 변호인은 경찰의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역 언론 5개사는 모두 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9월 14일	KBS부산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변대행 등 8명 검찰 송치〉
9월 14일	부산MBC	〈초량 지하차도 참사 수사...경찰, 8명 기소〉
9월 14일	부산MBC	〈사상 첫 형사기소...‘직무유기’ 성립할까?〉
9월 14일	KNN	〈지하차도 참변, 시장 대행도 기소 의견〉
9월 15일	국제신문	〈변성완 기소 의견에 부산시 “떠넘기기식 무리한 수사”〉
9월 15일	부산일보	〈변성완 대행 ‘직무유기 혐의’ 검찰 송치〉
9월 15일	부산일보	〈공무원 안전업무, 형사 처벌 여부 관심 향후 재판서 참여한 법적 다툼 벌일 듯〉

△ 표 9/14-15 ‘초량 제1지하차도’ 경찰 조사 결과 전달한 지역 언론 보도 목록

지역방송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직무유기’ 범위, ‘변성완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지역신문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도하면서도 부산시 입장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국제신문은 <변성완 기소 의견에 부산시 “떠넘기기식 무리한 수사”>(9/15, 박정민 이승륜 기자)에서 기사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떠넘기기식’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달며 무리한 기소임을 부각했습니다.

부산일보는 <공무원 안전업무, 형사 처벌 여부 관심 향후 재판서 첨예한 법적 다툼 벌일 듯>(9/15, 김백상 기자)에서 공직사회의 반응을 주요하게 전달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 ‘납득이 잘 안된다’라는 서술과 함께 경찰의 기소 의견을 ‘무더기’라 칭했습니다. 또 17일 부산일보는 <“변성완 대행 기소 의견 송치는 경찰의 면피성 무리수”>(9/17, 최세현 권상국 기자)를 통해 변성완 권한대행의 법률 대리인 청률의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변 권한대행이 택시 방역소를 찾아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어 눈에 띄었습니다.

2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제 2319 호 종합 부산일보

“변성완 대행 기소 의견 송치는 경찰의 면피성 무리수”

초광역하차도 참사 관련 부산시, 수사 결과에 강경 입장
“재난대응매뉴얼은 내부 지침 회의부터 하면 골든타입 놓쳐”
“상황 맞는 적절한 조치” 반박

울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광역 하차도 참사와 관련, 부산지방경찰청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기소 의견을 송치한 가운데 15일 부산시 1면 등 보도된 가운데 16일 부산시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변 권한대행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과 부산시 측은 “경찰이 면피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이 핵심 쟁점
법무법인 정률은 법원 기소 의견에 △ 재난대응 행동수칙(매뉴얼) 이행 여부 △ 초우경보 발령 시 상황판단의 주체 여부 △ 초광역하차도 상황 구제방안 지시 여부 등 세 가지 법리적인 문제점을 쟁점으로 내세웠다.

정률은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초우 경보가 발령된 뒤 매뉴얼대로 상황판단 의의를 주재하지 않고, 초광역하차도 상황을 보고 보고도 구제방안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무유기죄의 성립 근거



16일 오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동구 부산역 택시방역소를 찾아 시설 점검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당부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의 기소 의견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변하는 해석이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의 기소 의견 송치를 두고 경찰과 부산시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검찰이 송치 후 수사에서 변 권한대행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무혐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경찰의 주중 그로써 법원에 넘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도 경찰의 엄격한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부산 가재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죄의는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 아니다. 사실상 사문명에서 성립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도 “검찰도 행정 같은 최하급 달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은 법원에 가서 다투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기소 여부에 앞서 이 부분을 고심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이나 상황, 사회적 여론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최세현·권상국 기자 come@busan.com

16일 오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동구 부산역 택시방역소를 찾아 시설 점검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당부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정률은 “핵심은 무조건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뉴얼의 취지에 따라 재난방지 대책의무들이 이행하는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7은 매뉴얼이 잘 대적 지점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표준화 된 매뉴얼을 연구, 개발할 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위 시행령에서도 매뉴얼은 계속적으로 다양한 재난 유형에 맞춰 연구, 보완해야 하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초우경보 발령 시 상황판단의의의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 부산일보, 9/17, 2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떠넘기기식’, ‘무더기 기소’라 평가할 때, 연합뉴스는 <파일 ‘복붙’해 부산시장 권한대행 주재 가짜 회의록 만들어>(9/15, 김선호 기자)를 보도했는데요. 경찰 수사로 드러난 회의록 허위 작성 사안에 초점을 맞춘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경찰은 이 공무원이 상부 지시 없이 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안부까지 보고한 점, 회의록 작성 방식, 이전 회의록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상당 기간 호우 대책회의록이 허위로 만들어져 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며 부산시와 동구청의 관행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9월 18일 <‘지하차도 참사 때’ 비틀거리며 귀가해 잠잔 부산시 재난책임자>(김선호 기자) 에서 폭우 당시 변성완 권한대행의 부적절한 행보를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경찰

취재를 인용해 변 권한대행이 당시 외부 일정을 강행하고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귀가했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화면을 확보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부산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인 변 권한대행이 직무에 소홀했다는 문제 제기는 언론의 감시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부산MBC가 단신으로 전한 게 전부였습니다.

연합뉴스의 18일 보도 이후, 부산시가 낸 해명자료에 따르면 7월 23일 변 권한대행은 18시 30분부터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일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폭우 비상속 관사서 보고 받고 지시...업무수행? 직무무기?>(9/18, 김광수 기자) 기사엔 ‘지역 언론사 순회 간담회’라고 당일 변 권한대행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9월 18일	연합뉴스	<지하차도 참사 때 ‘비틀거리며 귀가해 잠잔 부산시 재난책임자’>
9월 18일	부산MBC	<‘지하차도 참사’ 때 폭탄주 마시고 ‘비틀 귀가’>(단신)
9월 21일	국제신문	5면 <“지하차도 참사 때 변성완 취해” 보도 논란 부산시, 통화기록,행적 등 밝히며 반박>
9월 22일	국제신문	4면 <변성완 “수사정보 유출로 악의적 보도”...경찰에 강력 반발>

△ 표 9/18-22 ‘초량 제1지하차도’ 경찰 조사 결과 전달한 지역 언론 보도 목록

국제신문은 다음 날 변 권한대행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밖에 지역언론은 추가 보도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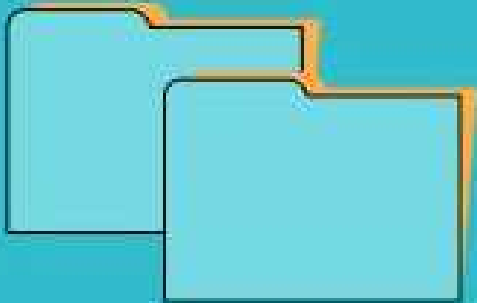
△ 국제신문, 9/21, 4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변 대행 기소의견 송치부터 참사 당일 권한 대행의 행보에 대한 의혹, 권한대행의 항변까지 지역 언론이 주목하고 검증해야 할 이슈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부산시 입장을 전달하는데 치중했고, 추가 의혹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역 언론의 침묵이 흑여 폭우 당시 권한대행의 행보였던 '지역 언론사와의 순회 간담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10월

표아보기



우려가 현실로...자사 참여사업 호평 일색으로 부각한 부산MBC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미포~청사포~송정)을 활용한 개발사업인 해운대블루라인파크가 6일 준공식을 열고 '해변열차'를 개통했습니다.

이 소식을 부산MBC <뉴스데스크>는 세 번째 뉴스로 <미포~송정 해운대 해변열차 드디어 달린다>(배범호 기자)를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달맞이 언덕 아래 천혜의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의 핵심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는 멘트로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 부산MBC <뉴스데스크>, 10/6, <미포~송정 해운대 해변열차 드디어 달린다>

해변열차에서 바다를 내다보는 탑승객의 모습과 함께 “달맞이 언덕 아래 청사포 앞바다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걸어서 감상하던 바다를 해변열차 안에서 보니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라며 열차 속 풍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사업은 개발과 보존 논란에도 원탁회의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낸 모범사례이고, ‘해변열차’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배터리 충전방식의 친환경 열차로 소개하는 등 호평 일색으로 2분 10초 길이의 리포팅이 채워졌습니다.

같은 날, 타 언론의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KBS부산은 7번째 순서로 <해운대 미포~송정 연결 ‘해변열차’ 내일부터 운행>을 단신으로 전했고, KNN도 11번째 뉴스로 <해운대 해변 친환경 열차 개통>(단신)을 전했습니다. 부산일보는 해당 소식을 10월 6일 자 8면에 <“해운대 절경, 열차로 즐기자”…해운대 해변열차 7일부터 운행>이라는 제목으로 배치했고, 국제신문은 10월 6일과 7일엔 보도가 없었습니다.

타 언론이 단신으로 전하거나 신문 주요 면에 배치하지 않은 소식을 부산MBC만 리포팅으로, 3번째 소식으로, 다채로운 화면과 함께 전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부산MBC는 ‘해변열차’ 운영사인 해운대블루라인파크의 지분을 가진 사업자입니다. 자사 참여사업 홍보에 뉴스마저 활용한 셈입니다.

한편, 10월 6일 KBS부산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산시장 참석 ‘테이프 커팅’에 100여 명 부족… 방역 수칙 어디로?>(정민규 기자) 디지털뉴스는 100여 명이 모인 ‘해변열차’ 준공식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산일보는 8월 28일 자 10면에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공사장 옆 산책로 ‘안전주의보’>(김성현 기자)를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는 주민 보행로와 인접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부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과 미흡한 공사 자재 관리를 들며,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했습니다.

해운대 해변 열차 준공식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부산MBC는 보도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미포~송정) 개발 사업에 언론사마저 참여하는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혜사업 개발을 감시하고 공익성을 지향해야 할 언론이 개발 주체로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부산MBC의 호평 일색 보도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 8부두 세균실험실’ 문제 국감서 나와도 지역언론 관심 적었다

2019년 3월 부산일보 보도로 부산항 8부두에 맹독성 생화학 사료가 반입된 사실과 주한미군의 세균무기 실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일 태풍 때는 8부두 내에서 장시간 사이렌이 울려 주민들이 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폐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나섰는데요, 시민단체와 함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부산시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9년 이전에도 맹독성 샘플 반입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극소량이라도 유출된다면 시민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사안이지만 지역 언론의 관심은 적었습니다. 주민투표 움직임과 국감 내용을 모두 보도한 것은 부산MBC입니다.



부산MBC 뉴스데스크 9월 24일 <‘미군 생화학 분석실 폐쇄’..첫 주민투표되나?>(이두원 기자)에서 추진위의 주민투표 청구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부산시가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전례를 전하면서도, 지방자치법 9조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 지자체 사무’라는 조항도 함께 제시해 투표 성사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이어 10월 8일에는 단신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투표 수용해야”>에서 수용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0월 8일 <미군 맹독성 샘플 반입 ‘두 차례’ 더 있었다>(이두원 기자)에서는 8부두에 생화학 물질 반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2019년 이전에도 ‘두 차례’ 더 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이재정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정부측

은 독성을 제거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극소량만 들어왔는데 독성이 제거됐겠냐는 전문가 지적, 또 정부가 독성 제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10월 13일 <부산항 8부두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불발>(단신)에서 부산시가 주한미군 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지방사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지역언론들은 관련 내용을 사진기사 또는 단신으로 전하는데 그쳤습니다.

부산일보는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고, 9일 사진기사 <세균무기샘플 반입 폭로 기자회견>로 추진위의 주한미군 생화학물질 3차례 반입 규탄 소식을 전했습니다. KBS부산은 10월 4일 <"미군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필요" 추진위 발족>(단신), KNN은 15일 아침뉴스에서 <"미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무산 반발">(단신)을 전하는데 그쳤습니다.

추진위는 미군이 수시로 맹독성 사료를 들여온 점 등 주민 불안이 크다며 민간주도로라도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맹독성 물질 반입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고 기후 재난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한미군 부대’라는 이유로 정보 접근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역 언론이 지역 주민의 우려를 적극 전하고 각종 의혹을 공론화해 미군의 일방적인 행보에 제동을 거는 역할에 나서기를 주문합니다.

41주년 맞은 부마민주항쟁, 지역 언론 무엇에 주목했나

부마민주항쟁 의미보다 ‘신공항’ 발언에 더 주목한 부산일보

10·16 부마민주항쟁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난해에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은 관련 규정 미비와 사료 부족으로 멀기만 합니다.

이번 지역언론 투아보기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일에 맞춰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특별취재 한 국제신문

국제신문
 1947년 9월 1일 창간 대표전화 051-8600-5114 부울경 최고신문 kookje.co.kr <30면> 제20663호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41년간 치유 못한 ‘시월의恨’... 트라우마센터 절실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부마항쟁 피해자상 진상규명심고원할
 연도 부산 미선 진상규명 기타 계
 2014 29건 34건 0건 63건
 2015 84건 25건 15건 124건
 2016 15건 21건 0건 36건
 2017 13건 3건 0건 16건
 2018 16건 15건 4건 35건
 2019 38건 84건 3건 125건
 2020 26건 20건 13건 59건
 *자료: 부마항쟁(4·16)추진위원회

진상규명위 피해 400건 국제신문 특별취재팀 분석
 구타·고문 등 피해자 59%
 외상 후 스트레스 앓는 중
 6명 인터뷰 - 치유법 모색

해트락요양병원 사망자 1명 추가
 부울경, 코로나19 병상 공유
 5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부산 학구면해동 해트락요양병원에서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 부산시는 두 달간 확진자가 나오자 울산경남과 병상공유하기로 했다.
 시는 15일 새벽 4시경 530번 확진자가 숨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확진자는 80대 고령자로 기저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트락 관련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1

부마민주항쟁 41주년 추모전인 15일 부산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소전실에서 열린 '부마항쟁의 기억 41년'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을 직접 겪은 역사가가 정성일 화백의 작품 13점이 이날 21일까지 전시된다. 김충진기자

2018년부터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1·2 시리즈’를 보도한 국제신문은 10월 16일, 피해자들의 삶을 집중 조명하는 세 번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16일 1면 <41년간 치유 못한 ‘시월의恨’...트라우마센터 절실>(김화영·신심범 기자) 기사에서 부마항쟁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치유 센터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마 취재했다 A급 중대사범 찍혀... 7년간 기자생활 못 해”>(김화영 기자), <항쟁 다음날, 신문엔 기사 한 줄 없었다>(김화영 기자), <부마 관련자 요주의 인물 낙인에 생활 애로... 배·보상 강화를>(김미희·민경진 기자) 기사를 연달아 실어, 부마항쟁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제대로 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보다 '신공항'에 주목한 부산일보

부산일보

1948년 9월 10일 창간 전화 051-461-4114 제23339호 1판 busan.com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등록번호 95호)

정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대세론 굳혔다

뉴스 분석

정세균 총리 부마항쟁 기념식 동남권신공항관련별도 메시지 "부울경 여망 외면하지 않을 것" 김원미 장관, 박계호 의원 질책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임종위원회 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장 핵심 인사들이 김해신공항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부마신공항은 공적인 대표성의 대신공역이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정세균(서천) 국무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반영될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어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백지화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연설에서 "같은 시·도민들이 동남권신공항에 대해 궁금해할 줄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마항쟁 기념사에서 신공항 관련 메시지를 들은 것은 정부 행사의 관례상 보기 드문 일이다. 정 총리는 그 직전 가진 방송을 부산시장 강연 때도 통해 반대편에서 신공항 관련 얘기를 기념사에서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그만큼 정 총리가 신공항 확장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정 총리는 또 "불과 몇몇 사업은 무엇 보다 국가 전체에 발전과 지역 상생에 공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항쟁 시절 후반기의 외면과 새로운 꿈의 불씨가 된다면 이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선반향 해설이 가능한 대역이지만, 총리실 정중을 하는 예견 인사도 "임종위원 주관

하는 정 총리가 신공항 문제를 핵심 의제 틀어 가겠다는 의지 표면"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정 총리는 5월과 8월 두 번에 이르는 중앙 부울경 의회들, 부산 지역 상공계 인사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진 것도 "객관적인 검증"에 주력해내야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정 총리가 부울경에 상당한 고무적인 압력을 내뿜은 것은 최근 2년 내 초합과 무관지 않아 보인다.

정 총리에 앞서 민주당 야권인 대표는 총리실 임종위에 "별할 논란이 거세 지자"라는 절정은 정부가 8는 것이야"라 대상할 수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재방 경기자사30자 지난 14일 (부산일보)의 인터뷰를 차장해 "김해신공항은 확장성과 안전성에서 높여서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개별신공항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여권의 자기 행동들이 앞다투어 개별신공항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부울경의 숙원이 이 문제를 잘지 않고는 지역 민심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핵심 인물이 현무수심"을 개별신공항에 무게를 실으면서 부울경 여객에서는 "반대" 분위기가 개별신공항으로 기울어 있다는 분위기가 나왔다. 김원호(경남 김해) 의원은 18일 "김해공항 확장은 동남권 권역간균형을 위한 수혜를 얻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기사



아쉬움 달래는 포토존 부산의 대표 축제인 광안리 어항축제가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후 결국 취소됐다. 수영구는 축제 취소의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 우리 도시 안으로 오는 주객들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말인 17일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에 설치된 포토존 10곳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프락요양병원 주말 확진자 15명 추가 발생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후 첫 주말 북구요양원 동전수경사모두 음성

시원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후 첫 주말 동안 부산에서는 북구 요양원 15명 음성에 확진자 18명이 추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취약시설 집단발병과 함께 단문질 니름이어나니 필요수업 확대에 의한 여파를 주목하고 있다.

부산시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날 대비 18명이 추가돼 누적 56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6명은 해프락요양원 14명(중·장년 2명, 환자 12명)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현황			
11월 18일 현재			
확진자	치사	확차자	사망자
2만 5199	565	2만 3312	444
(49%)	(1%)	(4%)	(1%)
부산광역시 현황			
1만 107	1	1만 107	0

해프락요양원에서는 지난 12일 간

호조루사 1명음 시작으로 다음 날 52명(중·장년 10명, 환자 4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어 동남집단(11호의) 개관된 환자와 시발 또는 자가격리된 환자 198명을 재감사한 결과 지난 16일 57명(중·장년 52명, 환자 5명)이 확진됐다.

주말 15명 추가로 이 병원 집단발병 규모는 환자 15명, 중·장년 12명, 환자 7명까지 됐다. 지금까지 검사받은 중·장년 100명(중·장년 4명 포함), 환자 165명(사후 확진 1명 포함) 등 268명 가운데 양성률은 27.5%에 달했다. 감염자가 급나 대까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

병원 밖 감염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 앞서 병원 확진자의 접촉자 13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 북구 요양병원-요양원 16곳 대상 3311명 전수검사도 모두 음성이었다. 부산시는 단계적으로 부산 전체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차례로 확대해 검사한다.

요양병원 관련 '역학조사'는 결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북구 권역 동원에서 발생한 다수의 감염원 대상 사례들과 환자사 간접 접촉 등을 근절해 최초 감염원과 감염원 모두 추적하고 있다.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1명으로 전일보다 18명 늘었다. 최현규 기자 >>>

부산일보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사는 실지 않았습니. 부마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기사는 10월 19일 사회면 하단에 단 1건 있었는데요. <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형물, 마산에 '우뚝'>(이성훈 기자)기사로, 경남 창원시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부마민주항쟁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한편, 10월 19일 1면 머릿기사로 정세균 총리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사 중 신공항 관련 발언에 주목한 기사를 실었습니다(<정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대세론 굳혔다>, 전찬훈 기자). 기사는 "부울경 여망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총리의 말을 강조하며,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정총리 기념사에서 부마항쟁 의미와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한 발언보다는 '신공항' 관련 메시지에 더 집중한 모양새였습니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고통과 진상규명에 주목한 KBS부산, 부산MBC

KBS부산과 부산MBC는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의 고통과 명예회복에 주목했습니다. KBS부산은 10월 16일 <처우 개선은?...부마항쟁 피해자 고통은 여전>(정민규 기자)에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규정 미비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MBC는 뉴스데스크에서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 소식과 사료 부족으로 진상규명이 더뎠고 있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시위대의 눈에 비친 '부마항쟁'·그림으로 재탄생>(류제민 기자)에서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 전시회를 연 '부마항쟁의 기억, 41년 전' 전시회를 소개했는데요. 부마민주항쟁 당시 사진과 영상자료 등 사료가 거의 없어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신으로 기념식 소식만 알린 KNN

KNN은 10월 16일 뉴스아이에서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 열려> 단신으로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 소식을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기념사와 행사에 참석한 주요 정치인 소개에 그쳤는데요.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와 과제는 따로 짚지 않았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보상을 위한 조사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부산시, 관련 기관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만큼 지역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보도를 기대합니다.

인공서핑장 빌미로 해상케이블카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힘 신나

-시흥 웨이브파크 개장에 입 모아 부산시 소극 행정 탓한 지역 언론-

지난 7일 경기도 시흥에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개장했습니다. 타지역 소식이었음에도 관련 내용은 9월30일부터 10월23일까지 총 14차례 부산 지역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웨이브파크는 부산지역 건설사인 대원플러스건설이 만들었습니다. 앞선 2016년, 대원플러스건설은 ‘동부산관광단지 인공서핑장 조성 사업’을 부산시에 제안한 바 있는데요.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2년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에 건립하려다 시흥으로 옮겨간 인공서핑장. 그 탓에 부산지역 언론의 관심이 시흥 웨이브파크로 쏠린 겁니다.

지역 언론은 웨이브파크를 두고 ‘대어’, ‘3조 원 관광인프라’,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이라 표현했는데요. 또 향후 예상되는 고용·생산효과를 언급하며 웨이브파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한 건설사의 동일한 인공서핑장 조성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예상되는 연 방문객 수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매립 후 10년 간 사업 개발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희부지였던 시화호엔 인공서핑장 조성 사업이 적합할 수 있지만, 동부산관광단지라면 사업의 적합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언론은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은 따져보지 않은 채 인공서핑장이 부산에 조성되지 못한 이유로 부산시의 소극행정을 꼽았습니다.



△ 국제신문, 10/9, 장호정 기자

국제신문의 <부산시 미적댄 사이, 3조대 관광인프라 수도권 빼앗겨>(10/9, 장호정 기자)에 따르면 부산의 상공계, 학계, 언론계 인사 60명은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시흥 웨이브파크 개장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개장식에 참석한 지역 상공계·관광업계 인사들의 소회를 전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부산시는 이번 사건을 엄중한 인식으로 바라봐야 할 것”, “부산시 인사가 낮 부끄러워 (개장식에) 오겠나”, “공익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시가 관광인프라 개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와 같이 웨이브파크를 부산에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부산시 행정에 대한 아쉬움 등이 갈무리됐습니다.

또 기사는 해상케이블카 등 지역 사업이 담보인 상태에서 ‘웨이브파크’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무상사용에 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용되는 웨이브파크에 어떠한 공익성이 담보되었는지는 기사에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웨이브파크에 대한 언론의 논조도 지역 상공계 인사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대의 버스를 함께 타고 웨이브파크 개장식에 참석했다는 지역의 상공계, 학계, 언론계. 그 결과 상공계 인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부산일보는 데스크칼럼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부산시>(10/13, 김마선 기자)를 통해 기



△ 부산일보, 10/13, 김마선 기자

평가했습니다.

부산지역 언론 5개사 중 ‘웨이브파크’ 개장 소식을 뉴스로 전하지 않은 건 KBS부산이 유일했습니다. KBS부산은 유튜브 채널 ‘부케부캐’를 통해서만 웨이브파크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지난 21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웨이브파크’가 언급되며 4건의 보도가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국제신문 <“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행정>(10/22, 이병욱 기자), 부산일보 <‘웨이브 파크’, 부산시 복지부동 ‘대표 사례’ 오명>(10/22, 김영한 기자), 부산MBC <부산시의회, 인공서핑장 부산 경위 추궁>(10/21, 이만흥 기자), KNN <‘인공 서핑장도 놓치고’, 민자사업 ‘하세월’>(10/21, 김성기 기자) 4건 기사 모두 사업타당성은 들여다보지 않고, 부산시의 무사안일한 행정력이 부산의 관광 인프라를 발목잡고 있다는 시정 질의를 그대로 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사업 담당 공무원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사실을 비롯해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분명 지역 언론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번 ‘웨이브파크’와 관련해 지역언론이 부산시를 향해 보여준 비판은 구체적인 취재는 생략한 채, 되려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부

사엔 미처 다 담지 못한 웨이브파크에 대한 아쉬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칼럼은 웨이브파크 사업은 부산이 ‘농친 딱’이라며, 민선7기를 “기업인들을 적폐로 취급하고, 개발사업은 색안경을 끼고 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에 짓눌려 부산이 점점 활력을 잃어간다고 지적했는데요. 뒤이어 대원플러스건설 최삼섭 회장에 대해선 “최 회장은 출장 시 차에서 김밥으로 아침을 때우곤 한다. 기회와 이익이 있다면 고생도 마다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웨이브파크 개장식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최 회장에게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기사는 자신이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시에서 연락이 왔느냐 물었지만 “아직 없다”고 답이 왔으며 최 회장에게 연락하지 않은 부산시에 대해 “실패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라

산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양 강조해 안타까움이 큼니다.

한 건설사가 부산에 먼저 제안했으나 시흥에 조성된 인공서핑장, 개장 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서핑장이 부산시의 오명으로 남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를 빌미삼아 지역사회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각종 개발 사업을 일사천리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를 쓴 지역 언론들. 지나친 비약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매체	기사 제목
KBS 부산	〈'부산'이 놓친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시흥에 생긴〉(KBS부산 유튜브 채널 '부케부캐', 10/16)
부산 MBC	〈'시흥'에 세계 최대 서핑장.. 부산 떠난 이유는?〉(뉴스데스크, 10/7, 박준오 기자) 〈"국내 최대 인공서핑장 시흥으로 간 이유는?"〉(뉴스데스크, 10/21, 이만홍 기자)
KNN	〈지역기업, 수도권서 인공서핑장 개장〉(모닝와이드, 10/8, 구형모 기자) 〈부산시, 아쉬운 것은 리더십〉(모닝와이드, 10/21, 길재섭 기자) 〈'인공서핑장도 놓치고', 민자사업 '하세월'〉(뉴스아이, 10/21, 김성기 기자)
국제 신문	〈대원플러스그룹 시흥에 인공서핑파크 개장〉(13면, 10/7, 장호정 기자) [사진기사]〈365일 서핑 즐기는 곳 '웨이브파크' 개장〉(10면, 10/8, 대원플러스그룹제공) 〈부산시 미적댄 사이, 3조대 관광인프라 수도권에 빼앗겨〉(4면, 10/9, 장호정 기자) 〈"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행정〉(5면, 10/22, 이병욱 기자)
부산 일보	〈경기도 시흥 '웨이브파크' 개장 눈앞...'대어' 놓친 부산시 속앓이〉(5면, 9/30, 김마선 기자) [사진기사]〈시흥에 생긴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1면, 10/8, 연합뉴스) [데스크칼럼]〈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부산시〉(23면, 10/13, 김마선 기자) 〈'웨이브 파크', 부산시 복지부동 '대표 사례' 오명〉(8면, 10/22, 김영한 기자)

△ 9/30~10/23, '웨이브파크' 관련 부산지역 언론 보도 목록

시청자 기만 이대로는 안 된다 KNN, EBS 등 보험 영업 목적 프로그램 협찬 받아 방송

키움에셋플래너, FM에셋 등 재무설계 업체가 공영방송 EBS뿐 아니라 지상파, 종편에 재무 정보 프로그램을 협찬 제작해, 시청자 정보를 확보하고 보험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지역 지상파방송인 KNN은 키움에셋플래너, FM에셋의 협찬 프로그램을 모두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어오늘 <EBS ‘머니톡’ 보고 상담했더니 개인정보 팔아 8만원>(10/7), <‘보험판촉 도구’ 재무설계 방송의 민낯 드러났다>(10/14)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공영방송 EBS <머니톡>은 키움에셋플래너의 보험 영업을 위한 방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톡>에는 협찬사인 키움에셋플래너 소속 직원이 전문가로 출연했고, 재무설계·보험상담 명목으로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험설계사들에게 판매했다는 겁니다. FM에셋은 TV조선과 KNN 등 종편, 민방에 방송을 편성했고 방송에 출연할 보험설계사를 모집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업체들이 방송을 통해 영업에 나선 것은 양질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디어오늘이 확보한 키움에셋플래너 내부자료에 따르면 방송 목적을 자사 홍보가 아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뒀다고 합니다.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상담을 해준다고 하니 시청자들은 의심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KNN <머니톡> <톡톡보험설계>, 협찬 방송이라 고지해야...

KNN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머니톡>을 방송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지는 않고 EBS <머니톡>을 그대로 편성·방송했고, 상담 안내 번호만 지역번호로 바꿔 공개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는 <톡톡보험설계>를 방송하는데요, KNN기획, KNN미디어플러스 제작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FM에셋의 협찬 방송입니다.

<머니톡>은 시청자들에게 각종 재무관리 전반에 관한 실용적인 가이드와 정보를 제공한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알렸으나, 실상은 보험 판매에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 확보를 위한 판촉 상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KNN 방송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상담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키움에셋플래너에 개인정보가 전달돼 보험 영업에 활용된 것입니다(정보 입력 게시판에 키움에셋플래너 연관성 공지하지 않았다가, 미디어오늘 보도로 문제가 된 이후부터 안내하고 있습니다).



△ KNN 10월 17일 <머니톡> 화면

또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콜센터에서는 'KNN 돈이 되는 머니톡 콜센터'라고 안내하는데, 키움에셋플래너가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이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업체를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수집된 시청자 개인정보는 정보 유형에 따라 7~8만 원에 보험업체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상담 정보가 판매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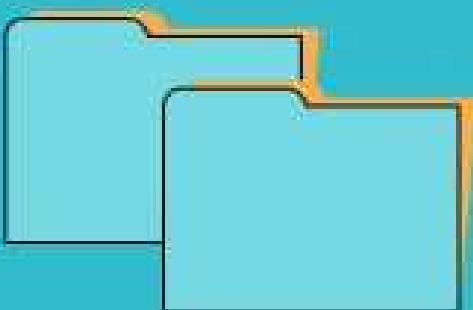


△ KNN 홈페이지 <머니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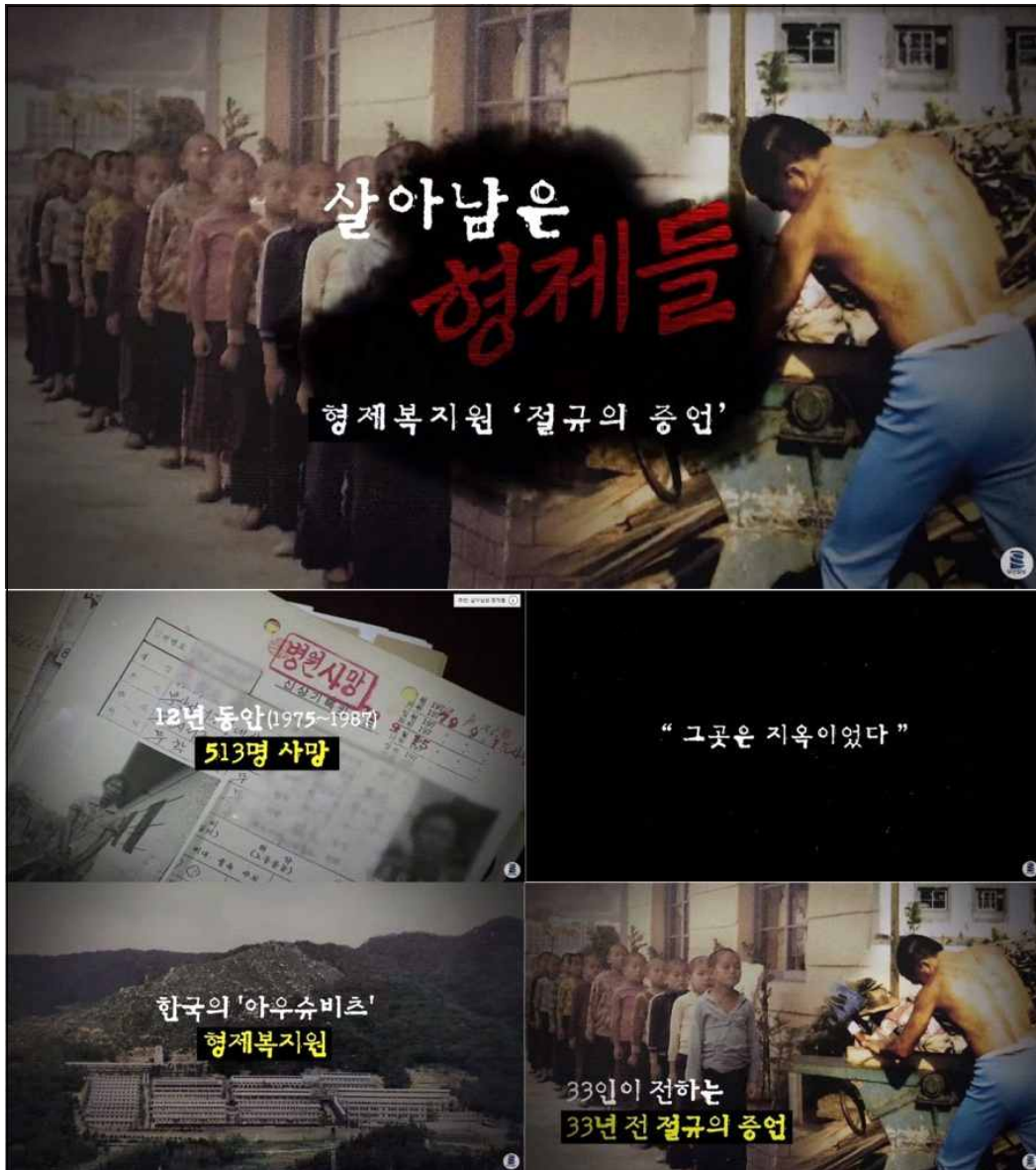
협찬 방송임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채 유용한 재무상담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방송한 EBS와 KNN은 시청자를 기만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과 함께 언론사의 협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사회적 논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 시청자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11월

투표아보기



구술 증언 모아 진실 규명에 다가가다 형제복지원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확산력 더한 <부산일보>



▲ <부산일보> '살아남은 형제들' 영상 캡처 화면

<부산일보>는 2020년 4월, '살아남은 형제들-형제복지원 절규의 증언' 영상 구술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부산일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형제복지원 피해자 33인의 증언을 글과 영상으로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28 명의 증언을 통해 33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형제복지원에 들어가게 된 각기 다른 계기에서부터 형제복지원에서의 인권 유린 사례 그리고 형제복지원을 벗어났지만 벗어난 게 아니었던 이후의 삶까지. <부산일보>의 이번 프로젝트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부산일보>는 11월 2일 자 1면에 <“우리의 목소리, 제발 들어 주세요”… 형제복지원 ‘살아남은 형제들’>(이대진 기자)을 실었습니다. “10개월에 걸쳐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참상의 기록을 집대성한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완성해 2일 독자께 선보인다.”고 인터랙티브 페이지 개시를 알렸는데요. 해당 기사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숨죽인 채 살아온 피해자들. 이들에게 얘기를 들어 줄 ‘귀’, 대변해 줄 ‘입’이 필요했다”며 <부산일보>가 구술 영상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한 이유와 나아가 단순 기록에서 머무르지 않고 인터랙티브 페이지 제작을 통해 확산력을 높이고자 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방문해 본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증언·증거·기억·기록’ 5개 챕터로 구성돼있었는데요. 한 페이지에서 스크롤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증언부터 형제복지원 시설 현장, 관련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 세상에 처음 드러난 이후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차츰 잊혀 가던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일보>의 ‘살아남은 형제들’ 프로젝트는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당시의 참상과 이후의 삶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이 피해자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음을,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 또 고층 개발? 주목 않는 지역 언론...계획부터 따져본 KBS부산



▲ ‘해운대 그랜드호텔 난개발 논란’ 관련 보도 앵커브리핑 화면 캡처(11/3·4, KBS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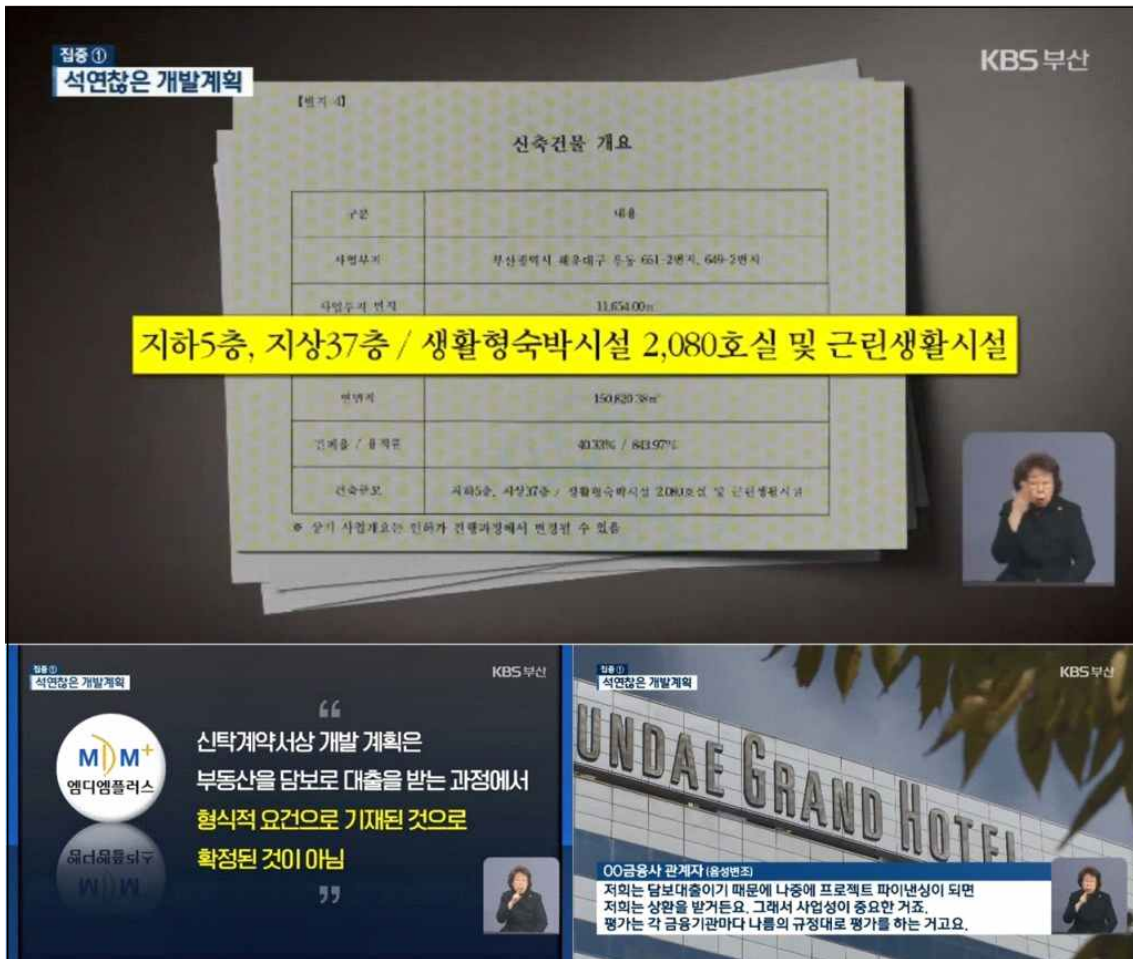
지난해 폐업한 해운대 그랜드호텔은 ‘밀실 매각’, ‘위장 폐업’, ‘러시아 마피아 자금세탁’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KBS부산은 호텔을 허물고 사실상 주거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난개발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11월 3일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4일 내부고발자로부터 확인한 과거 금품로비 정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대규모 주거단지 전략?...석연찮은 개발계획>(11/3, 최위지 기자)은 MDM플러스 그룹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탁계약서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지상 37층 규모로 높이 약 103m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구에 100m 넘는 건축물은 비리로 얼룩진 ‘엘시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KBS부산의 문제 제기에 MDM플러스그룹은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개발계획서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금융권은 땅의 담보 가치와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MDM 측이 호텔 터를 인수한 지 7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대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운대 바닷가에 2천 가구 들어서면?>(11/3, 공용조 기자)은 MDM플러스 그룹이 제출한 신탁계약서를 토대로 개발이 진행될 시 해운대 일대에서 불거질 문제를 짚었습니다.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아파트보다 주차장 면적을 절반 이상 적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주차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무엇보다 해운대 그랜드호텔의 용도 변경으로 주변 호텔도 용도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또 대규모 주거단지 전략?...석연찮은 개발계획> (11/3, 최위지 기자)

KBS부산은 ‘해운대 그랜드 호텔’ 개발 논란 보도를 다음 날에도 이어갔는데요. <“호텔 허물고 아파트 지으려 금품 로비”>(11/4, 공용조 기자)에 따르면 해당 터의 용도 변경 추진 움직임은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 해운대 그랜드호텔을 인수한 경영진은 그 당시부터 고도제한을 푼 뒤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데요. 기사는 해운대그랜드 호텔 내부고발자의 발언을 토대로 당시의 용역계약서, 금품로비 정황 등을 전달했습니다.



▲ <해운대 바닷가에 2천 가구 들어서면?>(11/3, 공용조 기자)



▲<“호텔 허물고 아파트 지으려 금품 로비”>(11/4, 공웅조 기자)

‘해운대 그랜드호텔’ 개발 논란은 <해운대그랜드호텔 자리에 레지던스 짓나?>(부산일보, 7/28, 11면), <“해안 고층 레지던스…관광 경관 훼손 우려”>(국제신문, 9/17, 6면) 로 보도된 바 있지만 모두 단발성 보도에 그쳐 아쉬웠습니다.

이후 ‘해운대 그랜드호텔’ 개발 논란은 시민단체와 시의원의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KBS부산은 11월 3일과 4일 <뉴스9> 의 주요 뉴스로 보도해 논란이 현재진행형임을 알렸습니다. ‘비리백화점’으로 남은 엘시티를 비롯해 난개발에 대한 지역 언론의 감시는 사후약방 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KBS부산의 이번 보도는 개발 계획단계서부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언론의 감시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부산 시민 주거 안정 흔들리는데 치솟는 부동산 가격만 강조하는 지역 언론



▲ 국제신문, 11월 9일, 1·3면

국제신문은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이하 해·수·동)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1년을 맞아 솔렉스마케팅과 함께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을 종합 분석했는데요, 분석 내용은 <해수동 아파트 '불장'...서부산에도 번졌다>(11/9, 1면 머리기사, 송진영 기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해당 기사는 “수도권에서 통용되던 ‘부동산 가격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속설이 어느새 부산에서도 증명된다.”라는 문장을 통해 ‘부동산 불패론’에 힘을 실어주며 시작합니다. 그 근거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해·수·동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에 있다는 사실, 지역별 상승세, 서부산권의 가격 오름세 등을 제시했습니다.

3면 <집값 상승세 신축 주변부로 확산...구축도 '물지마 계약'>(송진영 기자) 기사에선 부동산 급등에 대한 원인과 내년 상반기까지의 전망을 담았는데요. 해당 기사는 ‘부산 아파트 가격이...저평가 됐다는 주장’, ‘정부의 견고한 규제로 수도권 시장 투자가 힘들어진 상황’,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에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라며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외지인의 투자를 꼽았습니다.

국제신문의 두 기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에 있다는 사실을 지표로 보여주고 이러한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의 전망을 연결하고 있었는데요.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이나 외지인이 불러온 과열 양상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 주의점 등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의 규제 시행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이어온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만 내놓은 셈입니다.



▲ KNN <뉴스아이>, 11월 10일

반면에, KNN 뉴스아이의 <부동산 급등세 경남지역으로 확산>(11/10, 표종규 기자) 리포팅은 외지인 작전세력으로부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춘 보도였는데요. 해당 리포팅은 “20년 가까이 부동산 해왔지만 이런 예는 없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주로 외지, 경기도나 부산, 대구쪽 사람들이 주로 경남에 갭투자 형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과 같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인터뷰를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전하는데 집중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강조하며 무주택자의 박탈감을 조성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비정상적임을 전하는데 주력한 건데요. 기자는 부동산 상승세 분위기 속에서 추격 매수, 즉 뒤따라 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멘트로 리포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후 21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부산. 이는 부산 시민의 주거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지역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야 할 사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은 누군가에겐 박탈감의 연속, 누군가에겐 기회의 연속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기에 언론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상승세만을 전달하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부산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과 규제가 필요한지 짚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와 같이 상승세를 강조하고 장밋빛 전망을 내비칠수록 ‘영끌’ 분위기는 더욱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짚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 집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패싱’하는 지역언론

- 지역언론이 보도 않으면 지역 정치 감시는 누가하나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역(지방)의회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대표자로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현직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사퇴를 해 시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시정은 차질 없이 운영되었는지, 코로나19 국면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북항을 비롯한 난개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주요한 지역의제가 많은 만큼 부산시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의회가 부산시와 교육청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이라면, 시의회의 활동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지역언론의 역할입니다. 지역언론은 시의회의 활동을 정확하게 알리고 있을까요? 지역언론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부산시의회는 6개의 상임위로 구성돼 있는데요. 11월 13일부터 하루 평균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엔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가 일부 올라와 있었는데요. 북항재개발 방향성 점검, 해운대 더베이101 재산세 감면 혜택, 무분별한 공공 행정용어, 부산롯데타워 문제점과 대책 마련 촉구 등 부산 지역의 정치 이슈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BS부산	부산MBC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
11/13	0	0	0	0	1
11/14	0	0	0	휴간	휴간
11/15	1	0	0	휴간	휴간
11/16	2	0	0	1	2
11/17	1	0	1	1	1
11/18	0	0	0	0	0
합계	4	0	1	2	4

▲11/13~18 부산시 행정사무 감사 관련 보도 건수

*신문은 지면기사, 방송은 전체 뉴스 기준(중복된 보도는 1건으로 집계)

하지만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심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언급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언론 5개사 모두 해양교통위원회의 활동을 주요하게 다뤘는데요. 11건의 보도 중 8건에서 해양교통위원회의 북항재개발, 롯데타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부산시의회 6개 상임위에서 13, 16, 17, 18일 나흘 간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음에도 특정 상임위로만 지역언론의 관심이 쏠린 모습이었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외 다른 상임위 관련 기사는 3건으로 KBS부산 2건, 부산일보 1건이 있었습니다. KBS부산 <부산 행정 질타…“동물원 소송 공동 대응”>(11/17, 김아르내 기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나온 삼정동물원 소송건 관련 내용을 다뤘고, <부산시 올바른 국어 사용 100억 투입…효과 ‘미흡’>(11/16·17, 단신)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의 보도자료 기반 보도였습니다. 부산일보는 <시립미술관 비 줄줄 샐는데 시는 리모델링 질질 부산 시민이 김환기·박수근 그림 못 보는 이유>(11/16, 오금아 기자)를 통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부산MBC는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언급한 보도는 없었는데요. 11월 15일 <장비도 없이 낙찰…공사 지연 후 ‘범람’>(류제민 기자)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 건수 집계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기사가 전달한 내용은 인터뷰이로도 등장한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시의원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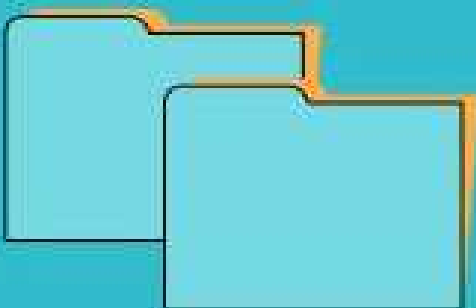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산공공성연대·부산참여연대(11/3),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11/7) 등 시민단체는 행정사무감사 의제 및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의제를 시의회에 전달했는데요. 부산공공성연대·부산참여연대는 시민 의제 1위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았습니다. 시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대로, 했다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전달해야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행정사무감사 보도는 없었습니다.

지역언론의 행정사무감사 보도 중 KBS경남의 기획이 눈에 띄었는데요. 경상남도의회는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KBS경남은 11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경남의 현안과 쟁점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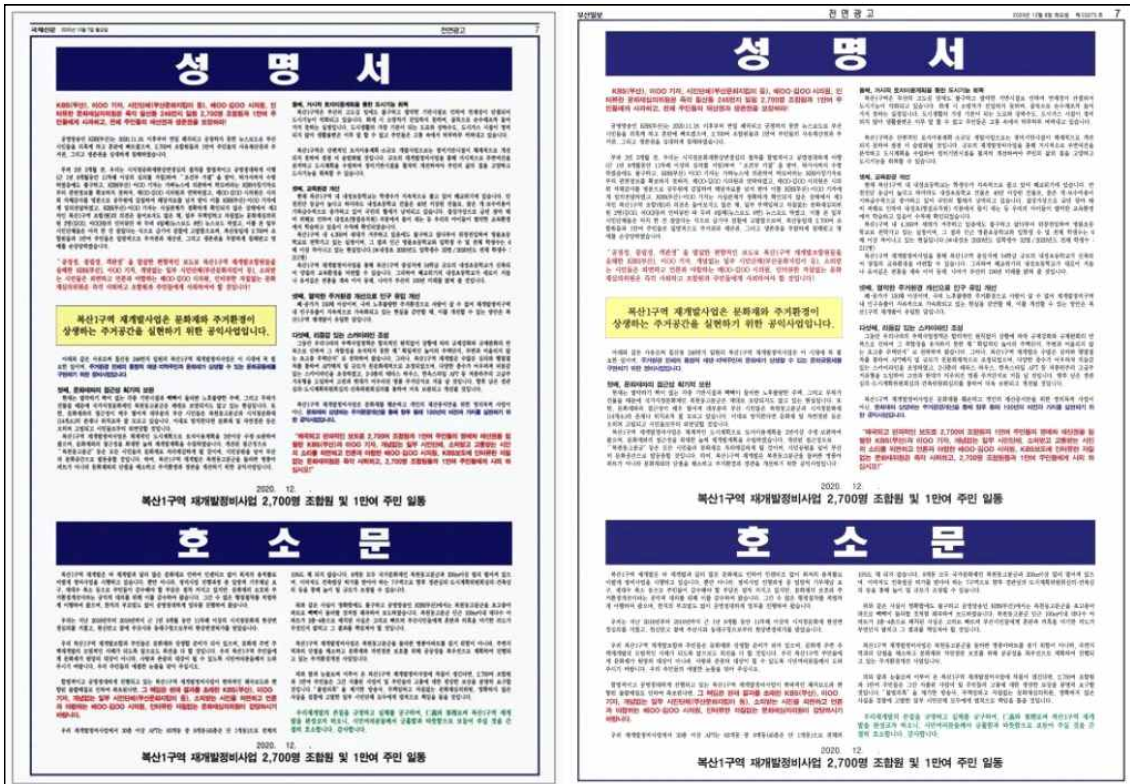
부산시의회 6개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부산시민은 시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남은 기간, 행정사무감사 일정 이후에라도 부산시의회 6개 상임위의 활동을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달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12월

표아보기



KBS부산 보도에 압력 행사한 성명서를 전면광고로 게재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 국제신문(7일), 부산일보(8일) 7면에 실린 의견광고

지난 7일과 8일,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7면엔 ‘성명서’라는 제목의 전면광고가 실렸습니다. 일종의 의견광고였는데요.

‘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지점은 지역언론에 대한 사과축구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언론의 보도로 조합원과 주민들의 재산권·생존권이 침해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건데요. 지역언론에 대해 ‘가짜뉴스에 의존’하여 왜곡되고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 또 보도에 등장한 시의원,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갑질’, ‘개념없는 시민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고에서 재개발 조합원들이 사과를 촉구한 지역언론은 KBS부산의 보도인데요. 국가사적 ‘북천 고분’ 주변에 5,122세대 고층아파트 설립 추진 과정 중에서의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조작, 위원에 대한 주민 압력 행사 등 지역의 재개발 심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됐는지를 감

시·비판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언론이 심의과정상의 문제를 짚었다고 하더라도, 취재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조합원들의 반박은 지켜져야 할 권리임엔 틀림없습니다.

재개발의 문제를 짚는 보도와 이에 대한 반발은 종종 반복되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보도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보도를 촉구하거나 언론중재위 제소, 소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번 사안은 의견광고를 선택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게재된 의견광고 내용을 보면 ‘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편파적인 왜곡보도와 편향된 돌팔매질로 인하여 좌초된다면’이라며 KBS부산의 보도를 왜곡보도라 확정 짓고 나아가 ‘그 책임은 현재 결과를 초래한 KBS(부산)기자·감당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일종의 보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일대 재개발 사안을 두고 벌어진 KBS부산과 재개발 조합원 간의 갈등 아닌 갈등. 이 갈등 국면에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전면광고’를 통해 경제적 이득만을 취했습니다. 기사가 아닌 광고도 ‘국제신문’, ‘부산일보’라는 신문사 이름 아래의 지면을 사용하기에 언론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 언론도 이 의견광고의 주체로 인식케 됩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현혹해선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참여한 사안에 대해 ‘전면광고’로만 응한 두 신문사에 아쉬움이 큼니다. 지역언론은 팩트체크 및 저널리즘 구현이라는 공동의 책임을 가졌기에 그러합니다. 또 지역신문 지면에 실린 광고는 여느 광고와 달리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큼을 유념하여 보다 신중한 게재를 당부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 마지막 복직 투쟁, 전국지보다 공론화에 소극적인 지역신문

오늘로 177일 차입니다. 1986년 6월 해고돼 35년째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 (현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의 마지막 복직 투쟁이 시작된 지 12월 16일 인 오늘로 꼭 177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77일 동안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는 출근 선전전·단식농성으로 함께 했고, 부산시의회는 복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복직 권고 미이행을 규탄했습니다. 시민, 노동자, 정치인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투쟁에 함께해 온 건데요.

또 다른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역언론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투쟁에 어떤 모습으로 함께해 왔을까요?

먼저 ‘빅카인즈’(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전국언론과 지역언론의 보도 건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지난 6월22일부터 12월15일까지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언론(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과 지역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을 대상으로 ‘김진숙 복직’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매체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건수	29	1	1	0	0	3	1	1	2	16	2

▲ <빅카인즈>에 ‘김진숙 복직’이라 검색한 결과(2020.6.22.~2020.12.15.)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건수	2	7

▲ <빅카인즈>에 ‘김진숙 복직’이라 검색한 결과(2020.6.22.~2020.12.15.)

<빅카인즈> 검색 결과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보인 건 경향신문(29건)이었고 한겨레(16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신문사 외 전국지는 0~3건의 보도 건수를 보였고 주로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선일보 <[단독]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상징 김진숙 복직하나>(10/20)는 ‘민노총 측선 “11년 치 임금도 달라” 평균임금 계산 땀 8억8000만 원’이라는 중제를 달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복직보다는 밀린 임금의 액수에 초점을 맞춰 복직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빅카인즈> 검색 상으로는 각각 2건, 7건의 보도 건수를 보였는데요, 실제 ‘김진숙 복직’과 관련한 사안을 전달한 지면 기사는 국제신문 2건, 부산일보 3건이었습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씨, 마지막 복직 투쟁 나선다>(6/23, 4면)	<‘희망버스’ 상징 김진숙 지도위원 ‘해직3년’ 한진중공업 복직투쟁>(6/23, 11면)
<노사화합의 새로운 장 열고자 오늘도 복직 촉구>(11/6, 16면)	<[밀물썰물] 사번23733 김진숙>(10/16, 22면)
	<‘김진숙 복직시켜라’ 19일 ‘리멤버 희망버스’>(12/15, 6면, 1단)

▲ ‘김진숙 복직’을 언급한 지면 기사 목록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6월 23일 각각 4면과 11면에 ‘김진숙 조합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 '김진숙 복직투쟁'을 알린 첫 기사(좌, 국제신문 우, 부산일보)

이후 국제신문은 1건의 기사가 더 있었는데요, 김 지도위원으로부터 복직의 의미, 부당 해고된 이유, 최근 복직 흐름을 듣고 사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산일보는 복직을 촉구하는 칼럼 1건과 희망버스 출발을 알리는 1단 기사 1건이 있었습니다.

두 신문사는 부산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정감사 증인 출석, 단식 농성 등 복직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면에 실지 않았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왜 복직을 미루는지, 이번 복직의 의미가 노동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추가 취재는 고사하고 '복직'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조차 보도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큼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건이 지면에만 실리지 않았을 뿐, 인터넷 기사로는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미뤄 볼 때 두 언론사의 데스크가 해당 사안을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짐작해 합니다.

반면 지역방송사 KBS부산과 부산MBC는 '김진숙 복직 투쟁'을 지역의 현안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NN은 관련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중 KBS부산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김진숙의 마지막 버스] 1, 2편은 2020년 현재 김진

숙 지도위원에 주목해 생생한 복직 투쟁 현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어떻게 김진숙 지도위원이 2020년의 평등버스와 연결되고 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이외에 KBS부산은 스튜디오 초청 인터뷰 1건, 단신 2건이 있었습니다.



▲ KBS부산 유튜브 <김진숙의 마지막 버스> 1,2편 캡처 화면

부산MBC는 총 3건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중 2건이 리포팅, 1건이 단신 기사였습니다. <35년 복직투쟁 “복직은 마지막 소원”>(10/13) 을 통해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투쟁 현장과 목소리를 전달했고, <매각 앞둔 한진...마지막 복직자 되나>(10/26) 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내용 중 지역의 현안으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에 초점 맞춰 보도했습니다.

신문 지면의 한계보다 방송 뉴스의 시간적 한계가 더 크다는 점을 떠올려 볼 때, ‘김진숙 복직 투쟁’에 보여준 관심의 크기는 보도 건수는 비슷할지라도 지역방송사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복직 투쟁을 밝힌 6월 23일 이후로 177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남짓의 시간에 전국지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45차례 ‘김진숙 복직’을 언급했고 지역언론은 5개사 통틀어 총 11차례 ‘김진숙 복직’을 언급했습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선전전, 단식농성, 기자회견으로 알리는 동안, 정치계가 결의안 채택과 기업인 질책으로 해법을 도모하는 동안, 취재와 기사로 공론화해야 했을 지역언론. 정말 11건의 보도가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정치권 재추진에 힘쓰는 언론 돌이킬 수 없는 개발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 국제신문 12월 11일 2면 기사

부산시 반려로 중단된 바 있는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재추진 촉구에 나섰습니다. 남구의회가 12월 11일 해상케이블카 민간사업을 유치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15일에는 부산시의회 이용형 시의원(남구)이 본회의 5분 발언으로 해상케이블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해당 지역 정치권에서 입장을 표명한 사항이라 지역언론도 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은 가장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먼저 11일 <“해상케이블카 만들자” 남구의회 유치전 재점화>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남구의회가 결의안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시 반려로 중단된 뒤 재추진을 앞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7일 <이기대~동백섬 해상케이블카 도입 촉구>에서는 이용형 의원 발언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의회 5분 발언을 전했는데요, 청년인구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을 요구한 김태훈 의원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지만 제목에서는 해상케이블카 도입 주장을 부각했습니다.

부산일보는 11일 <“부산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유치하자”>에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남구의회 의원 전원이 결의안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시기부터 찬반이 엇갈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KNN은 14일 단신으로 남구의회 결의문 채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 지역 건설기업에 의해 추진되었다가 교통난, 환경훼손, 공공재인 바다 사유화 등 논란이 일었고 부산시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반려한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 정치권이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논란 끝에 중단된 사업이 왜 다시 추진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 사유는 지금은 해소된 것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재추진에 주목할 뿐 당시 제기된 문제 해소 여부 또는 해결 방안 모색 여부는 짚어보지 않아 아쉬움이 큼니다.



△ KBS부산 12월 11일 <뉴스9>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다른 입장과 추진 상황 등은 KBS부산 뉴스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11일 <사업성 없는데 의회가 '해상케이블카' 추진> 기사는 미래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남구의회 백석민 의장의 인터뷰와 함께 해운대로 관광객이 흡수당하는 '빨대 효과'를 우려하는 박재범 남구청장 인터뷰, 해상케이블카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 입장도 전했습니다. 또 10월에 이기대 공원 전체가 환경 보전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보전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황, 사업 시행사인 부산블루코스트 측은 정작 기존에 제기된 환경파괴와 교통 체증 등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알렸습니다.

한편 부산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전국적인 해상케이블카 건설로 관광효과 정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대 논평도 KBS부산만 보도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와 같은 대형 건설 사업은 한번 추진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 책임기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오히려 지역언론은 최근 '신중만 피하다가 기회를 놓친다'거나 '환경 파괴 등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입장이나 논조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임을 잊은 듯합니다.

'해고 노동자 복직' 위해 달린 '리멤버 희망버스' 교통체증과 시민불안에 주목한 부산일보

지난 12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희망차량'이 부산 영도에 모여들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남은 해고노동자 김진숙(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씨의 복직 투쟁을 응원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했던 9년 전 그날처럼, '해고 없는 세상',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펼침막을 단 차량들이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을 응원하기 위해 영도에 다시 모인 겁니다.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가 열렸던 12월 19일(토)부터 21일(월)까지 포털을 통해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요, 총 14건의 글 기사가 있었고 이 중 5건이 부산 지역언론 기사였습니다.

매체	배치	헤드라인
부산MBC	첫 소식 리포팅	9년 만의 희망버스... "김진숙 복직 염원"(12/19)
연합뉴스	온라인	부산서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희망버스'(12/19)
부산일보	온라인	9년 만에 영도 찾은 '리멤버 희망버스'... "김진숙 복직 촉구"(12/19)
한겨레	온라인	이달 정년 맞는 용접공 김진숙 '복직 희망 차량' 9년만에 달렸다(12/19)
민중의소리	온라인	김진숙 복직 위해 9년 만에 부산 찾은 '희망버스'... "복직 없는 정년 없다"(12/19)
오마이뉴스	온라인	"복직없이 정년없다" 9년 만에 달린 김진숙 희망버스(12/19)
국제신문	온라인	부산 영도 찾은 '희망버스'... 김진숙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12/19)
노동과 세계	온라인	'김진숙 복직'위해 9년 만에 영도 찾은 희망버스(12/19)
KBS부산	단신	"김진숙 복직 촉구"...9년 만에 달린 희망버스(12/19)
폴리뉴스	온라인	김진숙, "해고없는 세상, 죽지 않고 일할 권리"(12/20)
한겨레	12면 3단	9년 만에 다시...100개 도시서 모여든 '희망버스'(12/20)
부산일보	10면 2단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에 도심 '몸살'(12/20)
경향신문	1면 2단	"김진숙 복직을" '희망 차량' 행진(12/20)
매일노동뉴스	온라인	9년 만에 달린 희망버스 "복직 없는 정년은 없다"(12/21)

▲ 포털에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희망버스'라고 검색한 결과 중 글 기사 제목 목록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에 도심 '몸살'

'리멤버 희망버스' 등 잇단 시위 시민들 "코로나19 감염 불안"

부산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500명을 넘는 가운데 주말동안 부산 곳곳에서 차량 집회가 이어졌다. 주최 측은 비대면 방식이라 참여자의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일부 시민들은 교통 정체와 코로나 확산을 우려했다.

19일 오후 4시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정문 앞 2시간 전 시작된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한 차량 50여대가 1개 차로를 따라 수백m 늘어섰다. 이들은 35년 전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참여 차량에는 '김진숙 복직'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주최인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각지에서 410대의 차량이 영도에 모였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참여 차량은 500대가 넘을 것으로 주최는 추산했다. 민주노총 부산지부 김진숙희망버스기획단 남영란 대변인은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인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했다. 차량에 탄 집회 참여자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49대씩 무리를 지어 영도 일대를 순환했다"고 말했다.

이런 차량 집회는 부산 곳곳에서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과 '우리공화당 부산시당' 주최로 '현 정부 퇴진 차량 행진'이 이어졌다. 이 집회에 참여한 70명은 차량 40대를 타고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 서구 압남공원, 해운대구 요트경기장 등 부산 주요 지역을 행진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 집회는 참여자 사이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도심 곳곳에 교통난을 빚었다. 경찰은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 시간 동안 한진중공업 앞을 포함한 영도 각지에 4개 중대를 투입했다. 경찰 1개 중대는 약 70명이다. 영도 안에 차량 수백대가 한 번에 몰리면서 교통 정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도의 도로 상황과 집회 참여 차량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교통 정체가 예상돼 관련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집회'임에도 시민들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한진중공업 앞 집회 현장을 지나던 김창민(41·영도구 동삼동) 씨는 "차량 집회라고 해도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다. 집회 주최자들도 결국 차에서 내려 뒀가를 하지 않느냐"면서 "최근 코로나 경로 안내 문자가 자주 와서 불안한데, 사람이 몰리는 집회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상배 기자 sangbae@



지난 주말 한진중공업 '리멤버 희망버스' 행사(사진)와 보수단체의 차량 시위 등 부산지역 곳곳에서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열려 일부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나타냈다.

▲ 부산일보, 12월 21일, 10면

14건의 기사 중 부산일보의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에 도심 '몸살'>(12/20)을 제외하면 모두 기사 제목에서 '9년', '김진숙', '복직', '희망버스'를 언급하며 9년 전 희망버스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투쟁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일보도 12월 19일 온라인 기사에는 <9년 만에 영도 찾은 '리멤버 희망버스'...“김진숙 복직 촉구”> 라는 제목을 통해 다른 언론사와 비슷한 논조로 '희망버스' 집회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21일 지면에 실린 기사는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에 도심 '몸살'>이었습니다. 총 6단락으로 구성된 해당 기사는 첫 단락에서부터 '부산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며 희망버스의 의미보다는 집회로 인한 교통 정체와 감염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2,3단락에선 19일 열린 '리멤버 희망버스'의 비대면 집회 형식을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이어 4단락에선 같은 날 있었던 다른 차량 집회를 언급했고, 5단락에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로 인한 교통난, 6단락에선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 불안과 함께 “집회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해당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도 눈에 띄었는데요,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의 취지나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희망정류소를 지나는 차량 행렬이나 35타종 행사, 유튜브 방송 등의 모습을 선택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부산일보는 기사의 내용과 동일하게 차량들이 얽혀서 정체되어 있는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복직 투쟁을 이어온 지난 6개월 동안 부산일보는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과 관련해 글 기사 3건, 사진 기사 1건, 칼럼 1건을 실었습니다. 글 기사의 경우 복직 투쟁 시작을 알리는 기사 1건, 희망버스 집회 예고 기사 1건 그리고 집회로 인한 교통난, 감염 확산을 우려한 기사 1건이었습니다.

지역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복직 투쟁을 이어 온 김진숙 지도위원, 그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차량 행렬에 대해 6개월간 단 3건의 기사를 작성한 부산일보는 '교통난'과 '코로나 확산' 우려만을 기록했습니다.

전봉민 의원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지역언론 관심 보궐선거 셈법에만 머물러선 안 돼

지난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1대 국회의원 재산 1위인 전봉민(부산시 수영구) 의원의 재산 형성과정을 밀착 취재했는데,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는 전봉민 의원의 부친인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이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제시하며 보도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전광수 회장의 시대착오적인 언론 대응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봉민 의원은 국민의힘 당을 탈당하며 아버지의 ‘3천만 원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제기한 의혹은 비단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에만 국한돼 있지 않았는데요. 초고층 아파트 ‘이진베이시티’의 인허가 과정 중 민간기업이 제출한 경제성 분석자료가 추가 검증 없이 통과된 것을 짚었고 무엇보다 전봉민 의원이 시의원 당선 이후 이진종합건설의 매출이 급증했으며 당시 전봉민 의원은 2008년부터 2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 변경 등을 관할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상임위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해관계충돌 가능성을 짚은 겁니다.

전봉민 의원의 재산 형성과 아파트 인허가 과정 등에 제기된 각종 의혹,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스트레이트> 방영 이후 일주일간(12/21~12/28) 지역언론 보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신문은지면기사, 방송은 지역 저녁뉴스 기준입니다.

날짜	매체	제목
12/22	부산일보	전봉민 부친, 기자에 “3000만 원 줄게”(5면)
12/22	국제신문	전광수 회장 “3000만 원 줄게”...편법증여 의혹 보도 무마 청탁(4면)
12/22	KBS부산	전봉민 의원 탈당...“엄정 수사 촉구”(리포팅)
12/22	부산MBC	전봉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자진 탈당(단신)
12/22	KNN	‘재산형성 의혹’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탈당(단신)
12/23	부산일보	전봉민에 맹공 퍼붓는 민주당 “의원직 내놔라”(5면)
12/23	부산일보	[사설] 전봉민 의원 부자 비위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라(23면)
12/23	국제신문	부 편법증여로 재산 증식 의혹..전봉민 국민의힘 탈당(5면)
12/24	부산일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도덕성 검증’ 변수(6면)
12/24	국제신문	‘전봉민 사건’ 부산시장 보선판 흔들 핫이슈 부상(3면)
12/24	KBS부산	국회의원 모친이 해변에 초고층 추진...특혜 우려(리포팅)
12/25	국제신문	“언론 입막음” 전광수 회장, 수영문화원장 부적절(6면)
12/28	국제신문	앞서 달리는 야당, 추월 노리는 여당(1면)

표 1 12/21~12/28 ‘전봉민 의원’ 관련 지역언론 보도 목록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전광수 회장의 '3000만 원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올려 강조했는데요. 전봉민 의원 일가에 초점 맞춰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전했지만, 구조적 문제인 인허가 심의위원 구성, 고위공무원과 지역토호세력 유착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제신문은 전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이진종합건설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3일부터는 재산형성 과정 의혹 전달 이외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지역신문은 전봉민 의원 일가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해당 의혹으로 인한 지역정치권의 지각변동 그중에서도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부산일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도덕성 검증' 변수>(12/24)와 국제신문 <'전봉민 사건' 부산시장 보선판 흔들 핫이슈 부상>(12/24)은 '전봉민 의원 사건'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의 조사단을 꾸린 것을 두고, 부산일보는 '불리한 현 선거 구도를 부자 정당, 비리 정당과의 대결 프레임으로 전환 가능성', 국제신문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부산 보궐선거판의 국면 전환용'이라 해석하며 제기된 의혹보다는 '전봉민 의원 사건'이 불러올 파장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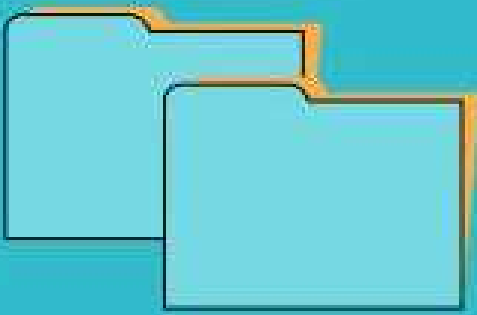
그러면서 부산일보는 사설 <전봉민 의원 부자 비위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라>(12/23)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힘이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며 그게 공당의 자세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봉민 의원 사건'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KBS부산의 <국회의원 모친이 해변에 초고층 추진...특혜 우려>(12/24)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부산의 또 다른 건설사 출신 정치인, 이주환 의원 일가의 송도 해안가 개발 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전봉민 의원의 재산형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슈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다른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이번 의혹이 비단 특정 정치인 일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짚은 정치 권력 감시에 충실한 보도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전봉민 의원'에 대한 지역언론과 전국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지역언론이 지역 정치인에 대한 감시 역할에 소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9월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재산 차액 현황'에 따르면 지역 의원 중 4명이나 당선 전후 재산이 10억 이상 차이 난다고 밝혀졌음에도 이를 전한 지역의 기사는 <총선 전후 재산 '10억 이상 증가'... "부산 4명">(부산MBC, 9/14)가 유일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 이진베이시티에 대한 특혜와 전봉민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나 이를 보도한 지역언론은 없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송도 이진더베이 인허가 과정 중 민간기업의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 민간위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봉민 의원 일가의 문제에서 나아가 부산시의 구조적, 관행적 문제 등 추가로 짚어야 할 과제를 드러낸 건데요. 그런데도 지역언론은 ‘전봉민 의원 사건’이 미칠 보궐선거 셈법에만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심층 취재로 의혹을 밝혀 나가는 주체로써의 언론을 기대합니다.

별기편
도보도.
이
프로그램
양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0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발표 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지역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 언론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1차적으로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별합니다. 선별된 후보작들은 부산민언련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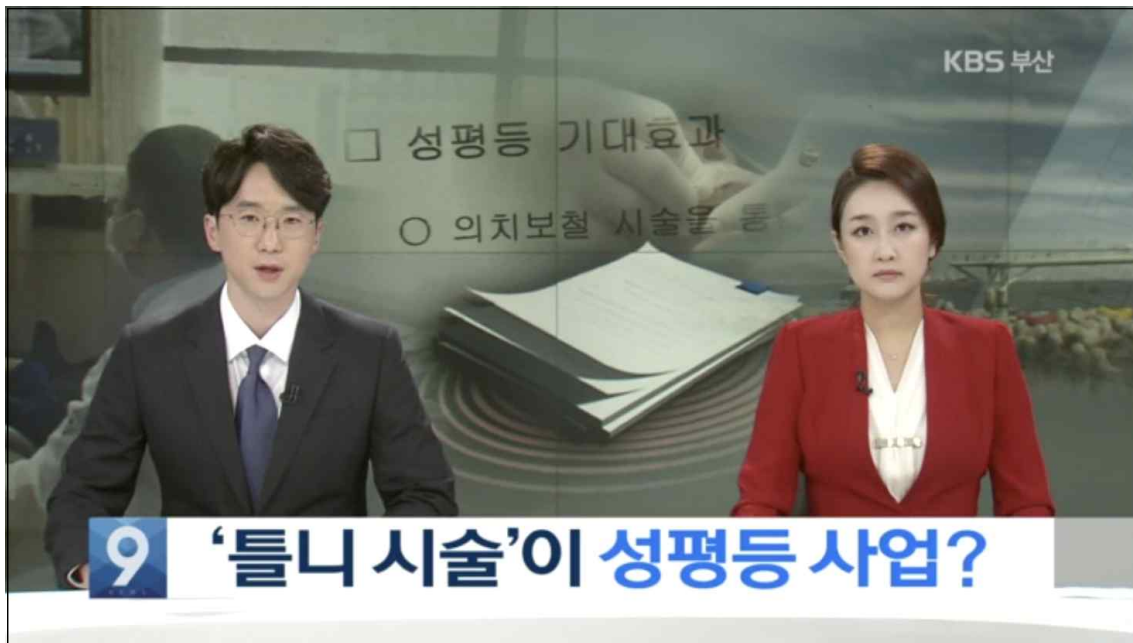
1년에 한 번 시상하는 부산민주언론상으로는 다 담지 못했던 부산 지역 언론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조명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겨 기쁩니다.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은 최소 1편에서 최대 3편을 선정합니다. 기획·특집 기사가 아닌 단 1건의 기사라도 꼭 필요한 목소리에 주목해 지역 사회를 밝힌 보도라면 더 많은 부산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 가치를 쌓아나가하고자 합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부산지역 언론의 보도·프로그램 중 지역에서 다시 회자하고 공유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선정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최종적으로 선정한 2020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KBS부산 <틀니 시술이 성평등 사업?> 외 6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비판하고 원인 분석에 해결책 제시까지,
솔루션 저널리즘 무엇인지 보여준 KBS부산 성 인지 예산 점검 연속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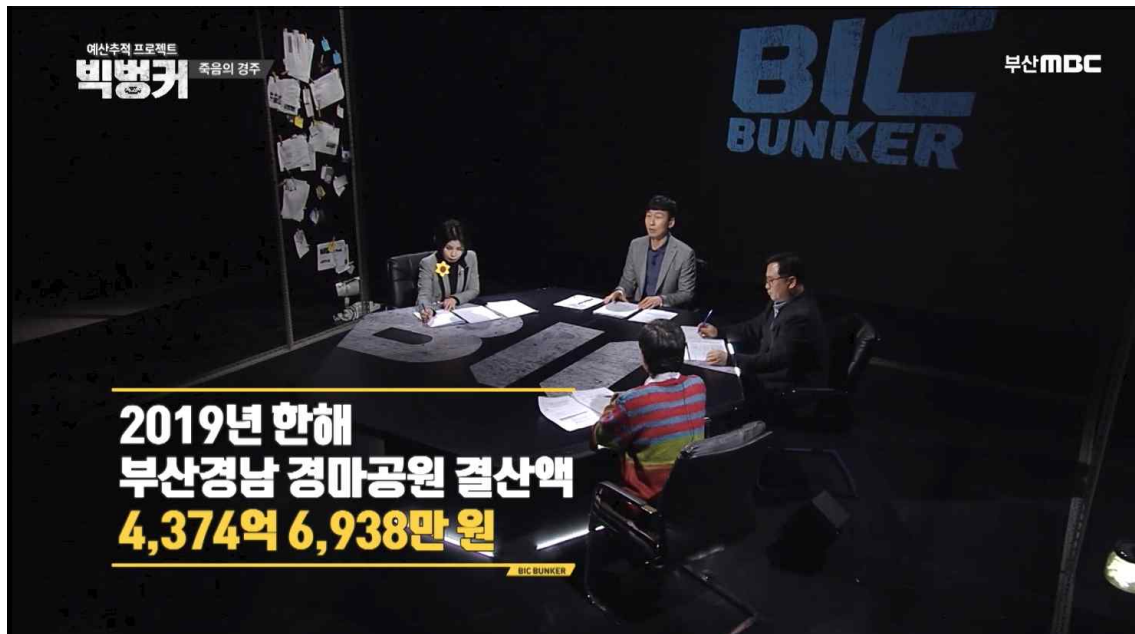


KBS부산 뉴스9는 1월 8일부터 16일까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성 인지 예산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상의 문제를 7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펴기 위해 마련된 '성 인지 예산'이 오히려 성편견을 심화시키거나 성차별을 부추기는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엉뚱한 곳에 집행되고 있던 성 인지 예산.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성 인지 예산 전수조사를 통해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문제의 원인을 짚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타 시도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솔루션을 제시한 KBS부산 뉴스9의 <틀니 시술이 성평등 사업?> 외 6건을 2020년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부산MBC 빅벙커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 #1,2>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수익 분배구조 통해
극단적인 경쟁체제와 고용 불안정성 드러낸 부산MBC 빅벙커



부산MBC 빅벙커는 2월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편을 방영했습니다. 평소 방식인 예산 낭비에 대한 분석보다는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 이래 7차례나 발생한 자살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운영구조, 고용구조, 수입체계, 상금 분배 방식 등이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문중원 기수가 유언장을 통해 남긴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불안정한 임금구조와 종속적인 고용구조를 하나씩 짚어나가며 현장 인터뷰, 패널 발언,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상세히 드러낸 부산MBC 빅벙커의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편을 통해 민간기업체와 다른, 공공기업체가 지향해야 할 우리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살을 택한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해결방안까지 제시한 부산MBC 빅벙커의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 국제신문 신년기획 '020로 부산을 따뜻하게'
<부산에 오픈마켓 정책 없다> 외 11건

부산지역 자영업자 요구 선제적으로 파악해
시 차원의 정책 필요성 제기한 국제신문 신년기획



국제신문은 1월 2일부터 16일까지 '020로 부산을 따뜻하게' 신년기획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는 당위적 명제만 많이 등장하는 중에 부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오픈마켓을 만들고 키워야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 기획입니다.

기사는 부산지역의 중소상공인도 온라인 판매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전 과정을 혼자서 하긴 힘든 현실을 전달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오징어포와 미역을 평생 팔아온 60대 상인이 인터넷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라는 구체적 사례 제시 이후, 충청북도의 '원스톱 서비스'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1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부터 국제신문과 공동 콘텐츠 협약을 맺은 KNN에서는 망미시장의 기름집이 온라인마켓을 열어 매출이 증대한 사례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인 <'020로 부산을 따뜻하게'>을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선정하진 못했지만 꼭 언급하고 싶은 좋은 보도

1분기엔 최종적으로 선정하진 못했지만 좋은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KBS 부산 뉴스9의 <‘자회사 추진단’ 구성... 지침 위반 논란>(2/3), <‘자회사 추진단’... 논란 일자 단어 삭제>(2/4)은 다른 지역 언론은 보도하지 않은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추진’에 주목해 절차상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KNN 뉴스아이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KNN은 <부족한 마스크, 노약자·이주노동자 엄두 못 내>(3/3)는 마스크 필수 시대에 소외되는 노약자,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하고 지자체를 통한 직접 배부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이 ‘지역차가 너무 커’>(3/4)와 <의료취약지로 본 지역별 불평등>(3/19)은 특히 서부경남 지역이 의료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어느 지역 주민이든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잘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뽕 뚫린 운동장에 드론 방역, 효과 있나?>(3/6)에서는 효과없다고 팩트체크를 하면서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해서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경쟁을 줄여줬습니다. 전시행정이 불필요한 자원낭비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 리포트로는 <지자체 마스크 배부, 부익부 빈익빈?>(3/22)도 있습니다. <끝>

■ 좋은 보도 다시보기

[\[집중1\] 틀니 시술이 성평등 사업?\(1/8\)](#)

[\[집중2\] 한 해 1조 원...집행은 제멋대로\(1/8\)](#)

[오히려 성평등에 역행\(1/9\)](#)

[\[성 인지 예산4\] “행안부 지침 따랐다”...실체는 땀판\(1/10\)](#)

[무늬만 ‘자문’...결국 ‘실적 경쟁’\(1/13\)](#)

[‘심의’도입했지만...현장은 외면\(1/15\)](#)

[‘성 인지 예산’이렇게...제도 마련 시급\(1/16\)](#)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 #1 \(2/4\)](#)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 #2 \(2/11\)](#)

[2020...020로 따뜻하게 <1-1> 부산에 오픈마켓 정책 없다\(1/2\)](#)

[2020...020로 따뜻하게 <1-2> 자갈치시장에 020가 필요한 이유\(1/9\)](#)

[2020...020로 따뜻하게 <1-3> 오픈마켓이 활성화된 도시현장\(1/16\)](#)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0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역의 좋은보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분기별로 좋은 보도, 프로그램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작 후보작 중에서 부산민언련 운영위원 심사를 거쳐 최소 1편에서 최대 3편을 고릅니다. 1년에 한 번 시상하는 <부산민주언론상>으로는 지역 언론의 좋은 보도들을 다 조명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기획, 특집이 아닌 단 한 건의 기사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목소리에 주목해 지역사회를 밝힌 보도라면 더 많은 부산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지역 언론의 보도, 프로그램 중 다시 한번 회자되고 공유했으면 하는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 KBS부산 뉴스9, <광주항쟁 40주년…부산서 꽃피운 5.18정신> 외 1건

현대사에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사건
놓치지 않고 현재적 의미 조명한 KBS부산 <뉴스9>



KBS부산 <<뉴스9>>이 보도한 <광주항쟁 40주년…부산서 꽃피운 5.18정신>과 <“개성공단 폐쇄는 안 돼…정부가 나서야”>는 5.18과 6.15라는 현대사의 주요 계기를 놓치지 않고 보도하면서 현재적 의미를 짚었습니다.

<광주항쟁 40주년…부산서 꽃피운 5.18정신>은 방송 뉴스로는 이례적으로 한 리포트에 6분 16초를 할애했습니다. 광주항쟁 당시 자료화면과 부산에서 5.18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주요 인물- 박승원 신부, 김양우 전 국제신문 기자, 노재열 당시 부산대 학생, 최준영 부산양서협동조합 재건준비위원장, 차성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의 인터뷰를 엮어 한 편의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했습니다. 리포트는 당시 ‘참다못한 시민들이 KBS광주와 광주MBC를 불태웠다’고 언급하고 1980년 5월 27일 KBS 9시 뉴스 화면을 내보내어서 언론이 민중의 편에 서지 못했음을 자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부산가톨릭센터에서 열린 광주 사진전을 보여주며 광주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연결한 부산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5.18과 같이 현대사에서 중요했던 사건들은 비단 그 지역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KBS부산은 광주와 부산을 연결해 부산의 민주주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전국적 이슈를 지역뉴스로 잘 담아낸 사례로 꼽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안 돼…정부가 나서야”>는 한창 남북 관계가 악화돼 대결 국면을 강조하는 뉴스가 많았던 시기에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환기하며 남북 화해 무드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리포트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 중 80%가 경영 악화로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5.24조치 해제를 요구한다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KBS부산은 타 방송사가 보도하지 않거나 행사 개최 소식 정도만 단신으로 전한 5.18 광주항쟁 40주년과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놓치지 않고 그날의 주요한 리포트로 전하면서 지역 역사를 기록하고 의미를 평가해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KBS부산 보도목록]

<광주항쟁 40주년…부산서 꽃피운 5·18 정신>(2020.5.18.)

<“개성공단 폐쇄는 안 돼…정부가 나서야”>(2020.6.15.)

-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 원’ 3부작 중 1,2부

예산 추적에서 출발해
노동자의 삶의 질 주목한 부산MBC <빅벙커>



대한민국은 매일 일터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약 300명이 다치는 산재 공화국입니다. 부산MBC <빅벙커>가 방송한 ‘산재 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 원’은 총 3부작으로 산업재해 피해는 노동자가 감당하고 기업은 오히려 세금으로 보험료 감면을 받는 부당한 현실을 짚었습니다.

<빅벙커>는 포스코건설 엘시티 추락사고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아르곤 가스 질식사 사고 이후를 추적했는데요,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 산재보험료를 각각 94억 원, 10억 원 감면받았음을 밝혔습니다. 하청 기업 산재는 원청의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산재보험료 납부를 기업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이윤을 얻는 만큼 책임을 지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오히려 노동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빅벙커>는 산재 사고로 작년에만 건강보험료 256억 47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가 나도 유니폼을 벗기고 사복으로 갈아입혀 치료받게 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고발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노동부 특별감독과 부산시의 안일한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빅벙커> 패널들은 원청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산재 사고 소식은 잊을만하면 보도됩니다. 하지만 단신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지역 문제로 와닿지는 못했습니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 원>은 우리 지역 사업장의 산재 사고를 취재하고 기업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실태를 산업재해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세금’ 추적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는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부산MBC 보도목록]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 원>(1)(2020.6.11.)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 원>(2)(2020.6.25.)

■ 국제신문, <물금취수장서 발암물질 다이옥산 검출>등 연속보도

부산 '먹는 물' 문제 꾸준히 추적 보도한 국제신문



지난 5월 물금취수장 부근 낙동강 물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이 기준치 160배 농도로 검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은 양산시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사실을 발표한 5월 20일 이후 6월까지 낙동강 물 문제를 꾸준히 추적했습니다. 1면에 올린 횟수가 8번, 1면 머릿기사로 다룬 횟수가 6번에 해당할 만큼 지역 언론 중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무단 방류한 업체 적발, 당국의 늑장 대응, 물금취수장 근처에서 다이옥산이 검출된 이유, 양산정수장의 유사한 사고를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면 현행 제도의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도 제안했습니다. 낙동강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부산시상수도본부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책을 논의하는데 실무 연관성은 덜하다고 해도 상급기관인 부산시 당국과 협의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고, 양산시 경우 정수과 인력이 정원보다 부족하고 특히 전문직인 연구사가 잦은 전보로 업무 노하우를 향상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민·관·정은 낙동강 오염물질 검출 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해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지역 언론이 끈질기게 감시하고 알렸기에 실제 개선책을 내도록 견인했다

고 평가합니다. 먹는 물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사고를 그냥 넘기지 않고 관계 기관, 주민, 시민단체의 입장과 대응을 성실하게 담아 변화를 끌어낸 <물금취수장서 발암물질 다이옥산 검출>등 연속보도를 좋은 보도로 꼽습니다.

[국제신문 보도목록]

- <물금취수장서 발암물질 다이옥산 검출>(2020.5.21.)
- <부산시, 물금취수장 다이옥산 검출 17일간 쉬쉬>(2020.5.22.)
- <환경단체 “낙동강 하류서도 다이옥산 검출이라니…충격”>(2020.5.22.)
- <다이옥산, 양산 산막산단서 무단배출 가능성>(2020.5.25.)
- <상수도본부, 다이옥산 검출 부산시에 보고조차 안했다>(2020.5.25.)
- <전수조사 중에도 낙동강 다이옥산 계속 검출>(2020.5.27.)
- <현장조사서 배출원 못 찾아…“미등록 공장서 방류 가능성도”>(2020.5.27.)
- <양산시민 먹는 수돗물서도 다이옥산>(2020.5.28.)
- <환경단체 “양산하수처리장 유입수 다이옥산 수치 밝혀라”>(2020.5.28.)
- <당국 늑장대처에 원인규명 지연…시민 “밥 지을 때마다 분통”>(2020.5.28.)
- <다이옥산 배출 의심공장 찾았다>(2020.6.1.)
- <“낙동강 다이옥산, 상류 보 방류량 감소 탓 물금취수장까지 역류”>(2020.6.1.)
- <낙동강 다이옥산 무단 배출 업체 1곳 가동중단>(2020.6.2.)
- <“낙동강 수질센터 물금에 설치될” 대정부 촉구>(2020.6.3.)
- <부산시, 다이옥산 등 6종 미량 검출도 공개 의무화 추진>(2020.6.3.)
- <‘물 문제’ 부산 민·관·정 전방위 대응>(2020.6.4.)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0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그리고 연이은 태풍까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재난에 각종 기후 재난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3분기(7·8·9월)는 부산시민들에게 더욱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일수록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역의 좋은 보도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에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빛났던 보도들에 주목했습니다.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 <KBS부산> 뉴스9, <코로나19 최전선 ‘부산의료원’ 고군분투> 외 4건
- <부산MBC> 유튜브 재난방송, <태풍 마이삭 접근…실시간 부산은?> 외 1건
- <부산일보>, <신고리원전 3·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설비 침수> 외 2건

■ <KBS부산 뉴스9>, <코로나19 최전선 ‘부산의료원’ 고군분투> 외 4건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
역학조사관에서 공공의료원까지 폭넓게 짚어본 <KBS부산>



<KBS부산>의 <뉴스9>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산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향후 과제를 조명했습니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일이었던 지난 9월 1일에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역학 조사관 의무 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KBS부산>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확진자 전체의 83%가 ‘부산의료원’의 도움으로 완치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활약이 컸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 의료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부산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돌아보게도 합니다.

그간 공공의료와 관련한 논의는 의료 기관 확충과 예산 확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물론 중요한 논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BS부산>의 이번 기획은 의료기관 외에 공공보건疫료를 구성하고 있는 인프라를 돌아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심 환자 검체 분석을 맡은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6명밖에 되지 않는 현실, ‘총액 인건비 제도’에 가로막힌 전문 역학 조사관 채용, 음압 병상 인프라 부실, 부산의료원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부산 공공의료체계의 열악함을 드러낸 <KBS부산>의 <공공보건의료 기획>을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보도 목록>

*<코로나19 최전선 ‘부산의료원’ 고군분투>(KBS부산, 7/15, 노준철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5087>

*<‘선방’했는데…허약한 부산 공공의료 민낯>(KBS부산, 7/16, 노준철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6038>

*<세금 먹는 하마?…340만 도시에 딱 1곳 ‘초라’>(KBS부산, 7/17, 노준철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6912>

*<하부조직만 ‘고통 감내’…“공공의료 재정립해야”>(KBS부산, 7/20, 노준철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8476>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기초단체 ‘돌려막기’>(KBS부산, 9/1, 노준철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0322>

-

<심사위원 평가의 말!말!말!>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지역 언론이 공공의료를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KBS부산 노준철 기자가 이를 깊게 파고 들어줘서 꼭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부산 지역 공공의료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낱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역학조사관 배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완성도 있는 보도였다고 평가합니다.”

“기후재난도 있지만 질병재난이라는 큰 틀에서 가장 영양가 있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확인한, 기획력이 돋보입니다.”

■ <부산MBC 유튜브 재난방송>, <태풍 마이삭 접근…실시간 부산은?> 외 1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지상파 편성권 한계 극복한 <부산MBC>
새로운 방법으로 재난방송 접근했다



9월 3일과 7일, 두 차례 큰 태풍이 부산을 덮쳤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부산 최근접은 새벽 3시였고, 태풍 ‘하이선’은 새벽부터 강한 비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편성으로는 부산이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새벽 시간대에 태풍 대응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부산MBC>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부산MBC>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한 재난방송은 지역민과의 ‘소통’, ‘지역 밀착’이 돋보였는데요. 교통정보센터의 CCTV와 부산 전역에서 시민이 제보한 영상을 토대로 태풍의 영향권 아래 놓인 부산 곳곳의 여러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또 부산시민과의 실시간 댓글을 통해 바람의 세기, 주변 피해 정도 등을 교환하며 한층 지역 밀착적인 정보를 생산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 전역의 지역민이 남긴 댓글 하나하나 태풍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돕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역민에겐 큰 힘이 된 건데요. <부산MBC>의 유튜브 스트리밍 재난방송은 거센 비바람 소리로 밤잠 설치고 있는 지역민들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부산MBC>의 시도는 시간적 제약을 탈피했다는 데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삭’ 때에는 3시간 53분간, ‘하이선’ 때에는 6시간 52분간 재난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태풍을 예보·특보하는 데서 벗어나, 태풍의 전체 흐름을 부산 시민과 함께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소통을 통해 지역민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가져온 <부산MBC>의 새로운 시도, 유튜브 스트리밍 재난방송을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보도 목록>

*<태풍 마이삭 접근...실시간 부산은?/실시간 시청자들의 제보로 함께하는 재난방송>(부산MBC, 9/2~3)

<https://www.youtube.com/watch?v=4lzFzg-QFHk&t=56s>

*<태풍 10호 하이선 접근...실시간 부산은?/실시간 시청자들의 제보로 함께하는 재난방송>(부산MBC, 9/6~7)

<https://www.youtube.com/watch?v=1VvHQ2GCLUM&t=6184s>

-

<심사위원 평가의 말!말!말!>

“참신했습니다. 태풍 속에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데 지상파가 제일 빨리 끝나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은 계속하고 있는데 제일 정보를 얻고 싶은 지상파는 안 하더라고요. 그동안 친구들 페이스북 보면서 태풍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이번 <부산MBC>의 유튜브 시도는 소통의 노력에 정보성도 가미하고 있어 좋았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좋긴 좋은데, 한 아나운서가 심야 시간에 노동한 거잖아요.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단발성 시도에 머무르는 것 아닐까 하는, 노동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보도인 건 분명합니다.”

“지상파는 유튜브를 보조적 도구로 생각하는데, 기존 편성을 자르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방송의 역할로 시민과의 소통을 택한 점이 돋보입니다. 재난방송이 정보를 유용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지역민에게 안전감, 안정감을 주는 것도 지역 방송의 역할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 부산일보 <신고리원전 3·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설비 침수> 외 2건

재난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 호우 당시 원전 침수 사실 드러낸 <부산일보>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가고 한 달 뒤, <부산일보> 1면엔 <신고리 3·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설비 침수>(8/25, 황석하·권승혁·이승훈 기자)가 실렸습니다. 7월 폭우 당시 신고리 3·4호기 송전설비 일부가 침수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기사는 원전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5면에서는 원전 당국이 침수를 시인한 장소 이외에도 발전소 일부에 대한 침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문가 인터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기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에도 ‘해일’이 있었다며, ‘물’은 원전 운영의 가장 큰 위협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일보>가 입수한 ‘신고리 3호기 제2차 정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 격납 건물 벽에서 2개의 공극(구멍)이 확인됐다고 적시돼 있었는데요. 최악의 경우 해당 구멍으로 방사성 물질까지 새 나갈 수 있어 원전 안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달 전 폭우로 인한 원전 침수는 부산일보의 보도로 수면 위

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보도 목록>

*<신고리 3·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설비 침수>(8/25, 1면, 황석하·권승혁·이승훈 기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2419240677525>

*<‘후쿠시마’ 후 안전 공언하고도 침수·누수, ‘명품 원전’ 맞나>(8/25, 5면, 황석하·권승혁·이승훈 기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2419033005901>

*<신고리 3호기 격납 건물 벽에 생긴 2개 구멍, 안전도 ‘구멍’?>(8/25, 5면, 황석하 기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2419032755105>

-

<심사위원 평가의 말!말!말!>

“신고리 원전 안전 문제 보도, 계속 연속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전 문제는 보도가 되다가도 계속 무마되고 무마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부산일보가 7월에 발생한 문제를 8월에 묻고 늘어져 찾아내니까 이걸 다른 언론도 받아서 이슈화시키더라고요. 부산일보의 영향이 참 컸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원전의 안전 문제를 공론화시킨 <부산일보>의 보도 참 좋았습니다.”

“원전 문제는 부산지역 안전의 최전방에 놓여있는 문제입니다. 지역 언론이 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료까지 입수해 건물 벽에 생긴 구멍에도 문제를 제기한 점은 참 날카로웠습니다. 꼭 필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 이상, 전국언론에선 보도하지 않습니다. 원전이 주요 광고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일보>가 위기 상황을 체크해서 한 달 뒤라도 보도를 했고, 원전 안전을 점검했다는 걸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문제는 지역 언론 역할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한 <부산일보>의 원전 관련 보도를 추천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0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지역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10~12월)에는 국제신문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KNN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 부산MBC 빅벙커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을 선정했습니다.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작은 ‘공존’이라는 가치로 지역사회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고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자연은 물론 인간에게도 위험한 일임을 확인시켜주는 보도와 프로그램에서 ‘공존’과 ‘지역언론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국제신문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은 사건·사고 소식의 피해자가 아닌 이상 등장하지 않는 아동, 그중에서도 주거빈곤 아동에 주목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제안했습니다.

KNN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은 낙동강하굿둑 준공 이후 낙동강을 떠나야만 했던 생물에 주목해 이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MBC 빅벙커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4대강 사업과 낙동강의 연관성에 주목했는데요. 상습 침수와 수질 악화에 따른 식수 공급 중단 등의 문제는 흐르는 강이야말로 ‘공존’의 주요 조건임을 환기했습니다.

■ 국제신문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1> 사례로 본 주거빈곤 실태> 외 5건

부산지역 주거빈곤 아동 5만 명에 주목한 국제신문
최저주거기준을 말한다



▲ 국제신문, 2020년 9월 23일, 4,5면

국제신문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29일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기획 기사를 6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2019년 시즌1에서는 10대의 빈곤에 초점 맞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방안을 조명했다면 시즌2에서는 ‘주거’를 키워드로 삼아 의식주에서 ‘주’가 보장받지 못할 때, 더욱이 그 주체가 아동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기획 기사는 산복도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주거환경을 사례로 제시하며 시작하는데요. 폭우,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난의 흔적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아동의 삶과 서·동구 아동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주거빈곤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최소 몇백 명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말했습니다.

이어 기사는 주거빈곤 사례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개념과 연결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 부산시가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드

러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 부산지역 아동 5만 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쩔 수 없는 가난의 굴레가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을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조례 발의 등 제도권 내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저소득 가정의 주거는 산복도로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교통약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게 이러한 환경은 더욱 가혹했을 겁니다. 주거빈곤의 원인을 미흡한 사회안전망과 맞춤형 주거제도가 없다는데 초점을 맞춰 필요한 정책까지 제시한 국제신문의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좋은 기사 목록>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1> 사례로 본 주거빈곤 실태(9/2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923.22004007430>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2> 서·동구 아동 553명 설문조사(9/2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923.22005007436&kid=k28475>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3> 주거빈곤 왜 주목해야 하나(10/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007.22008001196&kid=k28475>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4> 빈곤가정 지원의 제도적 허점(10/1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014.22006002308&kid=k28475>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5> 다른 도시 주거정책 살펴보니(10/2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021.22008005411&kid=k28475>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6>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10/29)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029.22006007778&kid=k28475>

■ KNN 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

낙동강의 1987년, 2012년 그리고 2020년 조명한 KNN
가치 전환의 필요성을 말하다



KNN 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12/17)은 1987년 준공된 낙동강하굿둑으로 강과 바다가 단절되면서 낙동강에서 사라졌던 생물에 주목합니다. 앞서 KNN 뉴스아이는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낙동강 하구 수문 개방 이후 돌아온 생명종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는데요. 해당 다큐멘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있지만 2020년의 변화만이 아닌 1987년, 2012년 낙동강 생명들에게 닥쳤던 변화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어민의 그물에 가득한 기생충에 감염된 강준치,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새섬매자기 면적, 악취가 진동하는 펄까지. 인간의 더 윤택한 삶을 위해 준공된 하굿둑 주변으로 택지가 조성되자 공장과 아파트가 들어섰고, 부산과 경남이 연결되면서 대형사업이 집중됐습니다. 그 영향은 낙동강과 함께 살아온 부산시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KNN 취재팀은 수자원공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하굿둑 수문개방 실험을 했습니다. 제한적으로나마 강과 바다를 연결해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려 한 건데요. 이 실험을 통해 33년 만에 청멸치떼, 전갱이떼, 연어 등 해수어종이 돌아왔고 강이 되살아나는 과정이 KN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보 개방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에서 환경으로, 환경에서 생태로의 가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KNN 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좋은 기사·프로그램 목록>

<되살아난 강, '33년 만에 연어 돌아왔다'>(10/20)

<http://www.knn.co.kr/216127>

<'수문 열었더니' 12년 만에 흑두루미 돌아와>(10/26)

<http://www.knn.co.kr/216551>

<기적같은 귀환, 자연 산란도 확인>(10/27)

<http://www.knn.co.kr/216616>

<낙동강 수문 열자 '생태계 살아났다'>(11/29)

<http://www.knn.co.kr/218459>

<기적의 귀환 연어, 자연 수정도 성공>(11/30)

<http://www.knn.co.kr/218520>

KNN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12/17)

http://www.knn.co.kr/219555?bf_cat=76

■ 부산MBC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

4대강 사업의 지역성과 현재성 조명을 통해
지금 우리의 문제임을 말하다



부산MBC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는 지난해 10월 15일과 22일에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 1, 2편을 방영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와 4대강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4대강 이슈에 현재성을 부여하며 시작하는데요. 정부의 세금 23조 675억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부산시민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조명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녹조가 거의 없었던 낙동강 중상류에 녹조가 위험할 정도로 발생한다는 것과 2018년에는 심각한 녹조로 부산시민의 식수가 끊길 뻔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증거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의 경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5개 생태공원인 삼락, 을숙도, 맥도, 화명, 대저 생태공원은 비가 오면 침수될 수밖에 없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침수 피해복구 비용만 약 42억 원이 들었음을 알렸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지관리비가 약 1,163억 원이 들었다는 정보도 전달해 4대강 사업이 부산시민에게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이번 2부작은 시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의 구멍을 찾아

내 개선과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고 강조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막과 패널의 대화식 쉬운 설명으로 메시지 전달력을 높인 부산MBC 빅병커의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을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목록>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 1부>(10/15)

<https://www.youtube.com/watch?v=W9X90UQKNsQ&t=816s>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 2부>(10/22)

<https://www.youtube.com/watch?v=Ji46VLE5CPw&t=15s>

■ 2020년 4분기 좋은보도·프로그램 후보작 약평

부산일보 디지털 청년기획 <나는 ‘대한민국 고졸’이다>는 ‘고졸’을 키워드로 6명의 인사를 만났습니다. 앞선 3편의 인터뷰는 ‘고졸’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 3명이었는데요. 대학을 자퇴하던 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공무원, 그때로 돌아간다면 졸업을 하겠다는 프리랜서 그리고 일반 공장이 아닌 자신의 특기인 영어를 살려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업준비생의 목소리는 같은 ‘고졸’일지라도 각자가 마주한 사회의 모습에 따라 각기 다른 학력의 벽을 마주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독일교육 사례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를 조명한 기획이었습니다.

국제신문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10월의 트라우마>는 2018년부터 시작된 국제신문의 기획 기사입니다. 2020년의 키워드는 ‘트라우마’로 국가기념일 지정 및 특별법 제정 후에도 여전히 80년 10월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조명했습니다. 대학생, 시민, 해직언론인, 노동자의 고문 후유증과 사회에서의 억압, 고충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도 ‘트라우마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NN <지반침하에 근로자 1/3 근골격계 질환> 외 2건은 신항 5부두 지반침하로 인한 항만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조명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5부두의 경우 외국지역 민자부두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건데요. 신항의 다른 부두들도 비슷한 상황임을 밝혀, 노동자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항만당국의 안전관리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KBS부산 <복천고분 병풍 아파트 심의 통과…‘불법 의혹’> 외 4건은 동래구의 국가사적 복천고분 주위에 이례적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이 허가된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해

당 보도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문화재위원 심의 과정에서 규정 위반, 회의록 조작, 심의위원 상대 협박 등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짚었는데요. 해당 보도 이후 부산시를 대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부산시의회에서도 특위가 꾸려지는 등 지역사회에 반향이 일었습니다.

부산MBC <연말 기획 2020 뉴스공감 7선>은 정·재계의 이슈와 시선으로 2020년을 정리한 게 아니라, 시청자가 꼽은 다양한 이슈를 시청자의 목소리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보통의 뉴스인터뷰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사건의 목격자나 이슈에 대한 감흥 위주로 갈무리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부산MBC의 연말기획에서는 시민을 뉴스의 주체로 내세워 눈에 띄었습니다. 나아가 각 사안의 현황을 전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부산MBC 빅병커 <감시자 없는 3,418억>은 학교 급식 거래시스템 'eaT'의 허점을 이용해 납품업체 간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효정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특별 예산 감시위원으로 출연해 부정행위 관행을 꼬집었고 제보자를 통해 불법 담합 관련 금액이 200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급식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통해 적극적 감독이 필요함을 환기했습니다.